

GLOBAL RESEARCH INSTITUTE

세지연 국제학총서 | vol.1

아세안과의 국제협력, 현재와 미래

2025
·
02

안북스

ARTICLES

제1장.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 권의현(고려대), 강문성(고려대)

제2장. 메콩강 유역 에너지 무역: 메콩 전력망이 메콩강 유역 수력 발전 개발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신나연(고려대), 이승호(고려대)

제3장: ASEAN에서 디지털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 Keriya Run(고려대), 신경림(고려대)

제4장. 디지털 공공외교를 활용한 필리핀 국가 이미지 제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례 연구

· 윤선우(고려대), 임시정(고려대)

제5장. 해외 원조가 제3국 국민들 사이에서 공여국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가? 세계 문화유산 복원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은지(고려대), 임시정(고려대)

제6장. 2017년 군사적 탄압 이후 로힝야 상황에 대한 상이한 대응: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의 비교 분석

· 정유정(고려대)



세지연 국제학총서 | vol.1

아세안과의 국제협력, 현재와 미래

2025. 02



안북스

세지연 국제학총서 | vol.1

아세안과의 국제협력, 현재와 미래

2025.02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세계지역연구소

집필진(가나다순)

- 머리말
한정선(고려대)
- 1장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권의현(고려대), 강문성(고려대)
- 2장 광역메콩유역의 에너지 무역: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 관련 메콩 유역 전력망 영향평가
신나연(고려대), 이승호(고려대)
- 3장 ASEAN에서 디지털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Keriyu Run(고려대), 신경림(고려대)
- 4장 디지털 공공외교를 활용한 필리핀 국가 이미지 제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례 연구
윤선우(고려대), 임시정(고려대)
- 5장 해외 원조가 제3국 국민들 사이에서 공여국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가? 세계 문화유산 복원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김은지(고려대), 임시정(고려대)
- 6장 2017년 군사적 탄압 이후 로힝야 상황에 대한 상이한 대응: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의 비교 분석
정유정(고려대)

머리말

아세안과의 국제협력, 현재와 미래

본서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세계지역연구소가 발행하는 세지연국제학총서의 첫 번째 책이다. 세지연국제학총서의 첫 시작은 국제대학원의 우수한 교수진들과 열정 넘치는 대학원생들 간의 연구협업 결과를 기록하고 그 학문적 성과를 보다 널리 나누기 위해서, 교수진과 대학원생 간 공저 혹은 대학원생의 단독 연구를 엮은 편집서로 기획되었다. 또한, 연구의 확장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로 기출된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묶었다.

본서는 아세안의 경제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다. 동남아시아는 지리적으로는 멀지 않은 곳이나, 아직은 이 지역과 한국의 교류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근에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에 대한 역사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지역과 한국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냉전의 종전과 함께 상품은 물론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와 한국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대해 더욱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지연국제학총서시리즈의 시작을 여는 첫 책으로 가장 적절한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본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는 경제협력,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국제원조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1부는 국가 간 경제협력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한다. 1장은 강문성 교수와 권의현 석사생의 공동연구로,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 회원국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경제협력의 구체적 효과를 밝히고 있다. 2장에서 이승호 교수와 신나연 석사생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을 다루고 있다.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 어떻게 메콩 유역 전력망을 구축하고 수력발전을 통한 에너지 무역을 통해 사회경제적 이익을 달성했는지를 탐구한다. 1부의 이러한 두 개 연구는 경제협력이 각국의 경제적 번영과 상호 의존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2부는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와 외교에 미친 영향을 다룬다. 3장은 신경림 교수와 Keriya Run 석사생의 공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 보급이 아세안의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기술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을 조명한다. 4장에서 임시정 교수와 윤선우 석사생은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디지털 공공외교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탐구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디지털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역할을 넘어 외교와 문화적 차원의 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부는 국제원조가 지역 안정과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5장에서 임시정 교수와 김은지 석사생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지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문화유산 ODA 사례를 통해 국제원조가 공여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 연구는 국제원조가 단순히 수혜국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정유정 석사생은 로힝야족 지원 문제를 통해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 두 국가가 어떻게 상이한 접근 방식을 취했는지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국제 정치의 교차점을 재구성하고 있다.

본서는 이와 같이 경제협력, 정보통신기술, 국제원조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아세안국가들의 경제와 외교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각 장에서 다루는 연구들은 실제 데이터와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아세안을 연구하는 한국인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이고도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에 관심을 가진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모두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국제학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학술결과물임을 밝힌다.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4단계 BK21 국제학 교육연구단의 강문성 전 단장과 이승호 현 단장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기여해 주신 저자들과 번역 및 편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선경 교수와 이수현 박사과정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본 번역서가 빛을 볼 수 있었다.

한정선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세계지역연구소장)

Contents

머리말	03
-----------	----

1부 경제협력

1장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06
권의현, 강문성	
2장 광역메콩유역의 에너지 무역: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 관련 메콩 유역 전력망 영향평가	28
신나연, 이승호	

2부 정보통신기술

3장 ASEAN에서 디지털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49
Keriya Run, 신경림	
4장 디지털 공공외교를 활용한 필리핀 국가 이미지 제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례 연구	72
윤선우, 임시정	

3부 국제원조

5장 해외 원조가 제3국 국민들 사이에서 공여국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가? 세계 문화유산 복원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100
김은지, 임시정	
6장 2017년 군사적 탄압 이후 로힝야 상황에 대한 상이한 대응 :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의 비교 분석	127
정유정	

제1장.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¹⁾

권의현(고려대), 강문성(고려대)

초록

본 논문은 아세안-호주-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AANZFTA)이 회원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ANZFTA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2001~19년 패널 통계를 활용하여 Markusen and Venable (1999)의 연구에 의해 개발된 지식-자본 모형(knowledge-capital model)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 본 논문은 AANZFTA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과 다국적 기업(MNCs)의 수직적, 수평적 FDI 동기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AANZFTA가 회원국들에게 일부 외국인직접투자를 희생시키는 대신 더 높은 수준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DI 모국과의 생산 비용 차이가 클수록 AANZFTA 참여에 따른 회원국으로의 FDI 유입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직적 및 수평적 FDI 또는 수출 플랫폼 FDI 모두 회원국으로 유입되었는데, FDI 유입 유형은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다변화 수준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DI 호스트 국가의 산업화 수준이 높고 해당 국가가 개방적이고 투자 친화적 환경을 도모할 경우 AANZFTA 참여로 인한 FDI 유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산업화 수준과 개방적이고 투자 친화적 환경 도모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제도적 질을 제고하고 보다 다양한 경제구조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이러한 효과는 기존의 선진 회원국 보다는 개발도상 회원국가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외국인직접투자, 지식-자본 모형, 아세안

1) 본 논문은 2024년 국제통상연구 제 29권 1호에 게재된 논문을 번역한 것임.

1. 서론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AANZFTA)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강국인 아세안과 호주 및 뉴질랜드 간의 성공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는 2009년에 AANZFTA에 서명하였으며, 대부분의 서명국에 의해 2010년에 발효되었다.²⁾

AANZFTA는 모든 협정을 하나의 완전한 패키지로 협상한 단일 약정 무역 협정으로서, 역내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을 보다 자유롭고 투명하게 만들고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였다. AANZFTA는 아세안의 이전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역내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촉진함으로써 회원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목적은 AANZFTA가 회원국으로의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이 FDI 유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수직적 FDI에는 긍정적인 영향³⁾을, 수평적 FDI에는 부정적인 영향⁴⁾을 미친다는 가정이 존재한다(Helpman 1984; Brainard 1997; Markusen 2002; Markusen and Maskus 2002).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할 때 FDI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실증적 질문이며, 본 연구는 AANZFTA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AANZFTA가 회원국으로의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국적 기업(MNC)의 수직적 및 수평적 동기를 모두 고려하는 Markusen and Venables (1999)의 지식-자본 모델을 사용한다. 선행 연구에 따라, 본 연구는 변수 간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과 다중공선성을 고려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정 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AANZFTA 회원국들은 기술 집약적 산업 부문의 상대적 규모 차이와 같이 경제 발전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AANZFTA가 FDI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추정할 때 AANZFTA 회원국 간의 경제적 다변화 수준을 고려한다. 또

2) AANZFTA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는 2011년에, 인도네시아에서는 2012년에 발효되었다. 다른 서명국들에 대해서는 2010년에 발효되었다.

3) 수직적 FDI는 생산 과정을 단계별로 분할하여 일부 단계는 투자 대상국에서, 다른 단계는 모국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Helpman 1984; Markusen and Maskus 2002).

4) 수평적 FDI는 모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대략 유사한 재화 및 서비스를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Brainard 1997; Markusen 2002; Markusen and Maskus 2002).

한, 패널 수준의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에서 강건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회귀분석에 사용된 방법론과 자료를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AANZFTA가 회원국으로의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며, 제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자료 및 방법론

2.1. 회귀 모형 및 자료 출처

본 연구에서는 Jang (2011), Yoo (2016), Li et al. (2016) 및 Kanazawa and Kang (2019)의 연구를 기반으로 지식 자본 모델을 사용한다. Jang (2011)은 국가 특성, 양자 투자 협정(BIT), 상호작용항과 관련된 변수들을 사용하여 소득 수준이 다른 국가 간의 FTA가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이 모델을 활용하였다. Yoo (2016)은 Jang (2011)의 모델에 시장 잠재력 지표, 아세안 FTA 지표 및 또 다른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아세안 FTA가 회원국으로의 FDI 유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Li et al. (2016)과 Kanazawa and Kang (2019)은 각각 아세안-중국 FTA와 아세안-한국 FTA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FTA가 회원국으로의 FDI 유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실증 연구에 따라, 본 연구의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이 지식-자본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begin{aligned} \ln(FDI_{ijt}) = & \beta_0 + \beta_1 \ln(dis_{ij}) + \beta_2 SGDP_{ijt} + \beta_3 SIM_{ijt} + \beta_4 |\Delta SK_{ijt}| + \beta_5 OPEN_{it} + \\ & \beta_6 SGDP_{ijt} * |\Delta SK_{ijt}| + \beta_7 \ln(dis_{ij}) * |\Delta SK_{ijt}| + \beta_8 AANZFTA_{ijt} + \\ & \beta_9 AANZFTA_{ijt} * \ln(dis_{ij}) + \beta_{10} AANZFTA_{ijt} * |\Delta SK_{ijt}| + \beta_{11} BIT_{ijt} + \\ & u_{ij} + \tau_t + \varepsilon_{ijt} \end{aligned} \quad (1)$$

종속변수 FDI_{ijt} 는 연도 t 에 모국 j 에서 투자 대상국 i 로 유입된 FDI 스톡이다 ($i \neq j$). 따라서 $\ln(FDI_{ijt})$ 는 각 AANZFTA 회원국의 모국으로부터의 FDI 스톡의 자연로그값이다. β_0

는 상수이며, 주요 관심 변수는 $AANZFTA_{ijt}$, $AANZFTA_{ijt} \cdot \ln(dis_{ij})$, 및 $AANZFTA_{ijt} |\Delta SK_{ijt}|$ 이다. $AANZFTA_{ijt}$ 는 연도 t 에 국가 i 와 j 간에 AANZFTA가 발효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AANZFTA_{ijt} \cdot \ln(dis_{ij})$ 는 $AANZFTA_{ijt}$ 와 $\ln(dis_{ij})$ 간의 상호작용항이며, $\ln(dis_{ij})$ 는 투자 대상국과 모국 간의 지리적 거리의 자연로그값이다.

Jang (2011)을 따라, $AANZFTA_{ijt} |\Delta SK_{ijt}|$ 는 $AANZFTA_{ijt}$ 와 $|\Delta SK_{ijt}|$ 간의 상호작용항이며, $|\Delta SK_{ijt}|$ 는 상대적 요소 부존량 차이를 나타낸다. $AANZFTA_{ijt}$ 및 그 상호작용항 외에도, $SGDP_{ijt}$ 는 양국 시장 규모 또는 투자 대상국과 모국의 GDP 합계이며, $OPEN_{it}$ 는 연도 t 에 투자 대상국 i 의 무역 개방도를 나타내고, BIT_{ijt} 는 연도 t 에 국가 i 와 j 간에 BIT가 발효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SGDP_{ijt} |\Delta SK_{ijt}|$ 및 $\ln(dis_{ij}) |\Delta SK_{ijt}|$ 를 포함한 나머지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다른 모든 변수들은 지식 자본 모델을 사용한 선행 연구(Li et al. 2016; Yoo 2016; Kanazawa and Kang 2019)에 따라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u_{ijt} 는 양국 고정 효과를 나타내고, τ_t 는 연도 고정 효과를 나타낸다. <표 1>은 모형 내 변수의 계산 방법과 자료 출처를 요약하여 제시하며, <표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FDI 투자 대상국과 모국 목록을 제시한다.

<표 1> 모델변수의 자료출처 및 정의

변수	정의	자료출처
종속변수 $\ln(FDI_{ijt})$	FDI 스톡의 자연로그 값	
독립변수 $\ln(dis_{ij})$	투자 대상국과 모국 간 거리의 자연로그 값; 운송 비용의 대리변수	
$SGDP_{ijt} = \ln(GDP_{it} + GDP_{jt})$	양국시장규모	Penn World Data
$SIM_{ijt} = \ln(1 - \{GDP_{jt}/(GDP_{it} + GDP_{jt})\}^2 - \{GDP_{it}/(GDP_{it} + GDP_{jt})\}^2)$	경제 규모 유사성	
$ \Delta SK_{ijt} = \ln(percapitaGDP_{jt}) - \ln(percapitaGDP_{it}) $	상대적 요소 부존량 차이; 양국 생산 비용 차이의 대리변수	
$OPEN_{it} = \ln\{(\text{Export}_{it} + \text{Import}_{it}) / GDP_{it}\}$	AANZFTA 회원국의 무역 개방도	UN Comtrade and Penn World Data

$SGDP_{ijt} * \Delta SKi_{jt} $	상호작용항	
$\ln(dis_{ij}) * \Delta SKi_{jt} $	상호작용항	
$AANZFTA_{ijt}$	AANZFTA 더미변수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
$AANZFTA_{ijt} * \ln(dis_{ij})$	상호작용항	
$AANZFTA_{ijt} * \Delta SKi_{jt} $	상호작용항	
BIT_{ijt}	양자 투자 협정 더미변수	UNCTAD,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Navigator

자료 출처: Jang (2011), Yoo (2016), 및 Kanazawa and Kang (2019)의 연구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2> 외국인 직접투자(FDI) 모국 및 수용국 선정

FDI 모국			FDI 수용국
호주	영국	말레이시아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브루나이
벨기에	홍콩	노르웨이	캄보디아
불가리아	헝가리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아일랜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폴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필리핀
중국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키프로스	일본	슬로베니아	태국
체코 공화국	캄보디아	스웨덴	베트남
독일	한국	태국	
덴마크	라오스	미국	
스페인	룩셈부르크	베트남	
핀란드	미얀마		
프랑스	몽골		

출처: Jang (2011) 및 Kanazawa와 Kang (2019)를 바탕으로 작성.

2.2 산업 개발 단계 분류

본 연구는 AANZFTA 회원국의 산업 개발 단계를 Joo et al. (2011), Yoo (2016), Kanazawa 및 Kang (2019)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AANZFTA 회원국의 경제적 다양성을 분류하기 위해 유엔 산업 개발 기구(UNIDO)의 2010년 경쟁 산업 성과(CIP) 지수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택한 이유는 AANZFTA 회원국 중 일부,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가 다른 회원국들과 달리 수출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연구를 그대로 따를 경우 이들의 산업 개발 단계를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UNIDO에 따르면, CIP 지수는 국가가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제조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며, 산업 성과에서의 기술적 진보 수준을 고려한다(UNIDO 2021).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기존 기준과 달리, 본 연구는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며, 기술 혁신과 관련한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여 국가의 산업적 전환을 평가한다. 본 연구는 2010년 CIP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AANZFTA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발효된 해이기 때문이다. UNIDO의 CIP 지수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5분위로 분류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CIP 순위를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을 다섯 그룹으로 나누었다. <표 3>은 2010년 CIP 지수를 기준으로 한 AANZFTA 회원국의 순위와 해당 5분위 그룹에 따른 산업 개발 단계를 제시한다.

<표 3>에 따르면, AANZFTA 회원국들의 산업 개발 수준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AANZFTA가 회원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각국의 산업 개발 단계를 고려하였다. 이는 경제적 다양성 수준의 차이가 FDI로부터 얻는 결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Jang, 2011; Yoo, 2016; Kanazawa and Kang, 2019). <표 4>는 AANZFTA 회원국의 산업 개발 단계 분류를 요약한 내용을 나타낸다.

<표 3> UNIDO 2010년 CIP 지수: 산업 개발 단계 분류

국가	CIP 지수 점수	CIP 순위	5분위 그룹	산업 개발 단계
싱가포르	0.334	7	최상위 (Top)	다각화 단계 (Diversified)
말레이시아	0.18	23	최상위 (Top)	
태국	0.174	25	최상위 (Top)	
호주	0.146	28	최상위 (Top)	
인도네시아	0.092	39	상위 중간 (Upper Middle)	다각화 진행단계 (Ongoing Diversified)
뉴질랜드	0.082	41	상위 중간 (Upper Middle)	
필리핀	0.066	53	상위 중간 (Upper Middle)	
베트남	0.046	63	중간 (Middle)	초기 산업화단계 (Incipient Industrialized)
브루나이	0.027	84	중간 (Middle)	
캄보디아	0.015	104	하위 중간 (Lower Middle)	

출처: UNIDO 통계 데이터 포털을 기반으로 작성 (<https://stat.unido.org/cip/>; 2022년 11월 5일 접속).

<표 4> AANZFTA 회원국의 산업 개발 단계 분류

분류	경제구조의 특징	국가
다각화된 경제	기술 집약적 산업 부문의 높은 비중,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경쟁력 있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진행 중인 다각화된 경제	일부 기술 집약적 산업 부문을 가진 활발한 산업이 존재하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은 부족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초기 산업화 경제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으며, 경제 다각화 부족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출처: Joo et al. (2011), Yoo (2016), Kanazawa and Kang (2019)를 기반으로 작성.

2.3.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AANZFTA 회원국의 산업 개발 단계 분류<표 4>에 따라 전체 표본은 세 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졌으며, 각각은 경제적 다양성 수준이 다른 그룹을 대표한다.

이 세 하위 그룹은 모형에 포함된 각 변수에서 충분한 변동성을 보이며, 각각의 경제 구조와 관련된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AANZFTA가 회원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친 영향을 경제적 다양성 수준에 따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AANZ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표 5>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Variable	Mean	Std. Dev.	Min	Max
Full Sample (N = 4,210)				
$\ln(FDI_{ijt})$	3.457	6.431	-16.118	12.436
$\ln(dis_{ij})$	8.814	0.859	6.226	9.88
$SGDP_{ijt}$	14.248	0.991	11.043	16.98
SIM_{ijt}	-1.488	0.915	-5.902	-0.693
$ \Delta SK_{ijt} $	1.188	0.875	0.002	3.708
$OPEN_{it}$	13.094	0.805	11.728	14.838
$SGDP_{ijt}^* / \Delta SK_{ijt} /$	16.777	12.156	0.022	56.995
$\ln(dis_{ij})^* / \Delta SK_{ijt} /$	10.326	7.65	0.014	33.985
$AANZFTA_{ijt}$	0.144	0.351	0	1
$AANZFTA_{ijt}^* \ln(dis_{ij})$	1.115	2.741	0	9.175
$AANZFTA_{ijt}^* / \Delta SK_{ijt} /$	0.185	0.542	0	3.19
BIT_{ijt}	0.353	0.478	0	1
Diversified Economy (n = 2,299)				
$\ln(FDI_{ijt})$	3.237	7.763	-12.185	12.436
$\ln(dis_{ij})$	8.823	0.856	6.226	9.777
$SGDP_{ijt}$	14.278	0.855	12.275	16.901
SIM_{ijt}	-1.267	0.681	-3.647	-0.693
$ \Delta SK_{ijt} $	0.825	0.663	0.002	3.65
$OPEN_{it}$	13.537	0.748	12.201	14.838
$SGDP_{ijt}^* / \Delta SK_{ijt} /$	11.698	9.205	0.022	45.419
$\ln(dis_{ij})^* / \Delta SK_{ijt} /$	7.002	5.276	0.014	27.841
$AANZFTA_{ijt}$	0.152	0.359	0	1
$AANZFTA_{ijt}^* \ln(dis_{ij})$	1.182	2.81	0	9.175
$AANZFTA_{ijt}^* / \Delta SK_{ijt} /$	0.195	0.544	0	3.19
BIT_{ijt}	0.36	0.48	0	1
Ongoing Diversified Economy (n = 1,301)				
$\ln(FDI_{ijt})$	3.776	4.847	-16.118	11.032
$\ln(dis_{ij})$	8.955	0.753	6.921	9.88
$SGDP_{ijt}$	14.459	0.967	12.073	16.98
SIM_{ijt}	-1.477	0.867	-4.491	-0.693

$/\Delta SK_{ijt} /$	1.327	0.766	0.002	2.888
$OPEN_{it}$	12.458	0.476	11.728	13.534
$SGDP_{ijt}^* / \Delta SK_{ijt} /$	19.137	10.946	0.025	40.123
$\ln(dis_{ij})^* / \Delta SK_{ijt} /$	11.858	6.928	0.016	26.777
$AANZFTA_{ijt}$	0.13	0.336	0	1
$AANZFTA_{ijt}^* \ln(dis_{ij})$	1.032	2.682	0	9.175
$AANZFTA_{ijt}^* / \Delta SK_{ijt} /$	0.142	0.449	0	2.519
BIT_{ijt}	0.327	0.469	0	1
Incipient Industrialization Economy (n = 610)				
$\ln(FDI_{ijt})$	3.606	2.795	-5.298	9.183
$\ln(dis_{ij})$	8.477	0.986	6.255	9.57
$SGDP_{ijt}$	13.686	1.27	11.043	16.843
SIM_{ijt}	-2.341	1.23	-5.902	-0.693
$/\Delta SK_{ijt} /$	2.259	0.832	0.003	3.708
$OPEN_{it}$	12.778	0.424	11.97	13.323
$SGDP_{ijt}^* / \Delta SK_{ijt} /$	30.884	11.716	0.037	56.995
$\ln(dis_{ij})^* / \Delta SK_{ijt} /$	19.584	8.023	0.019	33.985
$AANZFTA_{ijt}$	0.141	0.348	0	1
$AANZFTA_{ijt}^* \ln(dis_{ij})$	1.041	2.594	0	9.126
$AANZFTA_{ijt}^* / \Delta SK_{ijt} /$	0.241	0.691	0	3.19
BIT_{ijt}	0.384	0.487	0	1

출처: 저자 작성.

3. AANZFTA가 FDI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가설

본 연구는 Li et al. (2016), Yoo (2016), 및 Kanazawa and Kang (2019)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AANZFTA는 수직적 FDI와 수출 플랫폼 FDI에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지만, 수평적 FDI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가설 2: 양자 간 시장 규모는 수평적, 수직적, 그리고 수출 플랫폼 FDI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가설 3: 무역 개방성은 수평적, 수직적, 그리고 수출 플랫폼 FDI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가설 4: 투자보장협정(BITs)은 수평적, 수직적, 그리고 수출 플랫폼 FDI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AANZFTA가 회원국으로의 FDI 유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가설 1은 AANZFTA가 역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주요 설명변수 $AANZFTA_{ijt}$ 의 추정 계수를 검토함으로써 검증된다. 가설 2, 3, 및 4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FTA 회원국에서 긍정적인 FDI 유입을 유도하는 세 가지 조건, 즉 각각 GDP_{ijt} , $OPEN_{it}$ 및 BIT_{ijt} 를 검증한다.

변수 $AANZFTA_{ijt}$ 는 수직적 및 수출 플랫폼 FDI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평적 FDI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가설 1). 영향의 방향성은 Li et al. (2016)에 따라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와 한 가지 부정적인 효과의 합으로 결정된다. 첫 번째 고려 요인은 수직적 분업화이며, 이는 FTA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때 발생하며, 모국의 다국적 기업(MNC)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투자 대상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수직적 FDI를 증가시키면서 낮은 운송 및 무역 비용을 활용한다(Li et al. 2016). 두 번째 고려 요인은 생산 시설 합리화이며, 이는 모국의 다국적기업이 무역 비용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해 수평적 FDI보다는 무역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때 발생한다. 다국적기업은 더 적은 수의 지역에 생산 시설을 통합하고 최종재 수출을 통해 다른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Ekholm et al. 2007; Li et al. 2016). 생산 시설 합리화는 다국적기업이 제3국으로 수출하도록 유도하므로 수평적 FDI를 희생시키면서 수출 플랫폼 FDI를 촉진한다(Li et al. 2016). 세 번째이자 마지막 고려 요인은 시장 확장이며, 이는 FTA가 FDI 수혜국으로서의 FTA 회원국의 매력도를 높이기 때문에 제3국의 기업들이 FTA 회원국으로의 수평적 FDI를 증가시키는 것이다(Li and Maani 2016).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수직적 분업화 및 시장 확장)의 크기가 부정적인 효과(생산 시설 합리화)의 크기를 초과할 때 $AANZFTA_{ijt}$ 가 FDI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산 시설 합리화의 크기가 수직적 분업화 및 시장 확장의 크기를 초과하면, $AANZFTA_{ijt}$ 가 FDI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AANZ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에서 사용된 두 가지 대리변수 $\ln(dis_{ij})$ 및 $|\Delta SK_{ijt}|$ 와 관련하여 추가로 분석하기 위해, 주요 설명변수 $AANZFTA_{ijt}$ 와 관련된 두 가지 상호작용항을 고려한다. $AANZFTA_{ijt}$ 와 양국 간 거리($AANZFTA_{ijt} \ln(dis_{ij})$) 간의 상호작용항은 수직적 FDI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평적 및/또는 수출 플랫폼 FDI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ANZFTA가 회원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므로, 모국의 다국적기업은 비용 고려 사항으로 인해

투자 대상국과 모국 간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직적 FDI를 줄일 가능성이 더 높다. 반면, 모국의 다국적기업은 AANZFTA로 인해 무역 장벽이 없고 투자 대상국과 모국 간 거리가 증가할 때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수평적 FDI를 수행하도록 장려된다. 다국적기업이 수평적 FDI를 수행하는 대신 제3국으로 수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투자 대상국과 모국 간의 거리가 증가할 때 해당 상호작용항은 수출 플랫폼 FDI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ANZFTA_{ijt}$ 와 상대적 요소 부존량 차이($AANZFTA_{ijt}|\Delta SK_{ijt}|$) 간의 상호작용항은 수직적 FDI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평적 FDI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ANZFTA가 발효되면, 모국의 다국적기업은 투자 대상국에서 수직적 FDI를 수행함으로써 더 큰 생산 비용 차이를 활용하려는 동기를 얻는다. 반면, AANZFTA로 인해 무역 비용이 상당히 낮아지므로 다국적기업은 수평적 FDI를 줄이려는 동기를 얻는다. $AANZFTA_{ijt} * |\Delta SK_{ijt}|$ 가 수출 플랫폼 FDI에 미치는 영향은 $|\Delta SK_{ijt}|$ 가 증가함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행동과 해당 제3국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만약 다국적기업이 투자 대상국 시장에서 더 낮은 생산 비용을 활용한 후 제3국 시장으로 최종재를 수출하기로 결정한다면, 생산 비용 차이는 수출 플랫폼 FD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만약 다국적기업이 낮은 생산 비용으로 투자 대상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집중하고 비용 고려 사항으로 인해 제3국으로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생산 비용 차이는 수출 플랫폼 FDI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 연구(Li et al. 2016; Yoo 2016; Kanazawa and Kang 2019)에 따르면, AANZFTA 회원국과 모국 간의 양국 시장 규모(GDP_{ijt})는 AANZFTA 회원국으로의 모든 유형의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가설 2). AANZFTA로 인한 경제 확장은 모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이 투자 대상국 시장에 투자하도록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투자 대상국의 무역 개방도($OPEN_{it}$) 역시 모든 유형의 FD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모국의 다국적기업이 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투자 대상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가설 3). BIT 지표(BIT_{ijt})는 Egger and Pfaffermayr (2004)의 제안에 따라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Carr et al. (2001)이 제안한 모형에 BIT 지표를 처음으로 추가하고 BIT와 FDI 유입 간의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BIT는 해외 시장의 불확실성 및 FDI에 대한 세금과 같은 투자에 대한 많은 제약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으며(Jang 2011), 제도

적 질의 개선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Neumayer and Spess 2005), BIT_{ijt} 는 GDP_{ijt} 및 $OPEN_{it}$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FD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가설 4). $GDP_{ijt} * |\Delta SK_{ijt}|$ 및 $\ln(dis_{ij}) * |\Delta SK_{ijt}|$ 를 포함한 나머지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 내의 다른 모든 변수들은 지식 자본 모형을 사용한 선행 연구(Li et al. 2016; Yoo 2016; Kanazawa and Kang 2019)에서 설명된 동일한 이론적 틀에 따라 통제변수로 포함된다.

4. 결과 및 분석

4.1. 추정 결과

<표 6>은 AANZFTA 회원국으로의 FDI 유입에 대한 AANZ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주요 설명변수 $AANZFTA_{ijt}$ 는 전체 표본과 다변화된 경제를 가진 국가 모두에서 FDI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계수 추정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ANZFTA_{ijt}$ 의 음의 부호는 생산 시설 합리화가 수직적 분업화 및 시장 확장의 효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AANZFTA는 2010년부터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무역 비용을 상당히 낮추었기 때문에, 모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은 수평적 FDI에 참여하기보다는 무역을 더 많이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전에 다변화된 경제에서 운영되던 다국적기업이 AANZFTA 이전부터 이미 수평적 FDI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다국적기업은 더 적은 수의 지역에 생산 시설을 통합하고 최종재를 수출하여 다른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급망을 효율화했다는 것을 시사한다(Ekholm et al. 2007; Li et al. 2016). 다변화된 경제에 대한 계수 추정치(-7.422)는 전체 표본(-6.099)보다 크며, 이는 생산 시설 합리화가 다변화된 경제에서 운영되는 다국적기업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가설 1과 일치한다.

상호작용항 ($AANZFTA_{ijt} \ln(dis_{ij})$)은 초기 산업화 경제를 제외한 모든 표본에서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FDI 유입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 추정치의

긍정적인 부호는 Jang (2011)이 제시한 바와 같이, 투자 대상국과 모국 간의 양국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FDI 유입에 대한 $AANZFTA_{ijt}$ 의 부정적인 영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AANZFTA_{ijt} \ln(dis_{ij})$ 의 긍정적인 부호는 AANZFTA 회원국 전체, 다변화된 경제, 그리고 양국 거리가 증가할 때 지속적으로 다변화되는 경제에서 수평적 FDI 또는 수출 플랫폼 FDI가 유입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수평적 FDI 유입이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10년에 회원국에 대한 AANZFTA로 무역 장벽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2010년 이전에 다변화된 경제와 지속적으로 다변화되는 경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다국적기업이 투자 대상국과 모국 간의 양국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수평적 FDI를 수행하도록 장려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AANZFTA_{ijt} \ln(dis_{ij})$ 의 계수 추정치의 긍정적인 부호는 전체 표본과 다변화된 경제에서 $AANZFTA_{ijt}$ 로 인한 생산 시설 합리화로 손실된 일부 수평적 FDI를 복원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AANZFTA_{ijt} \ln(dis_{ij})$ 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부호는 AANZFTA 회원국과 다변화된 경제가 다른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잃어버린 일부 수평적 FDI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평적 FDI 수혜국으로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수출 플랫폼 FDI 유입이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AANZFTA 회원국 전반과 특히 다변화된 경제에서 수평적 FDI 유입을 줄인 동일한 다국적기업들이 투자 대상국과 모국 간의 양국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대신 제3국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 플랫폼 FDI에 참여했다. $AANZFTA_{ijt} \ln(dis_{ij})$ 의 긍정적 부호에 대한 설명과 관계없이, 결과는 $AANZFTA_{ijt}$ 로 인한 생산 시설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AANZFTA_{ijt} \ln(dis_{ij})$ 로부터 전체 표본과 다변화된 경제에서 FDI 유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다변화되는 경제는 $AANZFTA_{ijt}$ 로 인한 생산 시설 합리화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AANZFTA_{ijt} \ln(dis_{ij})$ 가 FDI 유입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은 이러한 경제가 투자 대상국과 모국 간의 양국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AANZFTA로부터 순 긍정적 FDI 유입을 유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호작용항 $AANZFTA_{ijt}^*|\Delta SK_{ijt}|$ 의 경우, 전체 표본과 다변화된 경제 모두에서 AANZFTA 회원국으로의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경우 모두 계수 추정치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계수 추정치의 긍정적인 부호는 Jang (2011)에서와 같이 다시 해석할 수 있다. 즉, $AANZFTA_{ijt}^*|\Delta SK_{ijt}|$ 의 긍정적인 부호는 투자 대상국

과 모국 간의 상대적 요소 부존량 차이가 증가함에 따라 FDI에 대한 $AANZFTA_{ijt}$ 의 부정적인 영향이 약화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투자 대상국과 모국 간의 생산 비용 차이가 증가함에 따라 모국의 다국적기업은 투자 대상국에서 더 많은 수직적 FDI를 수행함으로써 요소 부존량 차이의 비교 우위를 활용하려는 동기를 얻는다. 다변화된 경제에 대한 계수 추정치(1.320)는 전체 표본(0.798)보다 크며, 이는 2010년부터 생산 비용 차이가 증가함에 따라 다변화된 경제를 가진 국가들이 AANZFTA 회원국 전반보다 모국으로부터 평균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직적 FDI를 유치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더 많은 수직적 FDI 유입이 AANZFTA 회원국 전반과 특히 다변화된 경제에 유입되므로, $AANZFTA_{ijt}$ 로 인한 생산 시설 합리화로 손실된 일부 FDI가 복원된다.

AANZFTA 변수와 상호작용항이 AANZFTA 회원국으로의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생산 시설 합리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평적 또는 수출 플랫폼 FDI와 수직적 FDI 모두 AANZFTA 회원국 전체에 유입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회원국 간의 산업 발전 수준 차이를 고려할 때, 다변화된 경제를 가진 국가는 두 가지 유형의 FDI (수평적 또는 수출 플랫폼 FDI와 수직적 FDI) 모두를 유치한 반면, 지속적으로 다변화되는 경제를 가진 국가는 2010년 AANZFTA 설립과 함께 수평적 또는 수출 플랫폼 FDI만을 유치했다. 전체 표본과 다변화된 경제가 양국 거리와 요소 부존량 차이에 따라 유치한 서로 다른 유형의 FDI는 AANZFTA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 시설 합리화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효과를 가졌다. 유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한 회귀모형을 사용한 Jang (2011)과 Yoo (2016)에서도 보고되었다. 지속적으로 다변화되는 경제는 생산 시설 합리화 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상국과 모국 간의 양국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AANZFTA로부터 순 긍정적 FDI 유입을 유치한다.

가설 2와 관련하여, AANZFTA 회원국과 모국 간의 양국 시장 규모($SGDP_{ijt}$)는 모든 표본에서 AANZFTA 회원국으로의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GDP_{ijt}$ 의 계수는 전체 표본에서 5% 수준, 지속적으로 다변화되는 경제에서 1% 수준, 나머지 하위 표본에서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값을 가진다. $SGDP_{ijt}$ 의 계수의 긍정적인 부호는 양국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모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이 더 큰 시장 규모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FDI 유형과 관계없이 AANZFTA 회원국으로의 FDI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가설 2와 일치한다. 또한, AANZFTA 회원국의 무역 개방도($OPEN_{it}$)는 전

체 표본과 다변화된 경제에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변화된 AANZFTA 회원국의 더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 친화적인 환경은 모든 회원국 평균 (1.617)에 비해 모든 유형의 FDI 유입을 더 많이 유도한다(4.400).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3은 전체 표본 또는 다변화된 경제에 대해 기각되지 않는다.

<표 6> AANZFTA 회원국으로의 FDI 유입에 대한 추정 결과

	(1) All AANZFTA Members	(2) Diversified Economy	(3) Ongoing Diversified Economy	(4) Incipient Industrialized Economy
$\ln(dis_{ijt})$				
$SGDP_{ijt}$	6,798** (2,654)	9,316* (4,750)	6,961*** (2,552)	17,291* (9,263)
SIM_{ijt}	-0,393 (1,013)	0,797 (1,751)	2,622 (1,996)	7,578 (6,387)
$ \Delta SK_{ijt} $	13,189 (10,135)	32,011* (16,642)	-11,035 (11,198)	-3,940 (9,366)
$OPEN_{it}$	1,617** (0,661)	4,400** (1,999)	-0,737 (1,136)	-4,981 (3,124)
$SGDP_{ijt} * \Delta SK_{ijt} $	-1,969*** (0,663)	-2,132** (1,048)	-0,460 (0,469)	-0,925** (0,405)
$\ln(dis_{ijt}) * \Delta SK_{ijt} $	1,486** (0,603)	-0,473 (1,303)	1,797* (1,017)	1,033 (0,766)
$AANZFTA_{ijt}$	-6,099** (2,596)	-7,422** (3,250)	-5,345 (3,258)	-0,367 (2,143)
$AANZFTA_{ijt} * \ln(dis_{ijt})$	0,637* (0,328)	0,718* (0,413)	0,699* (0,381)	-0,051 (0,256)
$AANZFTA_{ijt} * \Delta SK_{ijt} $	0,798** (0,358)	1,320** (0,572)	-0,266 (0,370)	-0,116 (0,294)
BIT_{ijt}	-0,474 (0,392)	-0,542 (1,063)	-1,012 (0,635)	0,766* (0,408)
Constant	-112,218*** (39,774)	-183,564** (84,188)	-79,442** (36,012)	-128,658* (74,851)
R-sq	0,128	0,176	0,100	0,600
Regression Model	FE	FE	FE	FE
N	4,210	2,299	1,301	610
Hausman Test	2(10) = 41,39 p-value = 0,000	2(10) = 43,02 p-value = 0,000	2(10) = 32,59 p-value = 0,000	2(10) = 43,25 p-value = 0,000

주)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결과, 영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 회귀 분석 결과만을 남김. 본 분석의 종속 변수는 AANZFTA 회원국의 모국으로부터의 양자 간 FDI 스톡의 자연로그임. 분석 기간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용된 데이터는 비균형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고정효과 회귀 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여 변수 $\ln(dis_{ijt})$ 가 제외됨. 괄호 안의 값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나타냄. 유의성 수준은: *은 $p<0.1$, **는 $p<0.05$, ***는 $p<0.01$ 을 의미
출처: AANZFTA 관련 데이터 기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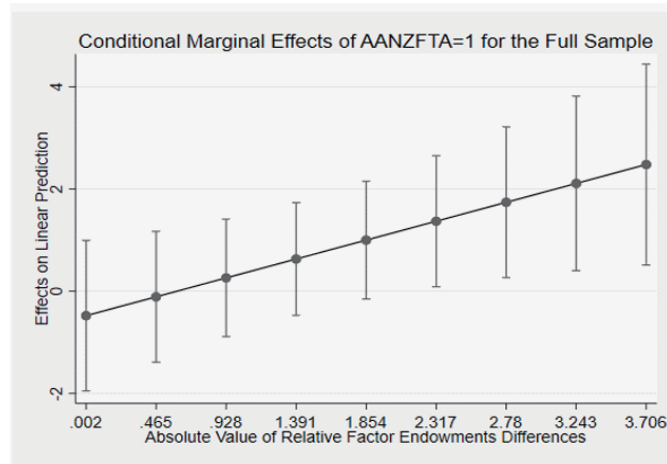
BIT 지표(BIT_{ijt})는 초기 산업화 경제에서만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는 BIT로 인해 발생하는 FDI에 대한 세금(Jang 2011) 및 정치적 위험으로부터의 민간 투자 보호(Neumayer and Spess 2005)와 같은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 제거가 초기 산업화 경제에 대한 모든 유형의 FDI를 더 많이 유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BIT는 일반적으로 부족한 초기 산업화 경제의 국내 제도적 질 개선을 대체할 수 있으며(Neumayer and Spess 2005), 모국에 대한 수용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평균적으로 이러한 경제에 더 많은 모든 유형의 FDI를 유치한다. 결과적으로, 가설 4는 초기 산업화 경제에 대해 기각되지 않는다. 상호작용항 $GDP_{ijt} * |\Delta RF_{ijt}|$ 및 $\ln(dis_{ij}) * |\Delta SK_{ijt}|$ 를 포함한 다른 모든 변수들은 지식 자본 모델을 사용한 이전 연구(Li et al. 2016; Yoo 2016; Kanazawa and Kang 2019)의 추정 결과를 확인하는 경험적으로 타당한 계수를 가진다.

4.2. 모든 AANZFTA 회원국 및 다변화된 경제에 대한 조건부 한계 효과 도표화

$AANZFTA_{ijt}$ 와 $AANZFTA_{ijt} * |\Delta SK_{ijt}|$ 에 대한 추정 계수가 전체 표본과 다변화된 경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양국 생산 비용 차이에 따른 AANZFTA가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Delta SK_{ijt}|$ 의 변화에 따른 이 두 표본에 대한 $AANZFTA_{ijt}$ 의 조건부 한계 효과를 도표화했다. <그림 1>과 2는 $|\Delta SK_{ijt}|$ 를 제외한 모든 설명 변수를 평균값으로 고정했을 때, 각각 전체 표본과 다변화된 경제에 대한 $AANZFTA_{ijt}$ 의 조건부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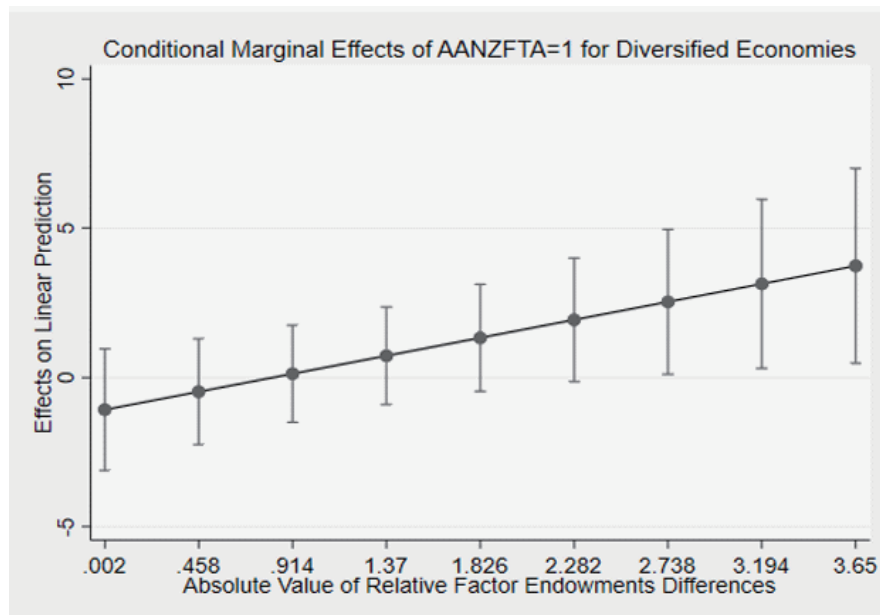
<그림 1>과 2는 $|\Delta SK_{ijt}|$ 값이 충분히 높으면 전체 표본과 다변화된 경제 모두에서 $AANZFTA_{ijt}$ 의 한계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생산 비용 차이가 클수록 생산 비용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커지고,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되어(Kawai and Naknoi 2015) AANZFTA로 인해 순 긍정적인 역내 FDI를 유치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투자 대상국이 모국에 비해 국내 생산 비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양국 간 생산 비용 차이를 크게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그림 1>과 <그림 2>는 모든 AANZFTA 회원국과 다변화된 경제에서 생산 비용 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서로 다른 유형의 FDI 유입을 통해 생산 시설 합리화 효과를 상쇄한다.

<그림 1> 전체 표본에 대한 $AANZFTA_{ijt}$ 의 조건부 한계 효과



주: $AANZFTA_{ijt}$ 및 $|\Delta RF_{ijt}|$ 를 제외한 모든 설명 변수의 값은 평균값으로 고정됨.

<그림 2> 다변화된 경제에 대한 $AANZFTA_{ijt}$ 의 조건부 한계 효과



주: $AANZFTA_{ijt}$ 및 $|\Delta RF_{ijt}|$ 를 제외한 모든 설명 변수의 값은 평균값으로 고정됨.

5. 결론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AANZFTA가 AANZFTA 회원국으로의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고정 효과 회귀분석 결과, AANZFTA는 회원국 전반에 걸쳐 수직적 FDI와 수평적 또는 수출 플랫폼 FDI 모두를 증가시켰지만, FDI 유형은 투자 대상국의 경제 다변화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표본 모두 일부 FDI를 희생시키면서 무역을 촉진하는 생산 시설 합리화 효과의 영향을 받지만, 모든 AANZFTA 회원국과 다변화된 경제를 가진 국가는 양국 거리 증가를 통해 더 많은 수평적 또는 수출 플랫폼 FDI를 유치하고 더 큰 생산 비용 차이를 통해 더 많은 수직적 FDI를 유치함으로써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변화된 경제를 가진 국가들은 AANZFTA로 인해 양국 거리 증가로 더 많은 수평적 또는 수출 플랫폼 FDI를 유치하고 더 높은 생산 비용 차이로 더 많은 수직적 FDI를 유치할 수 있는 반면, 지속적으로 다변화되는 경제는 양국 거리 증가를 통해서만 수평적 또는 수출 플랫폼 FDI를 유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아시아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된 상대적으로 발전된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수직적 FDI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Kawai and Naknoi (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의 경제적으로 덜 발전된 회원국은 아직 동아시아 공급망의 일부가 아니며 글로벌 공급망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지 않았다(Kawai and Naknoi 2015). 이는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며,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지속적으로 다변화되는 경제가 AANZFTA로 인해 수직적 FDI보다는 수평적 또는 수출 플랫폼 FDI를 더 많이 유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초기 산업화 경제의 경우, AANZFTA가 FDI 유입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없지만, BIT 서명은 미미하게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T 서명과 제도적 질 개선이 서로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Neumayer and Spess 2005), 초기 산업화 경제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는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질이 먼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Aizenman and Spiegel (2006)과 Alguacil et al. (2011)의 연구에서도 강조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FDI 유입에 대한 제도적 효율성과 집행 비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 결과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양국 거리 또는 생산

비용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FDI 유입으로 생산 시설 합리화를 상쇄할 수 있는 모든 AANZFTA 회원국과 다변화된 경제의 경우, 생산 비용 차이가 충분히 크면 AANZFTA가 FDI 유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충분히 낮은 생산 비용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회원국과 특히 다변화된 국가에서 AANZFTA로부터 순 긍정적인 역내 FDI를 유치하는 데 핵심이다. 둘째, 모국으로부터 FDI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국 경제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치 및 경제적 틀을 갖추도록 제도적 질을 개선해야 한다. BIT를 체결하면 투자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여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 미래에 역내 FDI 촉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속적으로 다변화되는 경제는 상당한 양의 수직적 FDI를 유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AANZFTA로부터 순 긍정적인 FDI 유입을 유치했다. 수직적 FDI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변화되는 경제가 다변화된 경제에 비해 부족한 무역 개방도 및 생산 비용의 비교 우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영역을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다변화되는 경제는 AANZFTA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FDI를 더 많이 유치하여 전반적인 순 긍정적 FDI 유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제도적 질을 높이고 보다 다변화된 경제 구조를 조성함으로써 투자 대상국에서 더 높은 수준의 산업화와 개방적이고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AANZFTA 참여로부터 더 많은 FDI를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anazawa and Kang 2019). FDI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보장하므로, BIT를 통한 제도적 질 개선과 보다 다변화된 경제 구조 및 생산 비용의 비교 우위를 통한 산업 경쟁력 유지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Aizenman, J., and Spiegel, M. M. (2006). Institutional Efficiency, Monitoring Costs and the Investment Share of FDI.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4, 683-697.
- Alguacil, M., Cuadros, A., and Orts, V. (2011). Inward FDI and Growth: The Role of Macroeconomic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Journal of Policy Modeling*, 33, 481-496.
- Brainard, L. S. (1997).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 Between Multinational Sales and Trad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7, 520-544.
- Carr, D. L., Markusen, J. R., and Maskus, K. E. (2001). Estimating the Knowledge-Capital Model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1, 693-708.
- Egger, P., and Pfaffermayr, M. (2004). The Impact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2, 788-804.
- Ekholm, K., Forslid, R., and Markusen, J. R. (2007). Export-Platform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5, 776-795.
- Helpman, E. (1984). A Simpl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with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2, 451-471.
- Jang, Y. J. (2011). The Impact of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on Bilateral Foreign Direct Investment among Developed Countries. *The World Economy*, 34, 1628-1651.
- Joo, D.-J., Kim, K.-H., Moon, J.-C., and Yoon, J.-H. (2011). Industrialization of Africa and Partnership with Korea.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In Korean)
- Kanazawa, R., and Kang, M. (2019). The Impact of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Korea and the World Economy*, 20, 43-63.
- Kawai, M., and Naknoi, K. (2015). ASEAN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Long-Term Challenges. ADBI Working Paper 545.
- Li, Q., and Maani, S. (2016). Detecting Positive Effects of the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Economics and Economic Policy*, 15,

69-87.

- Li, Q., Scollay, R., and Maani, R. (2016). Effects on China and ASEAN of the ASEAN-China FTA: The FDI Perspective. *Journal of Asian Economics*, 44, 1-19.
- Markusen, J. R. (2002). *Multinational Firms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MIT Press.
- Markusen, J. R., and Venables, A. J. (1999).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a Catalyst for Industrial Develop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43, 335-356.
- Markusen, J. R., and Maskus, K. E. (2002). Discriminating among Alternative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0, 694-707.
- Neumayer, E., and Spess, L. (2005). Do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crease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33, 1567-1585.
- UNIDO (2021). The Inclusive and Sustainable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ISCIP). UN Working Paper 5/2021.
- Yoo, J.-G. (2016). An Economic Impact Analysis of ASEAN FTA on FDI Flows into the ASEAN Countries.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4, 39-49.

제2장.

광역메콩유역의 에너지 무역 :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 관련 메콩 유역 전력망 영향평가¹⁾

신나연(고려대), 이승호(고려대)

1. 서론

본 논문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 광역메콩 지역(Greater Mekong Subregion, GMS) 프로그램을 통한 역내 협력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달성했는지 분석한다. 특히 수력 발전 개발과 메콩 전력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GMS 프로그램은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역내 협력 증진, 경제 발전,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한다. 참여 주체로는 중국의 윈난성과 광시성,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이 있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에 주목한다. 이익 공유 이론을 적용하여 수력 발전 개발과 메콩 전력망이 메콩강 유역의 역내 에너지 거래 및 지속가능성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한다.

본 프로그램은 메콩강 유역의 초국경 수자원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메콩강 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 및 란창-메콩 협력(Lancang Mekong Cooperation, LMC)과 같은 다른 지역 협력 기구들도 존재한다. MRC는 1995년에 국제 하천 유역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하류 메콩 국가 간의 국제 협력에 기여해 왔다.

LMC는 2015년 중국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다른 메콩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강력한 수단 역할을 해왔다. 이 기구는 모든 유역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었고 이는 메콩강 유역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MRC 및 LMC와 비교했을 때, GMS 프로그램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주도로 탄생했으며,

1) 본 논문은 2024년 한국태국학회논문총 30권 2호에 게재된 논문을 번역한 것임.

지역 내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 감소, 사회경제적 발전 촉진, 그리고 농업, 에너지, 환경 보호,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운송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지역 협력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은 수력 발전 개발 및 운송 인프라에 대한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GMS 수력 발전 부문에서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메콩 전력망 구축이다. 이 전력망은 송전선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수력 전력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이 지역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이러한 지역 수력 발전 거래는 모든 메콩 유역 국가들에게 사회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적 이익도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수력 발전 개발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 우려, 즉 유역 내 생태계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총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익 공유 이론에 대한 문헌 검토 및 논의를 포함한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사례 연구로서 GMS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특히 메콩 전력망과 메콩 국가들의 수력 발전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익 공유 및 GMS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하여 달성된 성과와 과제를 조사할 것이다.

2. 문헌 검토 및 이론적 틀

2.1 문헌조사

2023년 유엔 세계 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물은 모든 인간 활동과 생태계에 필수적이며,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6(물과 위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역동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SDG 6 달성을 위한 진전을 가속화하고 물과 위생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든 수준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UNESCO, 2023, p. 30).

메콩강 유역은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복합적 우려를 안고 있다. Li(2016)는 인구, 경제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메콩강 유역의 도시화 과정을 분석한다. 정치 체제가 변화하고

경제가 확장되었으며, 국제 투자와 국내 번영 모두 이 강 유역에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과 함께 환경 파괴 및 사회 불평등과 같은 문제점도 발생했다. 정책 입안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메콩강 유역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Lee(2015)와 Lee와 Lee(2015)는 이익 공유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중국과 하류 메콩 유역 간의 협력에 대한 평가를 강조한다. 중국은 GMS 지역 내 전력망을 통한 에너지 교환, 원조 유입 증가, 에너지 안정성 강화 등 GMS 프로그램 하에서 다양한 산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왔다. GMS 국가 간의 협력 노력은 메콩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Kittikhoun과 Staubli(2018)는 MRC가 어떻게 수자원 외교를 위한 기술 지식 기반 및 플랫폼으로 발전해 왔는지 밝힌다. 국제 하천 유역 기구는 법적, 제도적, 전략적 수단을 통해 협상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Zhang과 Li(2020)는 메콩 지역에 대한 중국 정책의 현대적 변화를 탐구한다. 윈난성 정부의 국제 활동과 LMC는 중국의 수자원 외교에 기여했다. 지방 정부, 국영 기업, NGO와 같은 하위 국가 행위자들이 초국경 수자원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메콩강 유역의 중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Gruenwald, Wang, 그리고 Feng(2022)은 비판적 정치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메콩 지역에서 중국의 수력 발전 담 정치화를 조사한다. 저자들은 효과적인 초국경 수자원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사회, NGO, 정부를 포함한 메콩 지역의 모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정한 이익 공유를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Liu et al.(2022)은 게임 이론을 적용하여 수력 발전 개발의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수력 발전 개발로 인한 이주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GMS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경제적 측면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검토되었다. Le, Nguyen, Vu, Luu, 그리고 Taghizadeh-Hesary(2020)는 지역 경제 협력의 효과를 조사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과 다른 GMS 회원국 간의 GMS에 대해 조명한다. 실증적 분석 결과, 베트남 금융 부문의 성장과 인적 자본은 GMS 프로그램을 통한 무역 촉진 및 무역 불균형 감소에 기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Vu와 Mayer(2019)는 메콩 유역의 수력 발전 개발 촉진과 중국의 영향력 증가를 중심으로 메콩 지역 질서 재편에 대해 논의한다. 중국과 다른 GMS 국가 간의 파트너십이 새로운 지역 질서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저자들은 중국의 수력 발전 촉진이 GMS 내에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기술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Chen과 Zhu(2016)는 GMS의 주요 문제점, 원인 및 복잡성을 제시하고, GMS 국가 내 협력 메커니즘, GMS 내부 무역 및 협력, 외부 지원을 분석하여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Chauhan(2021)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역 전력 거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GMS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전력 거래 협정의 사례 연구로 검토한다. GMS 프로그램의 전력 거래 활동을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전력 부문 개혁, 국가 및 지역 목표 조화를 중심으로 상호 연결된 전력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점진적인 전략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2 이익 공유 이론

이익 공유 접근 방식은 메콩강 유역 내 유역 국가들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사용된다. Sadoff와 Grey(2002)에 따르면, 이익 공유 이론은 협력과 관련된 비용과 이익의 분배를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초국경 하천의 유역 국가는 협력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향상된 생산성의 잠재적 이점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은 자원 배분에 잠재적인 불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이익의 개념이 국가에 따라 상대적인 데에서 기인한다. 효율적인 초국경 하천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고 하천 유역을 응집력 있는 실체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Lee, 2015, pp. 142-143; Qaddumi, 2008, p. 397; Shin, Lee, and Hong, 2020, pp. 83-84).

Sadoff와 Grey(2002; 2005)는 국제 하천에 대한 협력적 관리의 이점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유형 1은 유역 보존, 수질 오염 물질에 대한 하천 생물 다양성 보호, 강수량 조절 및 수질 순

도 증폭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관리에 집중한다. 유형 2는 수력 발전을 통한 식량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생성과 같이 하천에서 파생되는 이점과 관련이 있다.

유형 3은 하천의 존재로 인한 비용 절감을 의미하며, 유역 국가들이 협력적 노력에서 이익을 얻고 비협력과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초국경 수자원 갈등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협력을 저해할 수 있지만, 협력은 불화를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지역 통합을 촉진한다.

유형 4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유형 2와 정치적 이익과 관련된 유형 3을 통합하여 하천 유역을 넘어선 이익을 의미한다(Lee, 2015, pp. 142-143). 이러한 형태의 이익 공유는 세계 경제를 향한 정치적 헌신과 제도적 역량을 통해 하천 유역 내 경제 통합을 촉진한다. 공유 하천에서 국가 간 협력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하천이 특히 비수자원 관련 부문에서 지역 내 경제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공유된 이점을 창출하는 능력에 기인한다(Sadoff and Grey, 2005, pp. 399-400). Lee(2015)에 따르면 협력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추가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GMS 프로그램은 유형 2(직접적인 경제 협력)와 유형 4(간접적인 경제 협력)의 공유된 이점을 모두 보여준다. 유형 2는 수력 발전 개발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메콩 전력망과 관련하여 유역 국가들이 광역 메콩 지역(GMS)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유형 4의 경제 협력은 운송, 농업, 제조업, 투자,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Shin et al., 2020, p. 84).

다음 섹션에서는 GMS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특히 메콩 전력망과 메콩 국가의 수력 발전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이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하천 유역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분석할 것이다.

3. 사례분석 - GMS 프로그램

메콩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남중국해까지 6개국을 걸쳐 흐르며, 두 개의 유역으로 나뉜다. 중국과 미얀마를 포함하는 상류 메콩 유역(UMB)과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구성된 하류 메콩 유역(LMB)이다(Kummu and Varis, 2007, p. 277; Shin et al., 2020, p. 84). 메콩강은

약 9천만 명의 삶의 터전이며, 식수와 관개용수를 제공하고 중요한 수로 역할을 하며, 수력 발전을 위한 원천이 된다(Li, 2016, p. 137; Shin et al., 2020, p. 84).

<그림 1> 메콩강 유역



출처: MRC. (2022). 2019-2021년 메콩강 저유량 및 가뭄 상황. 비엔티안: MRC 사무국. (<https://doi.org/10.52107/mrc.qx5yo7>)

3.1 GMS 프로그램 개요

ADB는 1992년 중국(윈난성 및 광시성),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간의 사회경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GMS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관광, 농업, 정보 통신 기술, 에너지 및 운송과 같은 다양한 부문에 걸쳐 하위 지역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었다(Shin et al., 2020, pp. 85-87).

이 프로그램의 세 가지 핵심 접근 방식인 3C(공동체, 연결성, 경쟁력, Community, Connectivity, Competitiveness)는 회원국 간의 연결성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건설적인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결성은 지속 가능한 인프라 관리와 운송 개선에 중요한 요소이며, GMS 지역 인근 국제 시장에서 원활한 무역 거래를 촉진한다. 경쟁력은 인적 자원과 제품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회원국 간의 통합 시장 시스템을 육성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ADB, 2021, p. 22).

GMS 프로그램은 시작 이후 회원국에서 눈에 띄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하위 지역 프로젝트의 전략적 실행은 하천 유역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효율적인 무역 거래를 가져왔으며, 이는 통합된 지역 시장을 촉진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무역과 투자가 확대되어 GMS 회원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이 약 5%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과는 회원국 시민들에게 사회경제적 이익과 기회를 제공했다(ADB, 2021, p. 7; Shin et al., 2020, pp. 8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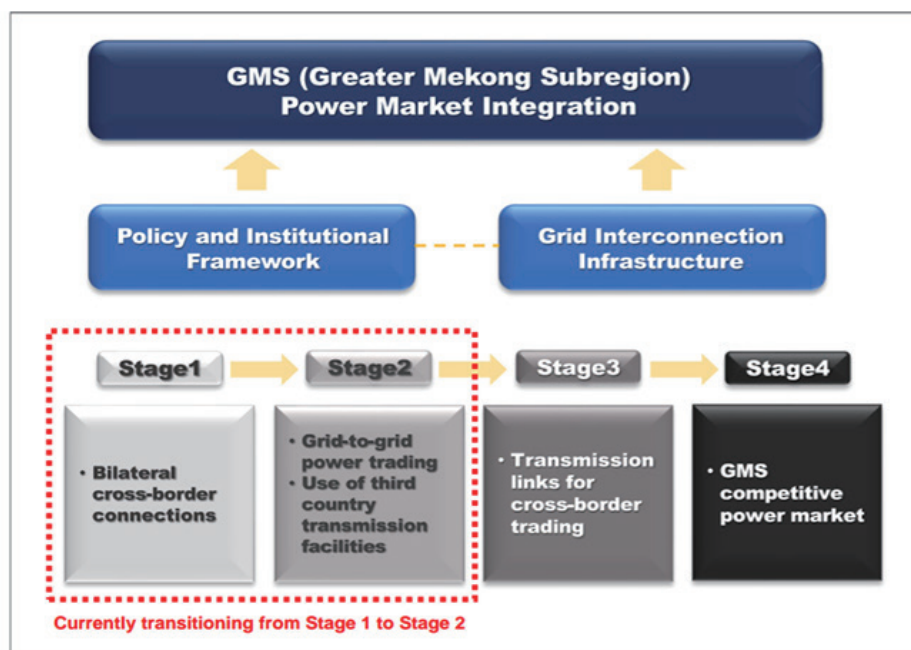
ADB는 2018년에 10년 전략의 적절한 실행을 확인하기 위해 GMS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 검토를 시행했다. 2018년 제6차 GMS 정상 회의에서는 국경 간, 농촌 및 도시 내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회랑 강화에 중점을 둔 지역 투자 프레임워크 2022와 함께 하노이 행동 계획을 비준했으며, 경제 개발의 이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보장하였다. 에너지 및 무역 촉진 부문은 점진적이지만 느린 속도의 진전을 보였으며, 그리드 간 연결을 통해 GMS 국가 간 전력 거래에 중점을 두었다. 제3국 송전선을 통한 전력 거래는 전력 시장 통합을 최우선 순위로 유지한 채 나중 단계로 연기되었다(ADB, 2018, p. 9).

GMS 프로그램은 하천 유역에서 에너지의 균형 잡힌 분배를 우선시해 왔다. 에너지 거래는 GMS 회원국에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전력 부문, 국경 간

전력 거래, 그리고 에너지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송전망을 상호 연결하는 메콩 전력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MS 국가들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의 공정한 분배의 이점을 인식해 왔다(ADB, 2012, p. 22; Shin et al., 2020, pp. 88-89; Shrestha and Chongvilaivan, 2013, p. 101).

1992년부터 GMS 프로그램의 에너지 부문은 발전해 왔다. 2002년 제1차 GMS 정상 회의에서 지역 전력 거래에 관한 정부 간 협정(IGA)이 비준되었으며, 그 결과 2003년에 지역 전력 거래 조정 위원회(RPTCC)가 설립되었다(Shrestha and Chongvilaivan, 2013, p. 221). 위원회는 2004년부터 전력 거래를 감독하고 미래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명한 의사소통을 촉진해 왔다. 지역 전력 조정 센터(RPCC)는 GMS 프로그램에서 지역 전력 교육 및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RPCC 설립은 2013년에 전력 상호연결성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용이하게 했다(ADB, 2016, p. 12; Shin et al., 2020, pp. 88-89; Yang et al., 2022, p. 3). 지역 그리드 코드(RGC)는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지역 에너지 거래 시장을 위한 기술 요구 사항, 표준 및 규칙을 포함한다(ADB, 2021, p. 29).

<그림 2> GMS 전력 시장의 단계



출처:ADB(2018)를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는 2005년 GMS 프로그램 내에서 확대된 에너지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보여준다 (ADB, 2018, p. 29; Shin et al., 2020, pp. 88-89). 이 로드맵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GMS 프로그램은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1단계는 양자 에너지 거래를 포함하는 반면, 2단계는 특정 유틸리티에 의한 제3국 송전 인프라 활용을 수반한다. 국경 간 에너지 거래를 촉진 하기 위해 지역 송전 마스터 플랜이 개발되어 3단계로 가는 길을 제공한다(ADB, 2018, p. 28). ADB는 GMS 전력 거래 조정 및 정보 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Shin et al., 2020, pp. 88-89; Shrestha and Chongvilaivan, 2013, p. 221).

3.2 메콩 전력망 및 메콩 국가의 수력 발전 개발

메콩 전력망은 시장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촉진하고 모든 GMS 회원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력망은 지역 전체의 송전선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의 수력 발전소를 연결하여 회원국 간의 전력 교환을 촉진한다. GMS 회원국들은 지역 전력망을 구축하고, 지역 에너지 부문을 통합하고, 지역 전력 부문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ADB, 2012, p. 47; Shin et al., 2020, pp. 92-94).

메콩 전력망은 이 지역에 에너지 거래 네트워크를 만들고 세계은행(World Bank),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및 ASEAN과 같은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들로부터 투자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캄보디아는 전력망을 통해 태국과 베트남으로부터 수력 발전을 유입했으며, 미얀마는 수력 발전 댐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을 받았다(Dosch and Hensengerth, 2005, p. 276; ECA, 2010, p. 25; Lee, 2015, p. 147; Schmeier, 2010, p. 33; Shin et al., 2020, pp. 92-94).

<그림 3> GMS 송전선 상호 연결



출처: 스티imson 센터 메콩 인프라 추적기 대시보드. (<https://www.stimson.org/2020/mekong-infrastructure-tracker-tool/>) (2023년 6월 8일 접속)

전력망의 송전선은 주로 110kV 및 230kV 송전선으로 구성된다. 500kV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다(ADB, 2012, p. 25; Shin et al., 2020, pp. 92-94). <그림 3>은 GMS 송전선의 상호 연결성을 보여준다. 태국과 라오스의 선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송전선의 경로를 나타내고 다양한 원 크기는 서로 다른 kV 용량을 나타낸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선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이는 정확한 세부 정보가 부족함을 나타낸다.

<표 1> GMS 국가 간 기존의 국경 간 전력 전송 연결

송신	수신	연결지점	용량(MW)	전압(kV)
중국	베트남	Xinqiao (Guman) - Lao Cai	300	220
중국	베트남	Maguan (Malutang) - Ha Giang	200	220
중국	베트남	Maomatiao - Ha Giang	115	110
중국	베트남	Hekou - Lao Cai	91	110
중국	베트남	Shengou - Mong Cai	25	110
중국	미얀마	Menglong - Jingyang	75	110
미얀마	중국	Shweli 1 HPP - Dehong	600	110
미얀마	중국	Dapein 1 HPP - Dehong	240	220
라오스	중국	NaMo - Mengla	60	500
라오스	태국	Nam Theun 2 HPP - Roi Et 2	950	500
라오스	태국	Houay Ho HPP - Ubon 2	126	230
라오스	태국	Theun Hinboun HPP - Thakhek - Nakhon 2	434	230
라오스	태국	Nam Ngum 2 - Na Bong - Udon 3	1050	500
라오스	태국	Hongsa TPP - Nan - Mae Moh 3	1878	500
라오스	태국	Hongsa TPP - Nan - Mae Moh 3	160	115
라오스	태국	Nam Leuk HPP - Pakxan - Bueng Kan	80	115

라오스	태국	Phontong - Nong Khai 1	160	115
라오스	태국	Pakbo - Savannakhet - Mukdahan 2	80	115
라오스	태국	Xeset HPP - Sirindhorn HPP - Ubon 1	80	115
라오스	태국	Xayaburi HPP - Tha Li - Kon Kaen 4	1220	500
라오스	태국	Pakse - Ubon 3	1220	500
라오스	베트남	Xekaman 3 HPP - Thanh My	250	220
라오스	베트남	Xekaman 1 HPP (Hatxan) - Pleiku	300	220
태국	캄보디아	Aranya Prathet - Banteay Mancheay	80	110
베트남	캄보디아	Chau Doc - Takeo - Phnom Penh	200	220

출처: ADB(2020)

중국은 GMS의 지역 전력 거래를 활용하여 포괄적인 수력 발전망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 국영 남방 전력망은 10개 이상의 수력 발전 댐을 통해 생성된 수력 발전을 동남아시아로 수출해 왔다. GMS에서 수력 발전 거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자금 조달과 정치적 약속을 통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에 베트남에 624MW, 라오스에 63MW의 전력을 수출했다(ADB, 2016, pp. 34-35). 이 지역의 수력 발전 거래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가 수력 발전 댐 건설을 연기시키고 하천 흐름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지역 전력 거래 분야에서 헤게모니적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Shin et al., 2020, pp. 92-94).

강 상류의 수력 발전 댐은 생태학적 피해를 유발하고 어업 이주 및 토착 공동체 재정착과 같은 다양한 우려를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인 해결책은 상당한 수력 발전 용량을 갖춘 국가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이다. 강수량이 감소하는 동안 중국에서 수력 발전을 수입하면 다른 GMS 국가에서 안정적인 수량 흐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Shin et al., 2020, p. 91; Weatherby and Eyler, 2017, p. 25).

미얀마는 에너지 거래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직 상당한 전력 수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현재 미얀마 인구의 35%만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ADB, 2016, p. 76). 전력망을

통한 국경 간 거래는 농촌 지역의 전력 공급을 지원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며, 갈등을 예방하고, 국가 전력망 시스템 개발에 기여한다(Shin et al., 2020, p. 91; Weatherby and Eyler, 2017, p. 14).

라오스는 주로 수력 발전 수출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으며, “내륙 연결” 국가로 변모하고 “동남아시아의 배터리”가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강 유역의 중간에 위치한 이 국가는 중국, 미얀마, 베트남 및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라오스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Shin et al., 2020, p. 91; Weatherby and Eyler, 2017, p. 10). 라오스에서 이웃 국가로의 수력 발전 수출은 2017년에 약 12억 3,300만 달러를 창출했다. 2030년까지 정부는 수력 발전량 30,000MW까지 늘릴 계획이다(Soutullo, Mesland, and Marie, 2019, p. 38).

급증하는 전력 수요로 인해 태국은 GMS 프로그램의 국경 간 에너지 거래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게 되었다. 태국은 라오스의 수력 발전 댐에서 수력 발전을 수입했으며, 이는 태국의 방콕 및 기타 주요 도시를 서비스하는 국가 전력망을 통해 전송된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은 회원국과의 지역 전력망을 통합함으로써 태국은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전력 공급원을 다양화할 수 있다(Shin et al., 2020, p. 92; Weatherby and Eyler, 2017, p. 18).

캄보디아의 경우 라오스 및 베트남과의 수력 발전 거래는 국가 어업을 보호하면서 메콩강을 따라 수력 발전 댐을 건설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오스로부터 수력 발전을 수입하면 농촌 지역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전기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메콩 전력망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덕분에 캄보디아가 수력 발전 댐 건설에 대한 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결국 베트남과 태국으로부터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력 발전 댐을 통해 순 전력 수출국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Shin et al., 2020, p. 91; Weatherby and Eyler, 2017, p. 17).

베트남은 중국,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여러 전력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ADB, 2016, p. 12). 특히 베트남은 2004년부터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전력을 수입해 왔다(ECA, 2010, p. 29). 수력 발전 수입은 경제적 및 생태학적 이점을 모두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베트남 메콩 델타에 매우 중요하다(Shin et al., 2020, p. 92; Weatherby and Eyler, 2017, p. 37).

4. 정책적 함의

GMS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경제 협력과 관련된 유형 2와 간접적인 경제 협력과 관련된 유형 4의 두 가지 유형의 이익 공유를 보여준다. 유형 2는 수력 발전 생성 및 후속 전력 거래와 관련된 하천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유형 4는 유형 2에서 볼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유형 3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의 혼합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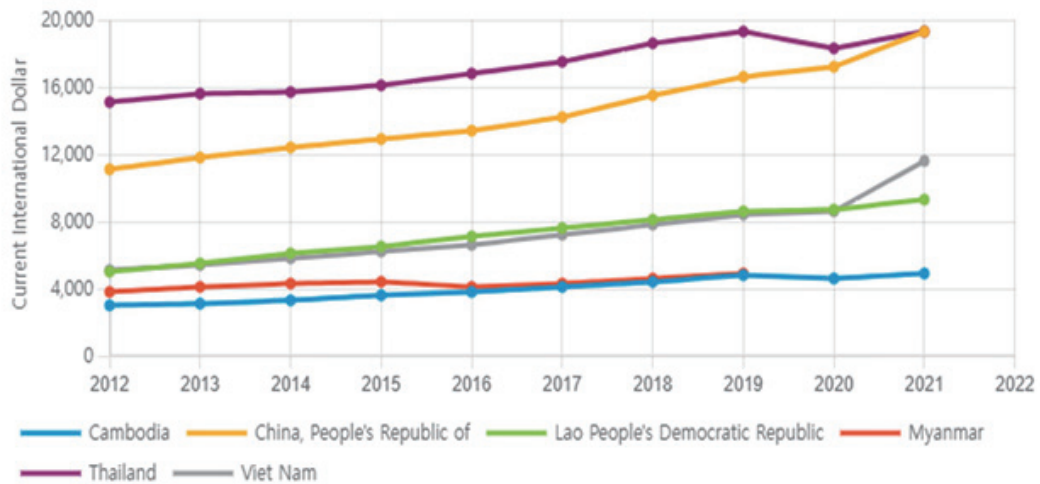
수력 발전 개발은 광역 메콩 지역에서 계속해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비수자원 영역은 빈곤을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해 왔다. 그러나 GMS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익 배분에 장애물이 존재한다. 유형 1은 하천에 부여된 이점을 증대시키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반면, 유형 3은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이견과 관련된 비용을 줄인다(Shin et al., 2020, pp. 94-99).

GMS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GMS 국가에서 빈곤을 완화하면서 사회경제적 발전과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Shin et al., 2020, pp. 94-99). 그림 4는 GMS 프로그램의 경제적 결과를 보여주며,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GMS 회원국에서 많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태국의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해당 기간 미화 15,000달러 미만에서 미화 19,300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여 다른 GMS 회원국과 비교하여 1인당 GDP가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였다. 중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관찰되었다.

베트남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GDP PPP 성장에서 눈에 띄는 수준을 달성하여 2021년 1인당 GDP가 약 11,600달러에 달했다. 미얀마의 구매력 평가 기준 GDP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소폭 감소한 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이 자료는 GMS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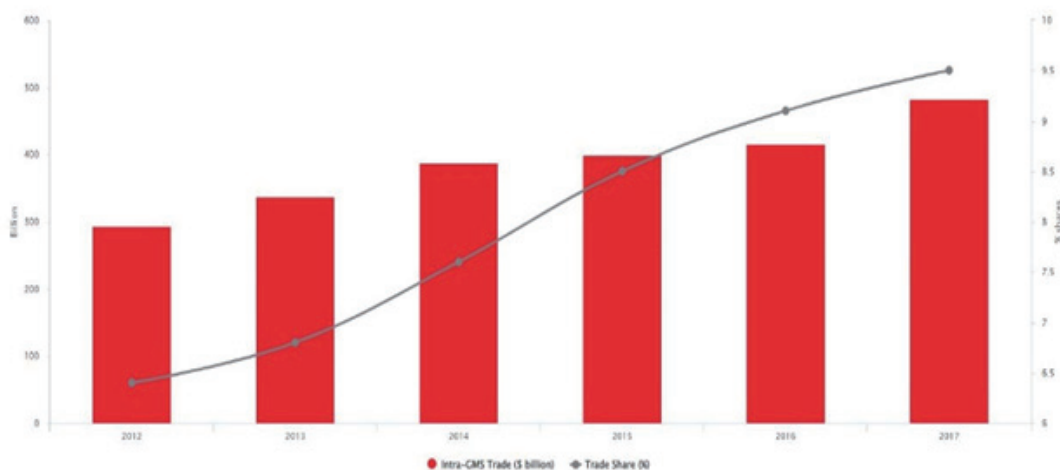
<그림 4>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출처: ADB 주요 지표 데이터베이스. (<https://kidb.adb.org/explore>) (2023년 6월 8일 접속)

<그림 5>에서 GMS 국가의 무역 점유율은 2012년 6.5%에서 2017년 약 9.5%로 증가했다. 2011년 미화 3천억 달러에서 2017년 거의 미화 5천억 달러로 GMS 내부 무역이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GMS 프로그램은 GMS 회원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림 5> GMS 내부 무역 (미화 수십억 달러 및 % 점유율)



출처: 아시아 개발 은행 아시아 지역 통합 센터 통합 데이터베이스. (2016)

메콩 전력망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점과 같이 GMS 국가에 수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다른 GMS 국가로의 수력 발전 수출, 다른 부문의 성장 촉진 및 석유 의존도 감소가 일부 경제적 이점이다. 메콩 전력망을 통한 수력 발전 전송은 메콩강 흐름에 거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GMS 국가 전체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맞출 수 있다. 사회적 이점으로는 전력 부족 감소 및 전기에 대한 대중 접근성 증가가 포함된다(Shin et al., 2020, pp. 94-99).

그러나, GMS 프로그램은 사회 환경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에서 대규모 댐 건설은 물고기 이동을 방해하고, 퇴적물을 막고, 하천 흐름을 교란하여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재정착된 사람들은 생계 손실과 빈곤에 취약할 수 있다. GMS 프로그램에서 유역 국가 간에 미해결된 정치적 긴장이 존재하며, 메콩 전력망 구축은 느린 진전을 보인다(Shin et al., 2020, pp. 94-99).

수력 발전 개발의 환경적 결과는 수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Soukhaphon, Baird, and Hogan, 2021, pp. 13-14). 건기 동안 대형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는 방법은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변경하여 생태계와 하천에 의존하는 공동체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Middleton, 2022, p. 255).

회원국이 유역에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된 공동체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Freeman et al., 2018, p. 14). 수력 발전 개발의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 닥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정책은 공동체가 직면한 필요와 문제를 반영하여 메콩강 유역에서 개발과 환경 보존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방식을 장려해야 한다(Yoshida et al., 2020, pp. 15-16).

또한, 메콩강 유역의 지정학적 환경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반영한다. 미국은 2009년에 하류 메콩 이니셔티브(Lower Mekong Initiative, LMI)를 설립하고 2020년에 메콩-미국 파트너십(Mekong-U.S. Partnership, MUSP)으로 확대했다. 이 파트너십은 상류 메콩 유역의 중국 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고 인도-태평양, 특히 메콩 유역 국가의 의사 결정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Elyer, 2022, p. 11).

LMC는 또한 하류 메콩 유역 국가의 물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만, 중국의 지배적인 역할과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유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은 긴장과 사회경

제적, 정치적 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강조하며, 이는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Kliem, 2020, p. 5).

5. 결론

본 연구는 메콩강 유역에 초점을 맞춰 GMS 프로그램의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성과를 평가했다. GMS 회원국들은 GMS 프로그램이 촉진한 경제적으로 통합된 지역 시장에 힘입어 연평균 GDP 성장률 5%를 달성했다. 특히 이 연구는 특히 수력 발전 및 메콩 전력망의 발전에 주목했는데, 이익 공유 이론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분석 프레임워크로 사용되었다.

GMS 프로그램은 에너지 부문, 특히 수력 발전 개발 및 메콩 전력망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이점을 창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시장을 창출하는 프레임워크 역할을 했으며 GMS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GMS 프로그램의 성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협력의 핵심은 GMS 회원국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장려하는 데 달려 있을 것이다.

메콩 전력망과 관련된 에너지 부문에서 GMS 프로그램은 GMS 국가 간의 수력 발전 에너지 거래를 촉진하고 회원국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익 공유 이론에 따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이익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 간의 다양한 목표를 고려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은 주로 에너지 안보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라오스로부터 수력 발전을 수입했으며, 이는 수력 발전 댐 건설 시 자원 보존과 각국의 전력 수요 충족을 포함한다. 에너지 거래는 메콩 전력망의 발전과 함께 GMS 국가 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했으며,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촉진하여 잠재적인 정치적 분쟁을 완화했다.

그러나 GMS 프로그램은 지역 생계 및 유역 생태계에 대한 수력 발전 개발의 영향과 같은 사회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 환경적 우려를 해결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위한 핵심 요소로 남아 있다.

강 유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은 지역 협력에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쟁은 단기적으로 일부 회원국에게 잠재적으로 유익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지역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MUSP를 통해 메콩강 유역에 43억 달러를 지원하여 국가의 개발과 경제 성장을 지원했다(미국 국무부, 2021).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미국은 보조금을 포함한 지원을 활용하여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게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줄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LMC에서 중국의 역할은 유역 국가에 투자를 제공하면서 유역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자율성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Erawati, 2021, pp. 10-12). 이 상황은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긴장과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며, 회원국들이 지정학적 위험을 신중하게 헤지(hedge)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GMS 프로그램은 메콩 전력망 구축과 메콩 국가의 수력 발전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 간의 에너지 거래 및 협력을 촉진했다. 그러나 하천 유역의 사회 복지 문제와 환경 지속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GMS 회원국 간의 추가 협력은 GMS 프로그램의 성공과 하천 유역에 대한 이점을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ADB. (2012). Greater Mekong Subregion Power Trade and Interconnection-2 Decades of Co-ope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29982/gms-power-trade-interconnection.pdf>.
- _____. (2016). Greater Mekong Subregion Energy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 Retrieved from [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188878/gms-energy-asr.pdf](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188878/gms-energy-asr.pdf)
- _____. (2018). The Ha Noi Action Plan 2018–2022. Retrieved from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409086/hanoi-action-plan-2018-2022.pdf>
- _____. (2020). Harmonizing Power Systems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Regulatory and Pricing Measures to Facilitate Trade. Retrieved from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615341/harmonizingpower-systems-gms-facilitate-trade.pdf>
- _____. (2021).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Strategic Framework 2030. Retrieved from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678631/gmseconomic-cooperation-strategic-framework-2030.pdf>
- ADB Key Indicators Database. <https://kidb.adb.org/explore>. (Accessed June 8, 2023) Asian Development Bank Asian Regional Integration Center Integration Database. (2016).
- Liu, B., Yao, K., Wang, F., Chi, X., and Gong, Y. (2022). Benefit Sharing in Hydropower Development: A Model Using Game Theory and Cost–Benefit Analysis. *Water*. 14(1208), 1-18.
- Chauhan, P. (2021). Power Trade in South Asia: Developing A Framework Based on Case Studies of Power Trading Arrangements in Europe and Asia. *South Asian Survey*. 28(2), 263-293.
- Chen, H., & Zhu, T. (2016). The complexity of cooperative governance and optimization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Land Use Policy*. 50, 363-370.

- Dorsch, J. and Hensengerth, O. (2005). Sub-Regional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he Mekong Basin.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4(2), 263-286.
- ECA. (2010). The potential of regional power sector integration: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transmission and trading case study. 1-85.
- Erawati, D. (2021). China's Hegemony of Mekong River and Its Influence on the Downstream Countries (Cambodia, Laos, Thailand, Vietnam). Jakarta: Universitas Nasional.
- Eyler, B. (2022).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Mekong: A Zero-Sum Game or a New Race to the Top?. *Asia Policy*. 29(2), 7-13.
- Freeman, C., Nahm, J., Ji, Z., Liu, C., Combs, C., Stack, D., Calvert, E., Hearty, G., Barkin, J., Patteson, J., DeSousa, K., Ross, L., Kozar, M., Matosich, M., Schloemann, R., Smith, S., Held, T., & Fan, Y. (2018). Challenges to Transboundary Water Governance in the Mekong River Basin.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2-20. Retrieved from https://sais.jhu.edu/sites/default/files/JHU_SAIS_Transboundary_Water_Governance_in_the_MRB.pdf
- Gruenwald, R., Wang, W., & Feng, Y. (2022). Politicization of the hydropower dams in the Lancang-Mekong Basin: A review of contemporary environmental challenges. *Energies*. 15(5), 1-23.
- Kittikhoun, A. and Staubli, D. (2018). Water diplomacy and conflict management in the Mekong: From rivalries to cooperation. *Journal of Hydrology*. 567, 654, 667.
- Kliem, F. (2020). The Geopolitics of the Mekong and a Radical Proposal for ASEAN to Navigate it.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1-11.
- Kummu, M and Varis, O. (2007). Sediment-related impacts due to upstream reservoir trapping, the Lower Mekong River. *Geomorphology*. 85, 275-293.
- Le, B. H., Nguyen, D. Q., Vu, K. T., Luu, H. N., & Taghizadeh-Hesary, F. (2020). Economic Cooper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35(2), 240-263.

- Lee, S. (2015). Benefit sharing in the Mekong River basin. *Water International*. 40(1), 139-152.
- Lee, S. and Lee, S. (2015). Cooperation in the Mekong River Basin through Benefit Sharing. *Southeast Asia Research*. 25(1), 275-310.
- Li, H. (2016). Institutions, Economic Transition, and Urban, and Urban Land Expansion in Chin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 United States.
- Middleton, C. (2022). The Political Ecology of Large Hydropower Dams in the Mekong Basin: A Comprehensive Review. *Water Alternatives*. 15(2), 251-289.
- MRC. (2022). Mekong Low Flow and Drought Conditions in 2019–2021. Vientiane: MRC Secretariat. <https://doi.org/10.52107/mrc.qx5yo7>.
- Qaddumi, H. (2008). Practical approaches to transboundary water benefit sharing.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292, 1-13.
- Sadoff, C. and Grey, D. (2002). Beyond the river: the benefits of cooperation on international rivers. *Water Policy*. 4, 389-403.
- _____. (2005). Cooperation on International Rivers A continuum for Securing and Sharing Benefits. *Water International*. 30(4), 420-427.

제3장

ASEAN에서 디지털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¹⁾

Keriya Run(고려대), 신경림(고려대)

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디지털화와 경제 성장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며, 광대역 보급을 통해 디지털화가 ASEAN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도전 과제와 향후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계/방법론/접근법 -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세계 개발 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모형과 모형을 적용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 기술과 ASEAN 경제 발전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결과 - 연구 결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유의미한 증거를 제시하며, 광대역 인프라 확대가 ASEAN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본 연구는 광대역 인프라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조명한다. 고정 광대역, 모바일 광대역, 고정 전화 가입자가 ASEAN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연구의 함의 - 본 연구는 디지털화와 경제 성장 간에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며, ASEAN에서 디지털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키워드: ASEAN, 디지털화, 경제 성장, 정보통신기술(ICT)

1) 본 논문은 2024년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20권 1호 게재된 논문을 번역한 것임.

1. 서론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사람, 소비자, 그리고 기업 간 상호작용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기인한다. 이는 새로운 제품과 프로세스의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 채널을 열었으며, 조직적 복잡성을 도입하고, 기술 진보를 용이하게 했다. 현대 경제는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및 기타 정보 기술의 통합인 디지털 기술에 크게 의존한다. 디지털 기술은 기업 운영 방식을 변화시켰으며, 정보 처리 및 저장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경우, 이들 경제는 디지털 기술을 다양한 수준으로 수용해 왔으며,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급속한 모바일 기술 채택, 중산층 증가, 젊고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ASEAN은 다른 지역에 비해 디지털화의 상당한 이점을 더 잘 활용하고 있다(ERIA, 2018). ASEAN의 국경 간 전자 상거래는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2020년에 총 3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선두주자로 부상했다(Lee Ki-Young and Kim Jin-Soo, 2022).²⁾ 라자다, 쇼피, 그랩페이(싱가포르), 토코페디아, 고젝(인도네시아)과 같은 유명 온라인 플랫폼은 팬데믹으로 촉발된 온라인 쇼핑 및 비즈니스 활동 급증 속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받으며 경제구조를 재편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인 인터넷의 도입은 글로벌 무역 파트너와 경제 발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으로 인해 공공 및 민간 조직 모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은 개인, 기업 및 국가에 수많은 이점을 제공하여 특히 기술 부문 내 고용률 증가에 기여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중소기업(SME)이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기업가들이 물리적 사무실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ERIA의 2018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ASEAN 중소기업의 72%가 디지털 기술을 채택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경제 공동체(AEC) 청사진 2025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ASEAN 경제 통합 로드맵 역할을 한다. 이는 연결성 강화 및 부문 협력이라는 포괄적인 틀 내에서 전자 상거래를 특히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ASEAN 정보통신기술 마스터플랜 2020은 사회경제적 성장과 발전에 있어

2)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국제 무역과 네트워킹 및 디지털화를 통합한 형태이다. 국내 및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는 소규모 국경 간 거래와 물류 서비스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Liu Jiaming and Zhou Huizhuo, 2023).

인터넷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지역 통합 및 연결성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이 마스터플랜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개별 국가 분석이 아닌, 지역 통합, 경제적 상호연결성, 정책 조율 등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지역적 관점에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회원국 간의 지역 통합 및 협력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이 지역 무역 패턴과 경제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한다. 더욱이, 투자, 노동 이동, 국경 간 전자 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개발, 지역 혁신 생태계와 같은 측면을 포함하여 역내 경제의 상호 연결된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ASEAN 수준에서 수행된 연구는 상호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동등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의 성과를 제고하면서 이 지역 디지털 전환의 통합된 특성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ASEAN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광대역 보급을 통한 디지털화의 영향을 조사하며, ASEAN 지역 내 정보통신기술(ICT)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자극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있어 ICT 투자와 인프라를 장려하는 이유를 탐구함으로써 ASEAN 경제 성장의 과제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광대역 보급(모바일 광대역, 고정 광대역, 고정 전화 가입을 포함)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영향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ASEAN의 디지털 환경 적응 수준을 평가하고, 광대역 보급률을 통해 디지털화의 영향을 분석하며, ASEAN 지역 전반의 경제 발전에 대한 ICT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및 지역 격차 완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은 광대역 보급률(이동 광대역, 고정 광대역, 고정 전화 가입을 포함)로 대표되는 기술적 영향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경제적 잠재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연구의 특정 측면을 다루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에서는 ASEAN 맥락에서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탐구하며, 다음 장에서는 ICT 발전과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을 다룬 포괄적인 문헌 검토를 행한다. 이후 4장에서는 모델과 다양한 변수를 명확히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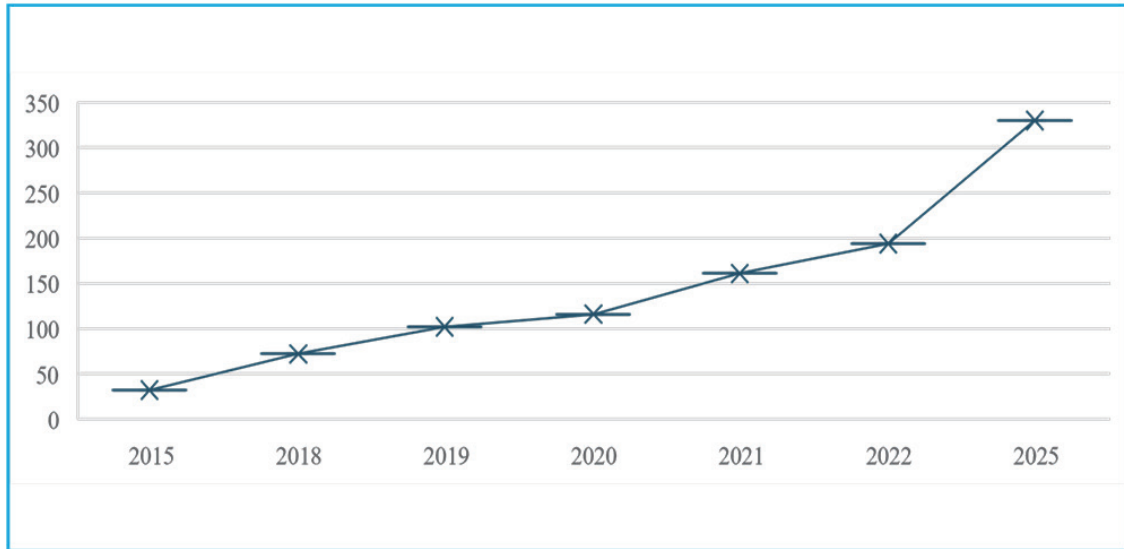
명하고 결과 및 후속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제안점과 한계를 종합하며, 본 연구 분야에서의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ASEAN의 디지털화

Temasek(2022)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와 미얀마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75% 이상의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이 지역의 디지털 경제는 빠른 확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전자 금융 서비스, 교통, 음식 배달, 온라인 거래 및 여행과 같은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이 지역의 디지털 경제 규모가 3,000억 달러를 초과하고, 2030년까지는 1조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ASEAN Secretariat, 2023).

또한, 전자상거래의 규제 완화와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규정을 수립하는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의 회원국인 ASEAN 국가들은 디지털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기준, ASEAN의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14.9% 증가한 3조 8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러한 성장은 주로 디지털화에 필수적인 에너지(52.5%) 및 전자기기(11.7%) 부문에서 이루어졌다(Li Zexu et al., 2023). Kameke(2023)는 동남아시아의 인터넷 경제가 2022년 1,940억 달러에서 2025년 3,3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Figure. 1). 이러한 성장은 동남아시아 각국의 경제 디지털화를 크게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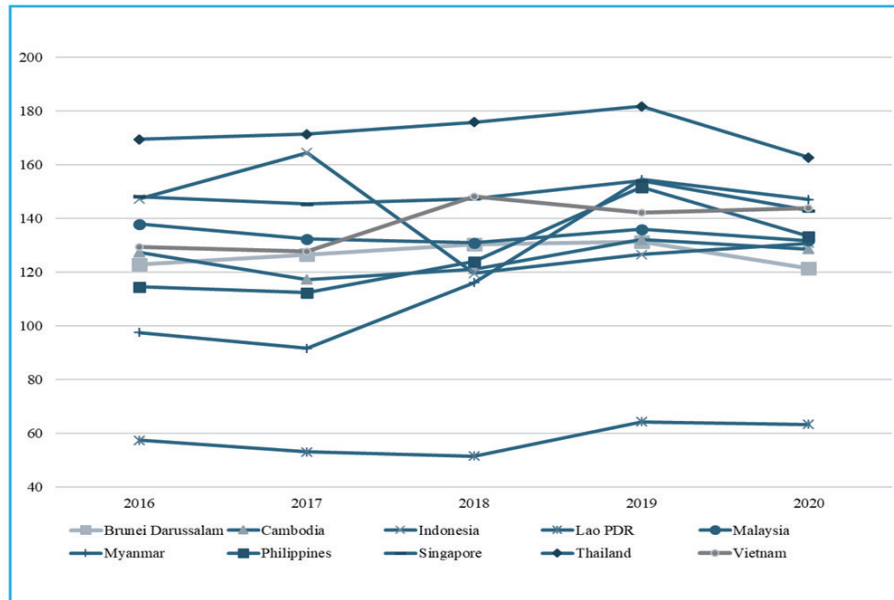
<그림 1>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터넷 경제 시장 가치



참고: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규모 (2015~2022) 및 2025년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Kameke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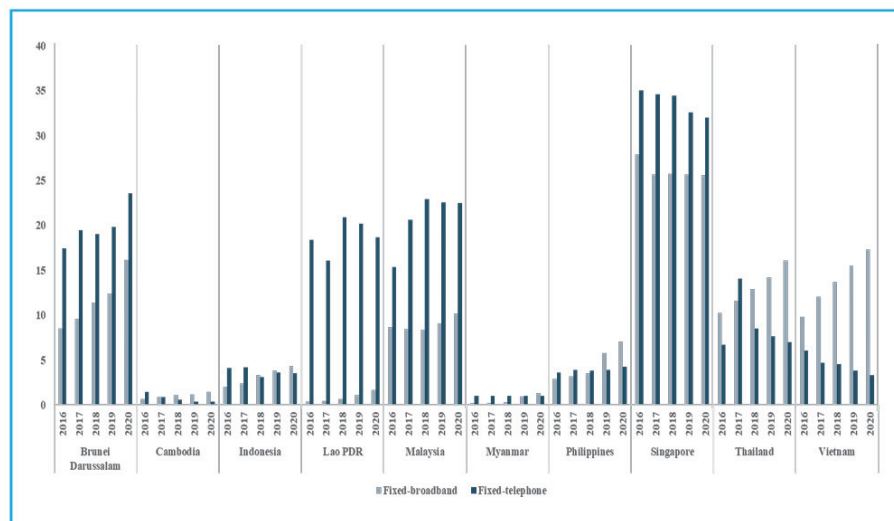
<그림 2>와 <그림 3>은 ASEAN에서 이동 광대역, 고정 광대역, 고정 전화 가입 건수의 증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증가는 투자 인프라 확장, 4G/LTE와 같은 향상된 인터넷 속도, 개인, 정부 및 통신 회사의 통신을 위한 휴대폰 의존도 증가에 기인한다. 인구 100명당 이동 광대역 가입 건수는 태국이 160건 이상으로 일관되게 가장 높고, 라오스가 약 60건으로 가장 낮다. 라오스를 제외하고 9개국은 2020년 기준 120건 이상의 이동 광대역 가입 건수를 보유하고 있다(그림 2). 인구 100명당 고정 광대역 및 고정 전화 가입 건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싱가포르가 가입 건수가 가장 많고,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가장 적다.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 국가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고정 광대역 가입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3). ASEAN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에 진전이 있지만, 회원국 간 디지털화 격차는 여전히 두드러진다.

<그림 2> ASEAN의 인구 100명당 이동 광대역 가입 건수 (2016-2020)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2023)

<그림 3> ASEAN의 고정 광대역 및 고정 전화 가입자 수 (인구 100명당, 2016-2020)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2023)

3. 문헌 조사

디지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 세계적인 의사소통, 업무, 여행 및 행동 방식을 재구성하며 막대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ICT를 통해 유비쿼터스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과 함께, 유례 없는 연결성을 촉진해 왔다. ICT는 현대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어 경제 및 사회 활동의 거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다. ICT의 존재는 인간 상호 작용, 비즈니스 운영 및 정부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Arendt, 2015).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시장 채널, 통신 플랫폼, 고급 운송 경로의 등장은 일상생활에 편리함과 복잡성을 동시에 가져왔다. ICT를 포함한 기술 동향은 종종 성공의 핵심 지표로 간주된다(Myovella et al., 2019). 따라서 성장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는 ICT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Acemoglu and Robinson, 2013). 이는 통신 인프라 개발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으로 이어진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기업의 글로벌 경제 활동 참여에 필수적이며, 기술 발전 및 ICT 도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미래의 업무 형태를 형성한다.

따라서 디지털화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는 신고전파 경제 성장 이론(Solow, 1956)과 신슈페터리안(Neo-Schumpeterian) 이론(Bahrini and Qaffas, 2019; Pyka and Andersen, 2012; Schumpeter and Backhaus, 2003)과 같은 고전적인 생산 요소 이론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디지털 기술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주로 선진국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주로 중부 및 동부 유럽(CEE),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및 OECD 국가에서 이루어졌다(Arendt, 2015; Myovella et al., 2019). 디지털 기술은 데이터 저장, 계산 및 전송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여 경제 활동의 변화를 가져온다(Goldfarb and Tucker, 2017). ICT는 자본 생산 요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 나아가, ICT의 이점은 거래 비용 감소, 고용 기회 촉진, 지식 생성 및 가격 불안정 완화로 확대된다(Bahrini and Qaffas, 2019; Haftu, 2019; Jorgenson and Stiroh, 1999; Lee et al., 2012; Pradhan et al., 2018; Röller and Waverman, 2001; Vu, 2011).

ICT의 긍정적인 영향은 경제 성장을 넘어 기대 수명, 교육, 건강 개선 및 빈곤 감소를 포괄한다 (Grossman and Helpman, 1991). 이는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필수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ICT의 영향력은 국가마다 다르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Dewan and Kraemer, 2000; Thompson and Garbacz, 2011).

ICT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다수의 연구에서 디지털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와 같은 개발도상 지역이나 미국 및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에 초점을 맞추었다(Myovella et al., 2019). 연구에 따르면 ICT는 전화, 컴퓨터, 유선 전화 사용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특히 선진국에서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uber and Koutroumpis, 2014; Inklaar et al., 2005; Koutroumpis, 2009; Sassi and Goaid, 2013; Vu, 2011). 반대로, 연구에서는 저소득 국가가 모바일 접근 단계가 더 낮다는 것을 입증했다(Albiman and Sulong, 2016; Gruber and Koutroumpis, 2010; Wamboye et al., 2015; Ward and Zheng, 2016; Vu, 2011). 최근 분석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신흥국 및 선진국 간의 ICT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iebel, 2018).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개별 회원국이 아닌 ASEAN의 경제 발전에 대한 디지털화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경제 및 문화적 배경 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자 상거래, 디지털 결제,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디지털 인프라 및 전자 정부와 같은 영역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ASEAN 지역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ICT 확산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ICT가 ASEAN 내 무역을 가속화하여 역내 무역 흐름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Hermawan et al., 2019). 마찬가지로, Jing et al.(2020)은 ASEAN 5개국에서 ICT와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입증했으며, 유선 전화 가입이 5개국의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ASEAN 지역 내 디지털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디지털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최신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ASEAN을 중심으로 ICT 발전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측정하며, ASEAN 회원국의

디지털화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실증 분석

1.1 데이터 수집

본 논문은 디지털화가 ASEAN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세계 개발 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과 ASEAN 경제 발전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 ASEAN 국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본 연구는 해당 지역의 디지털화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여 ASEAN의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살펴보려고 한다.

1.2. 실증 모형

본 연구는 고정 효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국가 간 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다. 고정 효과 모형은 개체별 고유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특히 유용하며, 개인, 기업, 국가와 같은 연구 대상 간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 또는 이질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만 개체간에 상이하며 이론적으로 중요한 변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는 고정 효과를 통해 통제된다. 특히,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이 각 개체에 고유하게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 경우, 고정 효과 모형은 이를 통제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본 연구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Islam(1995)이 제시한 접근 방식을 따라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신 인프라의 지속적인 효과를 추정한다.

또한, 본 연구는 디지털화의 영향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간의 비교 분석에 기반을 둔다. Myovella et al.(2019)은 국가의 1인당 소득과 ICT 채택 간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했다. 이 연구는 ICT와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SSA와 OECD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국가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제 무역 개방성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인구 증가율, 국내 총 투자 및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연간 정부 소비 지출이 경제 성장의 다른 중요한 결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모바일 보급률, 인터넷 사용량 및 고정 광대역 가입 건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도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ICT 채택이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크게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Myovella et al. (2019)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현실 세계 시나리오에 더 부합하는 새로운 변수를 통합하여 ASEAN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모형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입된 변수를 고려하여 모델을 수립하고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ASEAN 사례 연구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dppcg_{it} = \beta_0 + \beta_1 fbs_{it} + \beta_2 mbs_{it} + \beta_3 fts_{it} + \beta_4 lngdppc_{it} + \beta_5 popgr_{it} + \beta_6 lf_{it} + \beta_7 hdi_{it} + \beta_8 gfcf_{it} + \beta_9 top_{it} + \mu_i + \mu_t + \varepsilon_{it}$$

본 식에서 i 는 국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i = 1, \dots, 10$ 이고, t 는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t = 2008, \dots, 2020$ 이다. 종속변수인 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gdppcg$)은 경제 동향을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지표이다. 고정 광대역 가입 건수(fbs), 이동 광대역 가입 건수(mbs) 및 고정 전화 가입 건수(fts)는 정보통신기술(ICT) 영역 내에서 설명 변수로 사용된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인구 증가율과 경제 성장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음을 고려하여 인구 증가율을 포함한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lngdppc$), 노동 참여율(lf) 및 인간 개발 지수(hdi)와 같은 추가적인 통제 변수를 포함하였다. $lngdppc$ 는 국가 간 생활수준 차이를 고려하는데 사용되는 반면, lf 는 고용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hdi 는 교육, 건강 및 생활 수준과 같은 차원을 포괄하는 국가 발전에 대한 총체적인 척도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는 국가 및 시간의 고정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μ_i 와 μ_t 를 사용했으며, 오차항은 ε_{it} 로 표시되었다.

1.3 결과

<표 1>은 전체 변수의 기술 통계를 보여준다. ASEAN 국가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gdppcg)은 평균 3.30%, 표준편차는 3.60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0명당 고정 광대역 가입 건수(fbs), 인구 100명당 이동 광대역 가입 건수(mbs) 및 인구 100명당 고정 전화 가입 건수(fts)는 각각 6.76 ± 7.77 , 111.38 ± 39.54 및 11.76 ± 10.60 (평균 $\pm$ 표준편차)이었다.

<표 1> 변수의 기술통계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i>gdppcg</i>	130	3.300	3.603	-10.979	12.508
<i>fbs</i>	126	6.756	7.769	0.0205	27.869
<i>mbs</i>	130	111.378	39.538	0.7539	181.767
<i>fts</i>	129	11.760	10.601	0.309	38.773
<i>lngdppc</i>	130	8.449	1.265	6.649	11.025
<i>popgr</i>	130	1.238	0.595	-0.312	5.322
<i>lf</i>	130	70.449	6.041	56.914	81.866
<i>hdi</i>	130	0.707	0.119	0.465	0.943
<i>gfcf</i>	125	26.734	5.403	13.672	40.891
<i>top</i>	124	1.246	0.873	0.118	4.373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는 고정 광대역 가입 건수, 이동 광대역 가입 건수 및 고정 전화 가입 건수를 고려하는 기술 요소로 측정된 디지털화가 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gdppc)로 측정된 10개 ASEAN 국가의 경제 성장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정 광대역 가입 건수(fbs)는 경제 성장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 설명

변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성장(gdppcg)에 약 47%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인구 100명당 이동 광대역 가입 건수(mbs)는 ASEAN 국가의 경제 성장에 3.11%의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주요 독립 변수의 가설 검증 결과, 양측 p값은 0.05보다 낮으며(각각 0.00 및 0.021), 이는 이 두 독립 변수가 95% 및 90% 신뢰 수준에서 종속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 전화 가입 건수(ft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높은 계수 수준을 고려할 때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ASEAN 국가의 경제 성장에 대한 디지털화의 영향

종속 변수	(1) gdppcg	(2) gdppcg	(3) gdppcg	(4) gdppcg	(5) gdppcg	(6) gdppcg	(7) gdppcg
lbs	0.366* (2.38)	0.463* (3.04)	0.463* (3.04)	0.548** (4.03)	0.535*** (6.15)	0.559*** (5.6)	0.475** (4.42)
mbs	-0.00269 (-0.27)	0.00899 (0.72)	0.00899 (0.72)	0.0222 (1.77)	0.041000** (3.80)	0.036500* (2.48)	0.031100* (2.90)
fts	0.0251 (0.43)	0.0753 (1.25)	0.0753 (1.25)	0.118 (1.89)	0.157* (2.51)	0.161 (2.17)	0.145 (1.97)
lngdppc		2.364 (0.80)	2.364 (0.80)	1.486 (0.43)	10.66*** (4.97)	12.73*** (4.91)	7.99 (2.22)
popgr		-1.927*** (-8.21)	-1.927*** (-8.21)	-1.645*** (-5.51)	-1.908*** (-8.69)	-2.185*** (-10.86)	-2.817*** (-10.10)
lf				0.323* (2.95)	0.234 (1.82)	0.228 (1.60)	0.273 (1.66)
hdi					-104.3** (-4.14)	-103.8* (-2.57)	-62.94 (-1.79)
gfcf						0.103 (1.09)	0.119 (1.89)
top							4.206* (2.55)

_cons	-6.842*	-28.7	-28.7	-47.13	-46.18	-66.67*	-62.31*
	(-3.22)	(-1.17)	(-1.17)	(-1.67)	(-1.84)	(-2.60)	(-2.74)
관측수	125	125	125	125	125	120	119
R-Squared	0.58	0.58	0.63	0.66	0.69	0.69	0.73
국가 수	10	10	10	10	10	10	10
연도 더미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주) 괄호 안의 값은 강건 표준 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나타냄.

*p<0.05, **p<0.01, ***p<0.001.

4. 연구 결과 논의

본 연구 결과는 ASEAN 국가의 경제 성장에 있어 광대역 인프라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설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 회귀 분석에 따르면 고정 광대역, 이동 광대역 및 고정 전화 가입 건수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고정 효과 모형은 인구 100명당 고정 광대역 가입 건수가 1건 증가할 때마다 경제 성장이 47.48%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인구 100명당 이동 광대역 및 고정 전화 가입 건수는 각각 0.03과 0.15의 긍정적인 계수를 갖는다.

Salahuddin and Alam(2016)은 광대역 인프라 확대가 저소득 국가의 경제 수준에 크게 기여하므로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언급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광대역 보급률이 선진국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광대역 인프라가 개발됨에 따라 경제적 성공의 기회가 창출된다(Alam et al., 2019; Mayer et al., 2020). 따라서 저소득 국가에서 광대역 인프라가 더 많이 개발될수록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 디지털화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광대역 보급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시켜 준다. 다시 말해, 산업적 관점에서 볼 때 선진국은 수년 동안 광섬유 케이블, 케이블 네트워크 및 기타 고속 광대역

기술을 배치할 수 있는 더 큰 역량을 보유하여 소비자에게 더 넓은 범위와 더 높은 속도를 제공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첨단 광대역 기술 및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자원을 할당하고 투자하는 데 더 나은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 달리 잘 구축된 규제 체계와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체계와 정책은 기능성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광대역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문해력 수준이 더 높고 현대화된 경향을 보인다. 반면, 개발도상국,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여전히 디지털 격차와 기술 인프라 준비도와 관련된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광대역 인프라 확장의 중요성과 그것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강조한다. 세 가지 독립 변수 중 고정 광대역 가입 건수가 다른 두 변수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경제의 확장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많은 정부 기관, 기업, 그리고 교육 기관이 고속 인터넷 연결에 점점 더 의존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비즈니스, 전자정부, 그리고 기타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증가는 모바일 광대역이나 고정 전화 가입보다는 고정 광대역 가입과 같은 신뢰성과 고속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기인한다. 또한, 이는 ASEAN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고정 광대역, 이동 광대역 및 고정 전화 가입 건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는 특히 정책 입안자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광대역 인프라 개발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1인당 국내총생산 로그값, 노동 참여율, 총 고정 자본 정보 및 무역 개방도와 같은 여러 다른 변수 또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변수의 계수 값은 5% 수준에서 각각 7.99, 0.27, 0.12 및 4.20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도상국이 성장 여지가 많으며, 이러한 변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더 높은 소득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본 연구 결과는 인간 개발 지수와 성장률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이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종종 더 높은 수준의 교육, 건강 등으로 연결된다는 예상과 일치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고정 광대역, 이동 광대역 및 고정 전화 가입 건수를 포함하는 광대역 보급률을 통해 국가의 GDP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디지털화의 확산에 관련한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대역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특히 ASEAN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ICT 투자 확대와 ICT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팬데믹은 디지털 투자, 연결성 및 온라인 기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디지털화 전환을 가속화했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복지 증진, 공공 서비스 개선,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첨단 기술, 혁신적 사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수적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교육, 의료, 금융, 그리고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포용적 혁신 정책을 촉진한다. 동시에 기업은 디지털화를 통해 비용 절감, 운영 효율화, 고객 서비스 개선을 실현하고 있다. ASEAN 지역에서는 전자상거래, 금융, 운송 분야에서 급속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의 빠른 확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 사이버 보안 협력 전략(2021-2025)은 회원국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광대역 인터넷 속도 및 사용량의 격차는 국가 간 및 국가 내 모두에서 지속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안 보장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직면한 지속적인 도전 과제 중 하나이다. COVID-19 팬데믹은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추가적인 과제를 만들어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과세와 관할권과 관련된 새로운 어려움을 제기하며,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수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조직 구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부족으로 인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최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ASEAN 국가들이 광범위한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가 간 및 개인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ICT

접근성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ICT 지식을 증진시키는 국내 지원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경제 발전에서 디지털화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 학계,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효과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ASEAN 10개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디지털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데이터 한계로 인해 디지털화를 나타내는 설명 변수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ASEAN에서 디지털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디지털 경제 지표를 포함하여 디지털화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고 그 경제적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디지털 전환 격차를 분석하고,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Acemoglu, D. and Robinson, J. A. (2013), *Why nations fail*, Crown Publishers.
- Alam, T. F., Sultana, N. and Rayhan, M. I. (201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 application of broadband penetration and GDP growth in Asia, *Journal of Economic Structures*, 8(17). <https://doi.org/10.1186/s40008-019-0148-0>
- Albiman, M. M. and Sulong, Z. (2016), The role of ICT use to the economic growth in Sub-Saharan African region (SSA),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Management*, 7(3), 306-329. <https://doi.org/10.1108/JSTPM-06-2016-0010>
- Arendt, L. (2015), The digital economy, ICT and economic growth in the CEE countries, *Olsztyn Economic Journal*, 10(3), 247-262. <https://doi.org/10.31648/oiej.3150>
- ASEAN Secretariat (2023),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DEFA): ASEAN to leap forward its digital economy and unlock US\$2 Tn by 2030*. <https://asean.org/asean-de-fa-study-projects-digitaleconomy-leap-to-us2tn-by-2030/>
- Bahrini, R. and Qaffas, A. A. (2019), Imp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n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Economies*, 7(1). <https://doi.org/10.3390/economies7010021>
- Dewan, S. and Kraemer, K. L. (2000), Information technology and productivity: Evidence from country-level data, *Management Science*, 46(4), 548-562. <https://doi.org/10.1287/mnsc.46.4.548.12057>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 (2018), *Study on MSMEs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economy in ASEAN: Nurturing ASEAN MSMEs to embrace digital adoptio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https://www.eria.org/uploads/media/Books/2019October-ERIA-ASEAN-Study-On-MSMEs-Participation.pdf>
- Goldfarb, A. and Tucker, C. (2017), *Digital economics* (NBER Working Paper, No. 23684), NBER. <https://www.nber.org/papers/w23684>

- Grossman, G. M. and Helpman, E. (1991), *Innovation and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MIT Press.
- Gruber, H. and P. Koutroumpis (2010), Mobile communications: Diffusion facts and prospects, *Communications and Strategies*, 77, 133-145.
- Gruber, H. and Koutroumpis, P. (2014),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the impact on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Policy*, 26(67), 387-426. <https://doi.org/10.1111/j.1468-0327.2011.00266.x>
- Haftu, G. G. (2019),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economic growth in Sub-Saharan Africa: A panel data approach, *Telecommunications Policy*, 43(1), 88-99. <https://doi.org/10.1016/j.telpol.2018.03.010>
- Hermawan, I., Budiayanti, E. and Rivani, E. (2019), The imp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on ASEAN trade flow, *Proceed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de 2019 (ICOT 2019)*, 180-184.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6307781_The_Impact_of_Information_and_Communication_Technology_ICT_on_ASEAN_Trade_Flow
- Inklaar, R., O'Mahony, M. and Timmer, M. (2005), ICT and Europe's productivity performance: Industry level growth account comparisons with the United Stat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1(4), 505-536. <https://doi.org/10.1111/j.1475-4991.2005.00166.x>
- Islam, N. (1995), Growth empirics: A panel data approac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1127-1170.
- Jing, A. H. Y., Ab-Rahim, R. and Ismail, F. (2019),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income inequality in ASEAN-5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Business and Social Sciences*, 9 (9), 359-373.
- Jorgenson, D. W. and Stiroh, K. J. (1999), Information technology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9(2), 109-115. <https://doi.org/10.1257/aer.89.2.109>
- Kameke, A. V. (2023), *Internet economy size in Southeast Asia from 2015 to 2022*, with a fore-

- cast for 2025,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58419/southeast-asia-internet-economymarketsize/#:~:text=In%202022%2C%20the%20internet%20economy,approximately%20194%20billion%20U.S.%20dollars>
- Koutroumpis, P. (2009), The economic impact of broadband on growth: A simultaneous approach, *Telecommunications Policy*, 33(9), 471-485. <https://doi.org/10.1016/j.telpol.2009.07.004>
- Lee, Ki-Young and Kim, Jin-Soo (2022), The international issues and future tasks in digit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8(6), 321-335. <https://doi.org/10.16980/jitc.18.6.202212.321>
- Lee, Sang H., Levendis, J. and Gutierrez, L. (2012), Telecommunications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analysis of sub-Saharan Africa, *Applied Economics*, 44(4), 461-469. <https://doi.org/10.1080/00036846.2010.508730>
- Li, Zexu, Han, Ki-Moon and Cho, Hyun-Wook (2023), The impact of RCEP on ASEAN trade: Focusing on Korea's response strategie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9(6), 145-160. <https://doi.org/10.16980/jitc.19.6.202312.145>
- Liu, Jiaming and Zhou, Huizhuo (2023), A study on the effects of cross-border e-commerce platform brand image on brand trust, brand attitude, and brand loyalty,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9(4), 31-49. <https://doi.org/10.16980/jitc.19.4.202308.31>
- Mayer, W., Madden, G. and Wu, C. (2020), Broadband and economic growth: A reassessment, *Inform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26(1), 128-145.
- Myovella, G., Karacuka, M. and Haucap, J. (2019), Digit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Saharan Africa and OECD economies, *Telecommunications Policy*, 44(2), 101856. <https://doi.org/10.1016/j.telpol.2019.101856>
- Niebel, T. (2018), ICT and economic growth: Comparing developing, emerging and developed countries, *World Development*, 104, 197-211.
- Pradhan, R. P., Mallik, G. and Bagchi, T. P. (2018),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 infra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A causality evinced by cross-country panel data, *IIMB Management Review*, 30(1), 91-103. <https://doi.org/10.1016/j.iimb.2018.01.001>
- Pyka, A. and Andersen, E. S. (2012), Introduction: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 demand, finance, organization, policy and innovation in a Schumpeterian perspective,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22(4), 621-625. <https://doi.org/10.1007/s00191-012-0279-z>
- Röller, L. H. and Waverman, L. (2001),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A simultaneous approach, *American Economic Review*, 91(4), 909-923.
- Salahuddin, M. and Alam, K. (2016),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lectricit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A panel data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ical Power & Energy Systems*, 76, 185-193. <https://doi.org/10.1016/j.ijepes.2015.11.005>
- Sassi, S. and Goaied, M. (2013), Financial development, ICT diffusion and economic growth: Lessons from MENA region, *Telecommunications Policy*, 37(4-5), 252-261. <https://doi.org/10.1016/j.telpol.2012.12.004>
- Schumpeter, J. and Backhaus, U. (2003),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In J. Backhaus (Ed.), *Joseph Alois Schumpeter: Entrepreneurship, style and vision*, Springer, 61-116. https://doi.org/10.1007/0-306-48082-4_3
- Solow, R. M. (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1), 65-94. <https://doi.org/10.2307/1884513>
- Temasek (2022), e-Conomy SEA spotlight 2022: *Through the waves, towards a sea of opportunity*, Google, Temasek and Bain & Company. https://www.temasek.com.sg/content/dam/temasek-corporate/news-and-views/resources/reports/e_Conomy_SEA_2022_report.pdf
- Thompson, H. G., Jr. and Garbacz, C. (2011), Economic impacts of mobile versus fixed broadband, *Telecommunications Policy*, 35(11), 999-1009. <https://doi.org/10.1016/j.telpol.2011.07.004>
- Vu, K. (2011), ICT as a source of economic growth in the information age: Empirical evidence

- from the 1996-2005 period, *Telecommunications Policy*, 35(4), 357-372. <https://doi.org/10.1016/j.telpol.2011.02.008>
- Wamboye, E., Tochkov, K. and Sergi, B. S. (2015), Technology adoption and growth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57(1), 136-167. <https://doi.org/10.1057/ces.2014.38>
- Ward, M. R. and Zheng, S. (2016),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China, *Telecommunications Policy*, 40(2-3), 89-101. <https://doi.org/10.1016/j.telpol.2015.06.005>
- World Bank (202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부록

부록 A. ASEAN 국가의 소득 수준별 분류

국가 번호	국가	소득 분류
1	브루나이	고소득
2	캄보디아	중하위 소득
3	인도네시아	중하위 소득
4	라오스	중하위 소득
5	말레이시아	중상위 소득
6	미얀마	중하위 소득
7	필리핀	중하위 소득
8	싱가포르	고소득
9	태국	중상위 소득
10	베트남	중하위 소득

부록 B. 변수 정의

변수	약어	정의
1인당 GDP 성장률 (GDP per capita growth)	gdppcg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GDP를 연중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구매자 가격 기준 GDP는 거주 생산자가 창출한 총 부가가치에서 세금 및 보조금을 제외한 값으로, 자산 감가상각 및 자연 자원 고갈은 포함하지 않음.
1인당 GDP (GDP per capita)	gdppc	GDP를 연중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 GDP는 모든 거주 생산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으로, 세금은 포함되나 보조금은 제외됨. 본 지표는 2015년 기준 미국 달러로 산출되며, 자산 감가상각 및 자연 자원 고갈은 포함하지 않음.
고정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Fixed broadband subscription)	fbs	고정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를 총 인구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계산함.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	mbs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 수를 기준으로 100명당 가입자 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표준 및 전용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을 포함하며 실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
고정 전화 가입자 수 (Fixed telephone subscriptions)	fts	고정 전화 가입자 수는 활성 아날로그 고정 전화선,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가입, 고정 무선 로컬 루프(WLL, Wireless Local Loop) 가입, ISDN 음성 채널, 고정 공중전화 등을 포함함.
인구 성장률 (Population growth)	popgr	연간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며, 법적 지위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를 포함하는 사실상의 인구 정의를 기반으로 함.
무역 개방성 (Trade openness)	top	한 국가의 수출입 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로, 해당 국가의 경제 개방 수준을 나타냄.
고정 자본 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gfcf	고정 자본 형성은 토지 개선, 공장, 기계, 장비, 도로, 철도, 건물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귀중품의 순취득을 포함함.
노동 참여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lf	노동 참여율은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 중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로, 일정 기간 동안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함.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hdi	인간개발지수(HDI)는 장수와 건강한 삶, 지식 수준, 적절한 생활 수준이라는 인간 개발의 주요 차원에서 평균 성취도를 측정하는 종합 지표임.

참고: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 개발 지표(WDI)에서 수집되었으며, 인간개발지수(HDI) 데이터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제공되었음.

제4장.

디지털 공공외교를 활용한 필리핀 국가 이미지 제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례 연구¹⁾

윤선우(고려대), 임시정(고려대)

초록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 공공외교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한국인이 가진 필리핀 국가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인스타그램 게시물 내용 분석을 통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디지털 공공외교 메시지를 크게 경청 (Listening), 문화 (Culture), 옹호 (Advocacy)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속하는 게시물 세 가지를 한국인 조사 참가자에게 무작위로 보여주는 설문 실험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은 디지털 공공외교가 필리핀 국가이미지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사관이 한국인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국가 이미지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공공외교 분야에서 중요한 학문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1) 본 논문은 2024년 동남아연구 34권 2호에 게재된 논문을 번역한 논문임.

1. 서론

공공외교는 특정 외국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자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고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는 외교적 관행을 의미한다(Gilboa, 2008; Kim, 2022). 공공외교의 발전은 정보기술의 진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간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대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외교 정책 결정에서 여론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며 디지털 공공외교의 시대를 열었다(Cull, 2013; Gilboa, 2016).

기존 연구는 주로 선진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관행을 정치 지도자와 대사관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탐구해 왔다(Lee, 2017; Collins & Bekenova, 2019).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외교 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드물다. 일부 연구가 존재하지만, 이들 연구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대개 대사관 게시물이 공공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좋아요, 공유, 팔로워 수와 같은 단순 정량적 데이터에 의존한다(Bali et al., 2018).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의 디지털 공공외교를 평가하고, 이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하위 중소득국가(lower-middle-income country)으로 분류되는 발신국이 고소득국가(high-income country)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활동을 분석하려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²⁾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한국 대중에게 필리핀의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대사관 게시물에 노출되는 것이 한국인에게 필리핀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가? 또한, 대사관 게시물 중 어떤 콘텐츠가 필리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가?

본 연구는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대사관이 인스타그램을 공공외교 도구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이론적 틀에 기반한 대사관 게시물의 콘텐츠 분석을 수행하고, 대사관의 공공외교 팀과 계약된 한국 컨설팅 회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한다.

2) 이후 본문에서 “대사관”은 서울에 위치한 필리핀 공화국 대사관을 의미한다.

두 번째이자 핵심 부분에서는 대사관 게시물의 인과적 효과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독창적인 설문 조사 실험을 설계하여, 한국인 응답자들을 세 가지 대사관 인스타그램 게시물 중 하나에 노출시키고, 아무 게시물에도 노출되지 않은 통제 그룹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대사관의 디지털 외교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필리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공공외교의 ‘(listening)’ 요소를 강조하는 게시물(즉, 대사관이 한국인의 관점을 하려는 노력을 부각하는 콘텐츠)이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 외교 영역에서 학문적,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기존에 간과되었던 주요 행위자인 지역 대사관을 디지털 공공외교의 핵심 주체로 부각시킴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망한 방안을 제시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공공외교 요소와 대사관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외교 활동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 기대와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1부의 방법론을 제시하며, 콘텐츠 분석과 인터뷰 결과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설문 조사 실험에 초점을 맞춘 2부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결과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디지털 공공외교와 그 효과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외교적 소통의 주요 채널로 자리 잡아, 정부가 전 세계 대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Gilboa, 2016). 동영상, 사진, 링크 공유와 같은 역동적인 도구를 갖춘 소셜 미디어는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더 넓은 대중에게 도달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Adesina, 2017).

따라서 디지털 공공외교는 전통적인 공공외교 방식의 실행에 있어 자원 제약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의 정부 행위자들에게 특히 유리하다. 디지털 플랫폼은 이들에게 외국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제공하며, 제한된 자원으로도 효과적으로 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Manor & Segev, 2015).

기존 문헌은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여 외교활동을 분석해왔으나, 이는 주로 서구 국가들(Darnton, 2020) 및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중국(Mattingly & Sundquist, 2023; Mattingly et al., 2024)을 발신국으로 한 외교활동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관이 수행하는 디지털 공공외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odd와 Collins(2017)는 중앙동유럽(Central Eastern European, CEE) 및 서구 국가를 대표하는 41개의 대사관 트위터 계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CEE와 서구 대사관 모두 주로 정보 제공 중심의 공공 관계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대사관은 주로 옹호(advocacy)에 중점을 두는 반면, CEE 대사관은 문화 외교(cultural diplomacy) 접근법을 통해 자국의 문화 자원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두 그룹 모두 (listening) 요소의 활용 빈도는 가장 낮았다.

Lee(2017)은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8개 선진국 대사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분석하였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양방향 소통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빈번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또한, 한국에 주재한 선진국 대사관들이 캐나다와 같은 선진 중견국(advanced middle power) 대사관들보다 소셜 미디어 채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는 추가적으로, 스위스처럼 한국과의 양자 관계가 비교적 약한 국가들은 페이스북을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로 사용한 반면, 일본처럼 한국과 강한 외교 관계를 가진 국가들은 보다 참여 중심의 디지털 외교 전략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는 개발도상국을 수신국(target country)으로 설정하였지만 여전히 고소득국(high-income sender country)의 디지털 외교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ollins와 Bekenova(2019)는 카자흐스탄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단을 포함한 14개 유럽 대사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대부분의 유럽 대사관이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주로 일방향 소통 채널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채널에서의 논의는 대체로 평범하고 일방적이며, 콘텐츠는 주로 자국을 홍보하는 비정치적 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Jung(2022)은 규범적 공공외교(normative public diplomacy) 개념을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브라질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단의 페이스북 전략을 조사하였다.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EU는 브라질과의 관계에서 규범적 권력을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범적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브라질 주재 EU 대표단은 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포함한 정치적 가치를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후 변화 규범의 옹호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제 개발 규범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개발도상국을 디지털 외교 발신국으로 설정한 소수의 연구들은 주로 대사관 게시물에 대한 사례 연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좋아요 수나 팔로워 수와 같은 단순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며, 대사관 게시물의 효과성을 추정하기 위한 엄밀한 실증적 전략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Bali et al.(2018)은 미국의 에르빌 영사관과 워싱턴에 있는 쿠르드자치 정부(KRG) 대표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다양한 범주에서 비교하고 구별하였다. 이 범주에는 게시물의 수, 팔로워 수, 사용된 언어, 좋아요 수, 댓글, 공유, 게시물 유형(텍스트 또는 사진), 콘텐츠 주제, 그리고 게시물 가치가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KRG의 게시물은 민주주의 관행이나 종교적 평등과 같은 가치를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사관의 페이스북은 게시물 수, 좋아요 수, 댓글, 팔로워 수에서 KRG의 페이스북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미국 영사관 페이스북은 쿠르드어와 영어를 사용한 반면, KRG는 영어만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대사관 디지털 공공외교에 관한 문헌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Cull(2009)의 분류를 적용하여 필리핀의 주한 디지털 공공외교 활동을 실증적으로 조사한다. 필리핀은 하위 중소득국(lower-middle-income sender country)으로 분류되며, 한국은 고소득국(high-income target country)으로 설정된다. 본 연구는 정성적 및 정량적 연구 방법을 결합하여, 이러한 디지털 공공외교 노력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필리핀의 이미지를 개선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이론적 논의

3.1. 의제 설정과 이슈 프레이밍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실시된 ASEAN과 한국 청년 상호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년들

은 ASEAN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 격차와 제한된 이익 인식으로 인해 지식과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ASEAN-Korea Centre, 2023).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공공외교는 ASEAN 회원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의제 설정(agenda setting)과 이슈 프레이밍(issue framing)을 수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먼저, 의제 설정의 맥락에서 공공외교는 국제 대중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와 이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Bali et al., 2018).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외교는 디지털 의제 설정(digital agenda setting)의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대사관은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활용하여 외국 대중이 자국, 핵심 가치, 정책 의제에 대해 더 익숙해지도록 노력한다(Collins & Bekenova, 2019). 필리핀과 한국의 사례에서는 한국 대중이 필리핀에 관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필리핀이 한국에서 공공 이슈로서의 중요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필리핀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의제 설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 공공외교는 이슈 프레이밍(issue framing)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Gilboa(2008)는 이슈 프레이밍을 “특정 정의, 해석, 도덕적 평가 또는 해결책을 홍보하기 위해 특정 이슈를 포함하거나 배제하거나 강조하는 선택”으로 정의한다. 필리핀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긍정적인 서사를 전달함으로써, 디지털 공공외교는 필리핀이 특정 이슈를 유리하게 프레이밍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우리는 필리핀에 대한 긍정적인 강조(positive salience)를 높임으로써 이러한 게시물이 필리핀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서울 주재 필리핀 대사관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노출되면 한국인들 사이에서 필리핀의 국가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다.

3.2. 게시물의 상대적 효과성

본 연구는 나아가 게시물의 콘텐츠에 따라 효과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탐구한다. Cull(2009)의 주요 연구에 따르면, 공공외교의 요소는 경청(listening), 옹호

(advocacy), 문화 외교(cultural diplomacy), 교류 외교(exchange diplomacy), 그리고 국제 방송(international broadcasting)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디지털 공공외교의 콘텐츠를 분석하는 데 있어, 국제 방송은 대부분의 디지털 외교 활동이 국제 방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대사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의 콘텐츠는 나머지 네 가지 영역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경청(listening)은 외국 대중과 그들의 의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공 외교 정책이나 접근 방식을 재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Cull, 2009). 대사와 외교관들이 공공 토론에 참여하여 주재국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고 홍보하는 것은 공공외교의 경청(listening) 요소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옹호(advocacy)는 외국 대중의 마음에 특정 정책, 아이디어, 또는 행위자의 일반적인 이익을 알리고 촉진하는 국제적 소통 활동을 의미한다(Cull, 2009). 셋째, 문화 외교(cultural diplomacy)는 외국 대중에게 자국의 문화적 자원이나 업적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전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교류 외교(exchange diplomacy)는 자국 시민을 해외로 파견하고 외국 시민을 초청하여 학업과 문화 적응 기간을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콘텐츠 분석 결과, 교류 외교와 관련된 게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영역은 실증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사관이 활용할 수 있는 경청(listening), 옹호(advocacy), 문화 외교(cultural diplomacy) 중,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강조하는 ‘경청’ 요소에 주목한다. Gilboa(2008)는 일방향 소통을 대중 매체를 통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개념화한 반면, 양방향 소통은 정보를 교환하고 청중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양방향 소통이 공공외교 전략으로서 일방향 소통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한다. 실제로, Lee(2017)의 한국 내 8개 대사관 페이스북 계정 분석결과에 따르면, 양방향 소통 모델이 사용자로부터 더 빈번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경청’을 강조하는 게시물(즉, 대사관이 한국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시물)이 필리핀 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필리핀 문화를 홍보하는 게시물보다 필리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 효과적으로 형성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가설2: 공공외교의 ‘경청’ 요소를 강조하는 게시물이 옹호(advocacy)나 문화 홍보에 초점을 맞춘 게시물보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필리핀의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것이다.

4. 기술적 분석: 대사관의 디지털 공공외교 수행 방식

4.1. 콘텐츠 분석

본 연구는 디지털 공공외교의 효과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이 현재 디지털 공공외교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8월부터 대사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확장하여 인스타그램을 포함시켰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국 시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142개의 게시물을 콘텐츠 분석 대상으로 검토하였다.³⁾ 이 중 79개의 게시물은 한국어 제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63개의 게시물은 한국어 제목은 없었지만, 한국어로 된 배경 이미지나 반기문과 같은 저명한 한국 인사의 사진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게시물 선별은 대부분의 한국인이 게시물의 맥락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더 광범위한 샘플 크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142개의 게시물은 Cull(2009)의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분석 및 분류되었다. 분석 과정에서 ‘교류 외교(exchange diplomacy)’와 관련된 게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 게시물이 ‘국제 방송(international broadcasting)’의 사례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게시물은 ‘경청(listening)’, ‘옹호(advocacy)’, ‘문화 외교(cultural diplomacy)’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졌다. <표 1>은 콘텐츠 분석에 이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설명하고, 각 게시물 범주에서 발췌한 예문을 제공하여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한다. 먼저, ‘경청’(Listening): 한국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은 ‘경청’ 요소로 분류되었다. ‘문화 외교’(Cultural Diplomacy)는 한국에서 열린 문화 축제에서 필리핀 문화를 홍보하는 등 문화 행사와 관련된 게시물은 ‘문화 외교’ 요소로 분류되었

3) 대사관은 일부 게시물을 필리핀의 공용어 중 하나인 타갈로그어로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영어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업로드하였다. 초기에는 한국어로 된 게시물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22년 11월 28일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게시물에는 한국어 제목과 함께 콘텐츠에 대한 영어 설명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다. 마지막으로, ‘옹호’(Advocacy)는 세미나나 회의에서 필리핀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한국 이해관계자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옹호’ 요소로 분류되었다.

대사관 게시물 분류 결과, 대사관은 주로 문화 외교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42개의 게시물 중 43개가 문화 외교로 분류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옹호와 관련된 게시물이 37개로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경청 요소는 가장 적게 나타나, 단 3개의 게시물만이 이에 해당했다. 또한, 대사관 게시물 중 59개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사관 행사와 관련된 게시물로, 기타로 분류되었다.

<표 1> Cull의 이론을 적용한 분류 기준⁴⁾

범주	기준	예시
경청 (3개)	대사관 직원이 한국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	“디존-데 베가 대사, 대학에서 필리핀 공공외교에 대해 논의”
문화 (43개)	대사관이 주최하거나 참여한 문화 행사를 설명하는 게시물	“필리핀, 2023 서울 우정 축제에서 필리핀 문화와 관광 홍보”
옹호 (37개)	대사관이 주최하거나 참여한 옹호 활동을 설명하는 게시물	“대사, EPS 하에 공정한 고용과 안전한 이주를 촉구”
기타 (59개)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사관 업무에 대한 단순 정보 전달 게시물	“디존-데 베가 대사, 2023년 3월 15일 코리아해럴드 주최 제3회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개최식에서 참가자들에게 연설”

4) 경청 게시물(Listening posting): https://www.instagram.com/p/Cta7P6_hG02

문화외교 게시물(Culture posting): https://www.instagram.com/p/CuNyQqAh_ox/?img_index=2

옹호 게시물(Advocacy posting): <https://www.instagram.com/p/CwMx1SWhtUq/>

기타 게시물(The rest posting):

<https://www.instagram.com/p/CqMpwwavqIW/?igsh=NWZrMjc2djAyOGR0>

4.2. 반구조화된 엘리트 인터뷰

콘텐츠 분석 이후, 2023년 6월에 대사관 공공외교 팀 소속의 필리핀 외교관⁵⁾ 2명과, 2023년 9월에는 지역 하청 컨설팅 업체인 ‘AVIEW Korea’ 소속 한국인 직원⁶⁾과 대면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가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모집되었다. 먼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대사관 공공외교 부서의 구성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이후 대사관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그들이 공공관계(PR) 행사를 위해 AVIEW Korea라는 지역 민간 컨설팅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대사관 인터뷰는 공공외교 발신자로서 대사관이 실제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전략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AVIEW Korea와의 인터뷰는 대사관이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한국인들 사이에서 필리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탐구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 예정일 일주일 전에 이메일을 통해 연구에 대한 간략한 정보, 인터뷰의 주요 목적, 그리고 인터뷰 질문을 사전에 제공하였다. 각 인터뷰는 약 60~90분간 진행되었으며,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Du Toit(1980)이 제시한 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인터뷰 시작 전에 녹음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인터뷰 대상자의 이름, 인터뷰 내용,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둘째, 인터뷰 질문이 포함된 인쇄본을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인터뷰 진행 중에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셋째, 준비된 모든 질문이 끝난 후, 참가자들이 연구와 관련된 추가 질문을 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참가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입견 없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였다. 또한, 인터뷰 질문은 공공외교 활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로 시작하여 점차 구체적인 질문으로 초점을 좁혀, 마지막에는 소셜 미

5) 인터뷰는 두 명의 외교관과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응답은 이 중 한 명이 제공하였으며, 본 섹션에서는 이를 대사관 직원 #1로 지칭한다.

6) 반구조화 인터뷰 방식은 “세부 사항, 깊이, 내부자의 관점을 제공하며 가설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Leech, 2002). 모든 인터뷰는 개방형 질문을 포함한 반구조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AVIEW Korea와의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한국어로 된 응답을 영어로 번역하였다.

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 노력에 관한 질문으로 마무리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참가자들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필리핀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공공외교 활동의 다양한 요인들을 깊이 숙고할 수 있게 하였다.

녹음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은 후, 인터뷰 데이터를 두 가지 연구 영역으로 나누었다. 첫째, 대사관의 디지털 공공외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둘째, 실제로 대사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콘텐츠 유형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4.1.1 대사관의 디지털 공공외교 활동 관리 전략

대사관의 공공외교 팀은 활동을 필리핀 외교 정책의 세 가지 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세 가지 축은 주재국(한국)과의 정치적 교류, 경제 활동, 문화 홍보이다.

“우리는 우리 정책의 축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이는 주재국, 즉 한국과의 정치적 교류를 포함하며, 두 번째는 우리의 경제 활동, 무역 및 투자입니다. 우리는 공공외교를 특정 협정을 구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FTA)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제 홍보 활동을 살펴보면, 그것이 영화, 백신, 전기차에 관한 것이든, 현재의 활동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의약국(FDA)과 문화 홍보와 같은 활동과 연결됩니다.” (대사관 직원 #1)

인터뷰 결과, 대사관의 공공외교 팀은 한국인들에게 친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가 차이를 강조하는 콘텐츠보다 필리핀의 국가 이미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국가 이미지를 홍보할 때, 공통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합니다. 청중이 이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국가 이미지를 홍보할 때는 먼저 핵심 포인트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국에서는 필리핀이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필리핀의 아름다운 해변, 저렴한 항

공편, 그리고 가까운 위치를 상기시킵니다. 필리핀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대사관 직원 #1)

4.1.2 대사관 게시물의 주요 초점

대사관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필리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로 대사관은 옹호(advocacy) 게시물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관은 필리핀의 주요 정책,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과 관련된 정책 및 국제적 입지를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외교의 핵심 원칙은 해당 국가가 국가 발전과 더 넓은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어떤 내용이든 우리는 이를 알리려고 합니다.” (대사관 직원 #1)

“옹호 활동은 분명히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인을 더 우선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필리핀 영사관의 경우인데, 해외 필리핀 영사관의 주요 역할은 해당 지역에 있는 필리핀 국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옹호 활동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 활동에 집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사관의 경우, 옹호 활동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이해관계자는 사실상 주재국인 한국 정부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집단 모두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 대사관 직원 #1

한편, AVIEW Korea 인터뷰 대상자의 관점에서, 관광은 대사관이 한국 대중에게 필리핀을 홍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간주된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필리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려면,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라의 놀라운 자연미를 강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특히 아름다운 바다로 대표되는 매우 깨끗한 자연 경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돋보입니다. 이러한 자원은 다른 지역과 필리핀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을 휴양지로 강조하는 것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AVIEW Korea 직원)

종합적으로, 대사관의 공공외교 팀은 ‘옹호(advocacy)’ 콘텐츠를 우선시하는 반면, 대사관의 공공외교를 자문하는 AVIEW Korea는 ‘문화(cultural)’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경청(listening)’ 요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흥미롭게도, 한 인터뷰 참가자는 ‘경청’ 접근법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는 한국 시민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의 우려를 경청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실, 서울 주재 필리핀 대사관의 경우, ‘경청’은 주로 우리 타운홀 포럼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권리와 책임 알아보기 세미나’⁷⁾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필리핀] 국민들의 우려를 다루는 열린 포럼입니다.” (대사관 직원 #1)

종합적으로, 인터뷰 결과는 콘텐츠 분석 결과와 일치했다. 콘텐츠 분석에서는 옹호와 문화 관련 게시물이 각각 37개와 43개로 나타났으며, 경청 관련 게시물은 단 3개에 불과했다.

5. 인과관계 분석: 대사관의 디지털 공공외교는 효과가 있는가?

5.1. 설문 설계

서울 주재 필리핀 대사관의 인스타그램을 통한 디지털 공공외교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필리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게시물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7) https://www.instagram.com/p/ClfzNsJhCek/?img_index=1

위해, 본 연구는 2023년 10월에 설계 및 온라인으로 실시된 독창적인 설문 데이터를 활용한다. 조사 대상은 19세에서 49세 사이의 한국 청년 및 중년 854명으로 구성되었다.⁸⁾

대사관 공공외교 팀의 정보에 따르면, 대사관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은 주로 젊은 한국인, 필리핀인 및 기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설문은 의도적으로 49세 이하의 참여자로 제한되었다. 추가적으로,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며, 40대에서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플랫폼으로 나타났다(Lee, 2021).⁹⁾

설문 조사는 실험 섹션을 포함하였다. 통제 그룹은 서울 주재 필리핀 대사관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험 그룹은 무작위로 세 개의 게시물 중 하나에 배정되었으며, 이는 각각 다음과 같다: 경청 게시물(실험 그룹 1), 문화 게시물(실험 그룹 2), 옹호 게시물(실험 그룹 3). 이 게시물들은 이전 섹션에서 보고된 콘텐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되었다.

실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는 혼재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청, 문화, 옹호의 특성을 정확히 대표하는 세 가지 게시물을 선정하였다. 특히, 문화 및 옹호 범주로 분류된 다수의 게시물 중에서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리핀 정부가 강조한 외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게시물을 선정하였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이주민 집단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900만 명 이상의 해외 필리핀인이 존재한다(Peñaranda, 2016). 이에 따라 필리핀은 문화 외교를 활용하여 국가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외국인과의 필리핀인 모두에게 필리핀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존경을 증진하고자 한다(Wong, 2016). 또한, 공공외교는 필리핀 외교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에게 정부의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Rosario, 201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내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옹호 게시물을 선정하였다.

8) 표본은 국제 설문 조사 회사인 dataSpring의 온라인 패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들(opt-in)을 대상으로 추출되었다. 원래 표본 크기는 1,121명이었으나, 주의 확인 질문(attention check question)에 답하지 못한 응답자를 제외한 최종 분석 표본은 854명으로 구성되었다.

9)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6160022>

대사관 게시물은 한국어 제목과 영어로 작성된 상세 설명만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한국인들이 게시물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게시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게시물의 원본 스크린샷과 함께 실험 그룹에 제시하였다. 이 조정 사항에 대해 윤리적 투명성을 위해 설문 조사 종료 시점에 참가자들에게 명확히 알렸다.

5.1.1 실험 처리

<표 2>는 각 응답자에게 할당된 게시물 유형에 대한 요약을 제공한다. 통제 그룹은 게시물을 보지 않고, 종속 변수(국가 이미지, 협력 강화 의지, 필리핀에 대한 관심)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첫 번째 실험 그룹은 공공외교의 ‘경청’ 요소로 분류된 콘텐츠에 노출되었다. 해당 콘텐츠는 필리핀 대사가 한국 대학생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정보 처리를 받은 후 동일한 종속 변수에 관한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경청’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서울 주재 필리핀 대사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 베가(Maria Teresa Dizon-De Vega)는 한국 대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그녀는 학생들과 만나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한-필리핀 관계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서울 주재 필리핀 대사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의 대학을 방문하여 한국 청년들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실험 그룹은 ‘문화’ 요소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노출되었다. 해당 게시물은 서울 주재 필리핀 대사관이 문화 행사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필리핀 문화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서울 주재 필리핀 대사관은 한국에서 가장 큰 세계 문화 교류 축제에 참여하여, 필리핀 관광지, 열대 과일, 전통 의상, 게임, 책 등을 부스에서 선보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필리핀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서울 주재 필

리핀 대사관은 앞으로도 한국 대중에게 필리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이러한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실험 그룹은 ‘옹호’ 요소와 관련된 게시물에 노출되었다. 해당 게시물은 필리핀 대사가 한국 이해관계자들에게 필리핀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옹호’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필리핀 대사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 베가(Maria Teresa Dizon-De Vega)는 외국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디존-데 베가 대사는 외국 이주 노동자의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한 고용 계약 체결과 작업장 안전 개선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한국의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이 주최한 3일간의 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주재 필리핀 대사관은 앞으로도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옹호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응답자들이 게시물을 세세히 읽도록 하기 위해, 게시물을 20초 동안 반드시 열람해야 다음 섹션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중복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설정도 적용되었다.

Table 2. 통제 그룹과 실험 그룹 요약

그룹구분	게시물 내용		인원수
통제그룹	통제그룹은 게시물에 관련한 노출 없이 설문조사에 응답함		217
실험그룹 1: 경 청	 한국 대학생들과 소통하는 주한 필리핀 대 사: 필리핀 대사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는 한국 대학생들을 만나 한국-필리핀 관계에 관 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리핀 대사관은 앞으로 다 양한 지역의 대학을 방문하여 한국 젊은이들 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 주재 필리핀 대 사, 한국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시물	214
실험그룹2: 문 화	 주한 필리핀 대사관, 국제 최대 규모의 세계도시 문화 교류축제 참여: 필리핀의 관광, 경제, 문화, 전통 의 상, 놀이, 도시 등을 홍보하는 부스에서 많은 한국인들 이 다양한 필리핀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 졌다. 필리핀 대사관은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 행사를 주최하여 한국 시민들에게 필리핀 문화를 소개할 계 를 마련한다.	한국인에게 필리핀 문화 자원을 홍보하 는 게시물	214
실험그룹 3: 옹 호	 주한 필리핀 대사, 서민사 정책과 대우 노동자 의 인권 강조: 한국산업연맹총연합회 개최한 3월 간의 행사에서, 필리핀 대사 마리아 테레사 디 존-데베가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의 중요 성을 강조하며, 공정한 고용 계약 및 사업장 안 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였다. 필 리핀 대사관은 앞으로도 이주인들을 위한 인권 보 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국인에게 필리핀 정책을 옹호하는 게 시물	209

5.1.2 종속 변수 (결과 변수)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에 대한 국가 이미지와 필리핀에 대한 관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응답자
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필리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필리핀에 대한 관심
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응답은 1(매우 부정적이고 전혀 관심 없음)에서 5(매우 긍정적이고 매
우 관심 있음)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기록되었으며, 3은 중립적인 점수를 의미한다. 또한, 필리핀과
의 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필리핀과의 협력을 추가로 강화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역시 1(전혀 협력을 강화할 필요 없
음)에서 5(강력히 협력을 강화해야 함)까지의 5점 척도에 기록되었으며, 3은 중립적인 점수를 의미

한다.

5.1.3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는 처리 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 성별(남성 = 1), 연령, 교육 수준(4개의 범주형 변수) 등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하였다. 또한, 필리핀에 대한 친숙도를 측정하는 변수들도 통제하였다. 첫째, ‘필리핀 방문’은 응답자가 필리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이다. 둘째, ‘필리핀 친구’는 응답자가 필리핀 친구(한국 국적을 취득한 필리핀 출신을 포함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이 필리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필리핀 사전 지식 변수’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 1) 정답을 알고 있다 또는 2) 정답을 모른다고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필리핀의 수도는 마닐라이다’였으며, 두 번째 질문은 ‘필리핀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교전국이었다’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친화성 변수’를 통제하였다. 관련 질문은 다음과 같이 ‘소셜 미디어 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이었다.

5.2 주요 연구 결과

<표 3>은 각 종속 변수(국가 이미지, 협력 강화, 관심)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OLS) 결과를 제시한다. 하나는 기본적인 통제 변수(성별, 연령, 교육 수준)를 포함한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추가적인 통제 변수(필리핀 사전 지식, 필리핀 방문 경험, 필리핀 친구, 소셜 미디어 계정)를 포함한 모델이다.

모델 1과 모델 2에서는 ‘경청’, ‘문화’, ‘옹호’라는 세 가지 게시물을 보는 처치(treatment)가 필리핀의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필리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평가되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모델에서는 처치가 한국인의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필리핀과의 협력을 추가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모델에서는 실험이 한국인의 필리핀에 대한 관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이는 ‘필리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또한, 각 종속 변수에 대한 품질 검증 질문을 통과한 응답자들은 모델 2, 4, 6에 기록되었다. 품질 검증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가 본 필리핀 대사관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들에게 다음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했다. 1) 필리핀 문화와 관광에 관한 게시물, 2) 필리핀 이주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게시물, 3) 한국 대학을 방문한 필리핀 대사에 관한 게시물. 이러한 질문들은 실험 집단에 제시되었다. 첫 번째 그룹(‘경청’ 게시물을 본 그룹)은 세 번째 보기로 답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보기를 선택, 마지막 그룹은 두 번째 보기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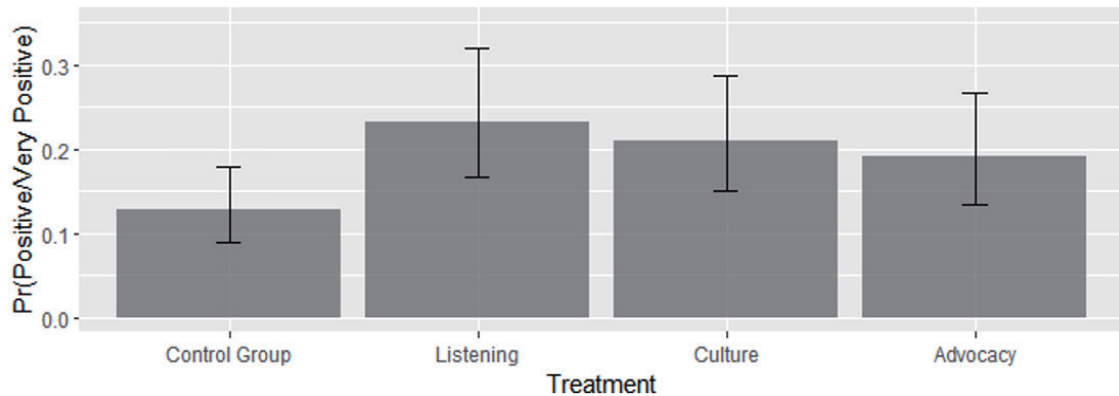
<표 3>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OLS) 분석결과

	Model 1 Image	Model 2 Image	Model 3 Coop	Model 4 Coop	Model 5 Interest	Model 6 Interest
Posting 1. Listening	0.653*** (0.190)	0.733*** (0.210)	0.274 (0.183)	0.433* (0.201)	-0.104 (0.179)	-0.179 (0.196)
Posting 2. Culture	0.576** (0.191)	0.599** (0.196)	0.107 (0.186)	0.177 (0.192)	0.158 (0.180)	0.240 (0.185)
Posting 3. Advocacy	0.449* (0.189)	0.480* (0.206)	0.061 (0.186)	0.025 (0.202)	-0.296 (0.182)	-0.298 (0.198)

Gender	-0.165 (0.143)	-0.128 (0.159)	-0.617*** (0.141)	-0.695*** (0.157)	-0.413** (0.136)	-0.328* (0.151)
Age	-0.109 (0.085)	-0.063 (0.095)	0.224** (0.083)	0.308*** (0.093)	0.277*** (0.081)	0.291** (0.091)
Prior knowledge of the Philippines	-0.033 (0.107)	-0.044 (0.119)	0.170 (0.106)	0.110 (0.117)	0.167 (0.104)	0.149 (0.114)
Philippine visit	0.090 (0.124)	0.009 (0.140)	0.024 (0.116)	-0.029 (0.133)	-0.147 (0.117)	-0.188 (0.135)
Filipino friends	0.131 (0.170)	0.270 (0.174)	0.174 (0.153)	0.202 (0.162)	0.403** (0.156)	0.401* (0.167)
Education	-0.085 (0.076)	-0.140 (0.086)	0.090 (0.074)	0.083 (0.082)	0.061 (0.073)	0.066 (0.082)
Social media accounts	0.118 (0.184)	0.157 (0.203)	0.600** (0.184)	0.559** (0.202)	0.590** (0.180)	0.558** (0.198)
Observations	854	712	854	712	854	712

* $p < 0.05$, ** $p < 0.01$, *** $p < 0.001$; 공간절약을 위해 컷포인트(임계값) 추정치는 보고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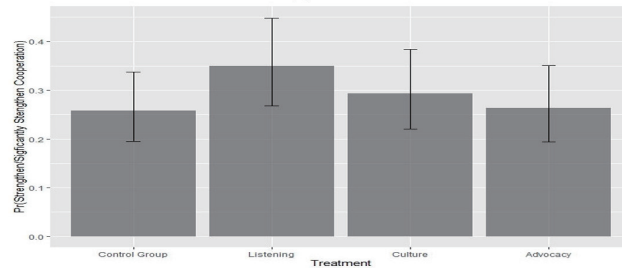
<그림 1> 필리핀의 국가 이미지



이미지 모델(모델 1과 2)에 대한 분석 결과, 세 가지 실험 모두의 계수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을 지지한다. <그림 1>은 모델 1과 2를 기반으로 필리핀에 대해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고한 응답자의 예측 확률을 나타낸다. 세로로 표시된 오류 막대는 99% 신뢰 구간을 나타낸다. 특히, 공공외교의 ‘경청’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게시물을 제시하는 것이 필리핀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임을 시사하며, 이는 99% 신뢰 구간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가설 2를 지지한다.

<그림 2>는 모델 3과 4의 효과를 나타낸다. y축은 참가자들이 ‘한국 정부가 필리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의할 예측 확률을 나타낸다. 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에 대한 실험 효과는 모델 4에서 실험 그룹 1(‘경청’)에서 관찰된 완만한 효과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필리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실험 효과 역시 모델 5와 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 의향



신뢰성 검증 측면에서, 모든 실험 그룹에서 모델 1에 비해 모델 2에서 신뢰성 검증 질문을 통과한 샘플의 계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청 실험’의 효과는 모델 1의 0.653에서 모델 2의 0.733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실험 효과가 콘텐츠를 완전히 이해하고 신뢰성 검증 질문에 정확히 답한 응답자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현재 대사관은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주로 영어로 게시하며, 제목만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이 통계적 결과는 콘텐츠에 관한 더 나은 이해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필리핀에 대한 더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대사관은 한국인이 콘텐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3 추가 연구 결과

회귀 분석 외에도, 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질적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 마지막에 모든 그룹에게 제시된 단답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 정부 기관이 한국인들에게 필리핀을 홍보하기 위해 강조해야 할 필리핀의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 854명의 참가자 중 723명의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해당 질문은 선택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한 한국어 응답을 영어로 번역한 후, WordArt를 활용하여 사용된 단어 빈도를

시각화하였다. <그림 3>은 이 질문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를 나타낸다.

<그림 3> 단답형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각화



예측한 바와 같이, AVIEW Korea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관광(2위)’, ‘관광객(3위)’, ‘자연(6위)’, ‘문화(11위)’와 같은 키워드가 응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전 가정과 부합하며, 필리핀의 이미지와 ‘문화 게시물’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뒷받침한다. 필리핀의 문화적 자원을 강조한 단답형 응답 중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응답은 특히 ‘문화’ 실험이 ‘경청’ 실험보다 효과가 적었던 이유를 되돌아보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의 ‘문화’ 실험은 대사관의 실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나, 필리핀의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적 측면에 대한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문화적 공공외교는 대사관의 ‘문화’ 게시물이 타깃 외국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유익한 내용을 담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함으로써, ‘경청’ 게시물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필리핀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이유를 유추할 수 있었다. 응답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들이 ‘친근함(4위)’, ‘한국(10위)’, ‘한국인(13위)’, ‘협력(26위)’ 등을 고려했을 때, 필리핀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적

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 채택된 ‘경청’ 게시물은 대사가 한국 대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이는 친근하고 협력적인 제스처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절에서 보고된 회귀 분석 결과와 함께 대사관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청’ 게시물의 수를 전략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필리핀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 형태는 필리핀의 공공 안전 우려와 관련된 단어들로 나타났다: ‘안전(1위)’, ‘안전한(5위)’, ‘치안(12위)’. 응답자들은 필리핀을 안전하지 않은 여행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필리핀을 먼저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 노력을 홍보하세요”와 같은 단답형 응답에 반영되었다.

이 결과는 대사관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필리핀이 방문하기에 안전한 나라임을 상호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공공외교의 ‘경청’ 요소를 활용하여 필리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사관은 필리핀 방문을 희망하는 한국인을 초대해 그들의 우려를 듣고, 필리핀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한국인의 필리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진 서구 국가들과 점차 부상하는 중국의 디지털 외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신흥 중견국 개발도상국인 필리핀의 디지털 공공외교 효과를 실증적으로 탐구한 최초의 시도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대사관의 게시물에 노출된 모든 실험 집단에서 필리핀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경청(listening)’ 유형의 게시물이 한국인의 필리핀 국가 이미지를 개

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게시물이 한국 및 한국인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한 데 기인하며, 단답형 응답에서 ‘친구(friend)’와 ‘협력(cooperation)’과 같은 연관 단어가 빈번히 등장한 점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필리핀 공공외교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콘텐츠 분석과 반구조화된 인터뷰 결과, 대사관은 주로 ‘옹호(advocacy)’와 ‘문화(culture)’ 유형의 게시물에 중점을 두며, ‘경청(listening)’ 유형의 활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관은 한국 대중과의 양방향적이고 우호적인 소통을 보여주는 ‘경청’ 유형의 콘텐츠를 더 자주 게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청’ 콘텐츠를 통해 필리핀의 안전성을 강조한다면 한국인에게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러한 결과는 필리핀과 유사한 국가 이미지를 가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도 유용할 수 있다. 이들 대사관은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조사 실험 설계를 활용하여 대사관 게시물과 국가 이미지 간의 상관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필리핀이라는 발신국과 한국인이라는 특정 수신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Cull(2009)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게시물 분류는 소셜 미디어 메시징의 다면적인 특징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으며, 탐구할 가치가 있는 다른 유의미한 분류 방식도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발신국과 수신국을 포함하여 디지털 공공외교의 동태를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메시징 분류를 위한 대안적 분석 틀을 적용함으로써 본 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디지털 공공외교의 적용 가능성을 다양한 맥락에서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desina, O. S., & Summers, J. (2017). Foreign policy in an era of digital diplomacy. *Cogent Social Sciences*, 3(1). <https://doi.org/10.1080/23311886.2017.1297175>
- ASEAN-Korea Centre. (2023). 2022 Survey on mutual perceptions of ASEAN and Korean youths. *The ASEAN-Korea Centre*, 1-94.
- Cull, N. J. (2009). Public diplomacy: Lessons from the past (Vol. 22). Los Angeles, CA: Figueroa Press.
- Cull, N. J. (2013). The long road to public diplomacy 2.0: The internet in US public diplomac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5(1), 123-139.
- Collins, N., & Bekenova, K. (2019). Digital diplomacy: Success at your fingertips. *Place Branding and Public Diplomacy*, 15, 1-11.
- Darnton, C. (2020). Public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A cautionary case from cold war South America. *Foreign Policy Analysis*, 16(1), 1-20.
- Dodd, M. D., & Collins, S. J. (2017). Public relations message strategies and public diplomacy 2.0: An empirical analysis using central-eastern European and Western embassy Twitter accounts. *Public Relations Review*, 43(2), 417-425.
- Du Toit, B. M. (1980). Ethics, informed consent, and fieldwork.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36(3), 274-286.
- Gilboa, E. (2008). Searching for a theory of public diplom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55-77.
- Gilboa, E. (2016). Digital diplomacy. *The SAGE Handbook of Diplomacy*, 540-551.
- Jung, H.Y. (2022). Normative power and normative public diplomacy: The case of digital public diplomacy of the EU delegation in Brazil. *EU연구*, (64), 251-278.
- Kim, T.H. (2022). Typological analysis of south Korean public diplomac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2018-2022. *IFANS Focus*, 2022(32), 1-11.

- Lee, B.J. (2017). Social media-based public diplomacy in Korea: An analysis of major embassies' Facebook postings and user reactions. *Asian Communication Research*, 14(2), 69-99.
- Lee, Y.H. (2021, June 16). Korean SNS usage rate ranks 2nd in the world. Instagram for people in their 10s and 30s, bands in their 40s and 50s. *Korea Economic 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6160022>
- Leech, B. L. (2002). Asking questions: Techniques for semistructured interviews.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5(4), 665-668.
- Manor, I., & Segev, E. (2015). America's selfie: How the US portrays itself on its social media accounts. *Digital Diplomacy*, 89-108. Routledge.
- Mattingly, D. C., & Sundquist, J. (2023). When does public diplomacy work? Evidence from China's "wolf warrior" diplomat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11(4), 921-929.
- Mattingly, D., Incerti, T., Ju, C., Moreshead, C., Tanaka, S., & Yamagishi, H. (2024/Forthcoming). Chinese state media persuades a global audience that the "China model" is superior: Evidence from a 19 country experi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Omar Bali, A., Karim, M. S., & Rached, K. (2018). Public diplomacy effort across Facebook: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 consulate in Erbil and the Kurdistan representation in Washington. *Sage Open*, 8(1), 2158244018758835.
- Peñaranda, A. (2016). Diaspora diplomacy and prospects for foreign policy: The case of the embassy of the Philippines in Washington, D.C. *A Handbook of Philippine Public Diplomacy*, 55-78.
- Quiambao-del Rosario, L. (2016). The role of the DFA in nation-branding. *A Handbook of Philippine Public Diplomacy*, 79-94.
- Sheafer, T., & Gabay, I. (2009). Mediated public diplomacy: A strategic contest over international agenda building and frame building. *Political Communication*, 26(4), 447-467.

- The official Instagram account of the Philippine Embassy in Seoul. (2023, March 25). *Philippine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dustry 4.0 to advance enterprises and technologies* [Image attached].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p/CqMpwwavqlW/?igsh=NW-ZrMjc2djAyOGR0>.
- The official Instagram account of the Philippine Embassy in Seoul. (2022, November 28). *Philippine embassy holds first face-to-face KYRR seminar on rights of Filipino women and children in South Korea* [Image attached].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p/ClfzNsJhCek/?img_index=1.
- The official Instagram account of the Philippine Embassy in Seoul. (2023, June 13). *Ambassador Dizon-de Vega discusses Philippine public diplomacy at Korea university* [Image attached].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p/Cta7P6_hG02/.
- The official Instagram account of the Philippine Embassy in Seoul. (2023, July 3). *Philippines promotes Filipino culture and tourism at the Seoul friendship festival 2023. Seoul* [Image attached].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p/CuNyQqAh_ox/?img_index=2.
- The official Instagram account of the Philippine Embassy in Seoul. (2023, August 21). *Philippine ambassador renews calls for fair employment and safe migration under the EPS.* [Image attached].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p/CwMx1SWhtUq/>.
- Wong, A. C. A. (2016). Philippine cultural diplomacy: Unraveling its full potential. *Foreign Service Institute Insights (FSI) of the Philippines*, 1-9.

제5장.

해외 원조가 제3국 국민들 사이에서 공여국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가? 세계 문화유산 복원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¹⁾

김은지(고려대), 임시정(고려대)

초록

본 연구는 해외 원조가 원조를 받지 않은 제3국에서 공여국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한지를 탐구한다. 연구자들은 가시적이고,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정치적 조건이 없고, 전 지구적 공공선을 다루는 세계 문화유산 복원 사업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의 해외 원조라고 판단하였다. 대상 국가와의 긴장이 공공 외교의 효과를 저해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연구진은 공여국과 더욱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비수혜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본 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원조를 받지 않는 호주에서 설문 조사 실험을 실시하였다. 호주 국민들에게 중국 또는 한국이 수행한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 복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캄보디아 원조 정보는 호주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주와의 관계가 여러 영역에서 긴장된 중국의 유사한 원조 사례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공공 외교 수단으로서 해외 원조의 소프트 파워 요소를 활용하고자 하는 공여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1) 2023년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4권 1호에 게재된 논문을 번역한 것임

1. 서론

해외 원조의 오랜 동기 중 하나는 수혜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은 정치적 가치를 통해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하기 위해 해외 원조를 활용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의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 증대와 공격적인 원조가 수혜국 국민의 중국 또는 미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Blair et al., 2022; Wellner et al., 2022). 해외 원조가 실제로 수혜국 국민 사이에서 공여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는 반면(Goldsmith et al., 2014; Dietrich et al., 2018; Mattingly and Sundquist, 2022),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제시한다(Zürcher, 2012; Tokdemir, 2017; Green-Riley, 2020).

본 연구는 기존의 해외 원조 및 국가 이미지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 기존 연구는 수혜국 국민 사이에서 공여국의 이미지, 즉 ‘1차 효과’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해외 원조가 제3국 국민 사이에서 공여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탐구한다. 해외 원조의 이러한 ‘2차 효과’에 대한 초점은 공공 외교에서 소프트 파워 자원 활용에 대한 학계 및 실무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국제 관계 학자들은 외국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인 태도가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합의하고 있으며(Goldsmith and Horiuchi, 2012; Dietrich et al., 2018), 많은 국가들이 공공 외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외압이나 금전적 혜택보다는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인 ‘소프트 파워’(Nye, 2008)는 공공 외교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된다(Gilboa, 2008). 경제적 지원 형태의 해외 원조는 공여국이 수혜국과의 관계에서 하드 파워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3국을 향한 공여국의 소프트 파워를 투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해외 원조는 비수혜국 국민이 공여국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론적 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모든 해외 원조 활동이 바람직한 2차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본 연구는 제3국 국민 사이에서 공여국의 이미지를 개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조의 네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논의한다. 즉, 가시적이고, 정

치적 조건이 없으며, 지역화되어 있고, 전 지구적 공공선을 다루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유네스코(UNESCO) 세계 문화유산 복원 사업에 대한 문화 원조를 위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의 해외 원조로 규정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유형의 원조가 호주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실험을 통해 2차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조사한다. 호주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비원조 수혜국으로서, 국민이 공여국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기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호주가 해외 원조의 소프트 파워를 평가하기 위한 제3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공여국으로는 중국과 한국을 선택했다. 이는 적대적인 양국 관계가 공공 외교의 효과를 저해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Entnam, 2008; Sheafer and Gabay, 2009; Sheafer et al., 2014). 호주는 한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반면, 중국의 경우 안보, 경제, 에너지 측면에서 양국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심각한 무역 전쟁으로 이미지화 되어있다. 방법적으로는, 호주 응답자들은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 복원을 위해 중국 또는 한국이 제공하는 해외 원조에 대한 비디오 자료에 무작위로 노출된다. 공여국에 대한 정보 외에 이 비디오들은 이미지, 내레이션, 길이, 배경 음악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연구 결과, 한국의 캄보디아 원조에 대한 정보가 호주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을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원조 정보는 호주인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지하려는 의지를 약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캄보디아 원조 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특정 유형의 해외 원조가 공공 외교에서 소프트 파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며, 특히 공여국과의 양국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인 비수혜국을 대상으로 할 때 그러하다.

2. 해외 원조와 공여국에 대한 태도

본 장에서는 먼저 해외 원조가 수혜국에서 공여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식, 즉 해외 원조의 1차 효과에 대한 문헌을 검토한다. 이 분야의 실증적 연구 결과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연구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누가 해외 원조를 제공하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Blair et al.(2022)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미국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킨 반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원조는 수혜국의 중국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켰다는 점을 발견했다. 중국의 원조 체제가 ‘품질을 희생하면서 속도와 저비용을 우선시한다’는 수혜국 사이의 부정적인 인식이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한 가지 잠정적인 설명으로 제시된다. 유사하게, Eichenauer et al.(2018: 20)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원조 분석에 따르면, ‘중국 원조는 (아직) 해외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원조는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저자들은 낮은 품질 외에도 중국의 원조가 부패 및 횡령에 더 취약하고 일반 대중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 지적한다.

둘째, 원조의 유형이 중요하다. Goldsmith et al.(2014)은 효과적이고 가시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외 원조가 긍정적인 1차 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의 보건 원조 프로그램은 수혜국 내에서 미국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시켰다. Dietrich et al.(2018) 또한 방글라데시의 미국 보건소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미국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개선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근에 Mattingly and Sundquist(2022)는 중국 외교관들이 트위터를 통해 인도 시민들에게 안전 보호 물품을 기증하는 원조를 홍보했을 때 시민들의 중국 정부, 국민, 그리고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대로, 공자 학원을 통해 제공되는 중국의 교육 및 문화 원조와 같이 덜 유형적인 유형의 중국 원조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Green-Riley, 2020).

반면, 해외 원조가 비수혜국에서 공여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 가지 예외는 Zielińska(2016)로, 그녀는 해외 원조가 홍보 캠페인과 같은 다른 수단과 결합될 때 수혜국을 넘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저자는 해외 원조의 2차 효과와 관련된 중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최근 Wellner et al.(2022)의 연구는 원조의 2차 효과를 추정하려고 시도했다. 중국 원조를 받지 않는 국가를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설문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저자들은 중국 원조가 아프리카 국가, 유엔 총회에서 잠재적인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그리고 이미 중국 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을 개선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Incerti et

al.(2022)의 연구 논문은 개발도상국에서 해외 원조의 2차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유일한 연구이다. 그들은 중국과 일본의 양자 원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의 해외 원조가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조사했다. 저자들은 중국과 일본과의 양자 관계가 비교적 탈정치화된 말레이시아에서 해외 원조를 홍보하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효과가 더 모호했다.

Incerti et al.(2022)과 Wellner et al.(2022) 모두 공여국이 제3국과 우호적인 관계일 때, 해외 원조의 긍정적인 2차 효과를 발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 장에서 논의하듯이, 이러한 결과는 공공 외교에 대한 기존 연구와 일치하며, 이전 관계가 보다 효과적인 공공 외교를 위한 중요한 조건임을 시사한다(Entnam, 2008; Sheaffer and Gabay, 2009; Sheaffer et al., 2014).

3. 이론적 틀

본 연구는 제3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원조의 2차 효과에 대한 초기 문헌(Zielińska, 2016; Incerti et al., 2022; Wellner et al., 2022)에 기여한다. 먼저, 긍정적인 2차 효과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은 원조 프로젝트의 네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제3국과의 기존 양자 관계가 이러한 효과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3.1 원조 프로젝트에 따른 효과 차이

3.1.1 가시성

공여국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이 공여국의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혜국 외부의 사람들이 해외 원조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될 수 있을까? 직접적인 노출은 제3자 청중이 수혜국을 여행하다가 우연히 눈에 띄는 원조 프로젝트 현장을 접할 때 발생한다. 제3자 청중은 또한 프로젝트 행사 및 성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여국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특정 원조 프로젝트를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도 있다(Dietrich et al., 2018; Wellner et al., 2022). 새로운 병원이나 학교 자금 지원과 같이 눈에 띄는 장소와 실질적인 결과를 포함하는 원조 프로젝트는 사회적 결속 및 역량 구축과 같이 덜 가시적인 영역의 원조보다 홍보하기 쉽다. 2차 청중은 이러한 가시적인 프로젝트를 많은 인지적 노력 없이도 스스로 인식하고 감상할 수 있다. 반대로 덜 가시적인 원조 프로젝트는 홍보에 더 많은 노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Vollmer(2012: 64)가 지적하듯이, '[특정 원조 프로젝트의] 결과가 (성별이나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영역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건물이나 거리 자금 지원만큼 눈에 띄지 않는 경우) 시각화된 데이터 및 정보를 통해 개선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원조 프로젝트의 가시성은 2차 효과를 촉진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1.2 정치적 조건이 없는 원조

원조는 공여국이 수혜국에 특정 정책을 시행하거나 특정 이념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할 때 종종 정치화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해외 원조가 항상 정치적이었으며, 개발 원조가 정치화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Novelli, 2010). 해외 원조는 오랫동안 분쟁 상황에서 정치화된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Boutros-Ghali, 1992). 예를 들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원조는 인도주의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동맹에 따라 할당되었다(Lundborg, 1998; Wang 1999; Novelli, 2010). 9/11 이후 서방 국가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제공한 교육 개발 원조는 서방과 이슬람 테러리즘 간의 전투 상황에서 점령군의 정치적 도구로 간주되었다(McClure, 2009; Novelli, 2010).

비분쟁 상황에서도 아이디어 보급, 인도주의적 지원, 구호 프로젝트 실행 측면에서 해외 원조는 미묘한 권력 관계를 거치며 제공된다(Hilhorst and Jansen, 2013). 해외 원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의 충성을 얻기 위한 뇌물로 사용될 수 있다(Kuziemko and Werker, 2006; Vreeland and Dreher, 2014). 이처럼 제3국의 대중은 양자간 해외 원조를 수혜국 시민에 대한 순수한 관대함보다는 공여국의 정치적 이익 추구로 볼 수 있다(Goldsmith et al., 2014; Tokdemir, 2017). 따라서 권위 있는 다자 기구를 통해 전달되는 등 정치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

는 원조가 2차 효과를 생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3.1.3 지역화

최근 몇 년 동안 ‘지역화’ 개념은 수혜국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공여국의 일방적인 진전을 피하기 위해 국제 원조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Bonacker et al., 2017; Hickey, 2017; Sundberg, 2019). 원조 프로젝트가 수혜국의 문화와 환경을 존중하지 않고 수행된다면, 수혜국 국민뿐 아니라 제3국 국민에게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사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원조의 지역화는 2차 효과를 생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공여국이 수혜국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모든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허용하고, 지역 자재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지역 주민에게 넘겨줌으로써 수혜국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과 존중을 보여줄 수 있을 때 2차 효과가 더욱 효과적으로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Van Brabant and Patel, 2018).

3.1.4 전 지구적 공공재

1차 효과(즉, 수혜국 국민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Goldsmith et al., 2014). 그러나 2차 효과(즉, 제3국 국민에 대한 효과)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혜택이 수혜국의 좁은 인구를 넘어 확장되는 해외 원조 프로젝트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연구는 전 지구적 공공재의 제공 및 유지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다. Kaul et al.(1999)에 따르면, 전 지구적 공공재는 국가, 사람, 세대에 걸쳐 광범위한 사용 및 보편성의 강력한 특성을 가진 공공재이다. 발전 프로젝트는 지식 생성 및 보급, 전염병 근절, 지구 공동체,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시스템, 국제 금융 안정과 같은 전 지구적 공공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Speight, 2002). 이러한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하여 수혜 범위를 확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제3국의 대중에게 높이 평가되어 상당한 2차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2차 효과를 생성하는 데 이상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원조의 여러 조건을 확인했다. 그러나 모든 원조 프로젝트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제 금융 안정이나 무역 시스템에 대한 원조는 전 지구적 공공재 제공에 기여하지만,

그 엘리트주의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반 개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여주기 어렵다. 자유주의적 세계를 넘어 이러한 유형의 원조를 통한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추진은 상당히 정치화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또한, 공항, 도로, 항만과 같은 국가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는 상당히 가시적이지만 제3국 대중에게는 덜 높이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구진이 제시한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원조는 종종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복원 원조가 우리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례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 특히, 세계 문화유산의 복원, 개조, 보존을 위한 원조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충족한다. 문화 및 자연 유산지는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 이러한 장소를 방문하기 때문에 가시적이며, 파괴된 장소에서 웅장하게 복원된 유명한 유적지는 많은 인지적 노력 없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눈에 띈다. 이러한 유형의 원조는 이념을 장려하거나 정책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정치화되지 않는다. 권위 있는 다자 기구인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 목록을 관리한다는 사실은 프로젝트의 정치화를 더욱 완화한다.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원조는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수혜국 전문가와 지역 사회가 이러한 장소에서 협력하기 때문에 종종 고도로 지역화되어 있다. 또한 프로젝트 자체는 수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감상을 기반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 문화유산지는 국내 및 국제 방문객과 비방문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확산시키는 전 지구적 공공재를 나타낸다(Serageldin, 1999; Bodansky, 2012). 따라서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원조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2차 효과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복원 원조는 제3국 국민 사이에서 공여국의 이미지를 개선할 것이다.

3.2 기존 관계에 따른 효과 차이

이전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2차 효과를 생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조 프로젝트의 네 가지 일반적 인 특징을 논의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례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복원 원조를 확인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제3국에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해외 원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공공 외교 효과에 대한 문헌이 관련성을 갖게 된다. 많은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외교 활동은 대상 정부 및 대상 대중과의 관계가 이미 우호적일 때 더 효과적인 경향이 있다(Nye, 2004; Entnam, 2008; Sheaffer and Gabay, 2009; Sheaffer et al., 2014). 반대로, 대상 국가와 외교적 긴장이 발생하면 공공 외교는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Goldsmith et al., 2014; Mattingly and Sundquist, 2022). 이러한 기존 관계의 효과는 해외 원조의 2차 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Incerti et al., 2022; Wellner et al., 2022).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디어의 부정적 편향(Lengauer et al., 2012; Soroka and McAdams, 2015)으로 인해, 외교적 긴장은 우호적인 관계보다 대중의 관심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헌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식이 낮거나 접근하기 어려울 때는 단순한 신호에 더 의존하지만,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정보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생각한다(Wood and Kallgren, 1988; Crowder-Meyer et al., 2020). 특히, 새로운 정보가 기존 지식에 반하는 경우,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 즉 일관되지 않은 신념을 가질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경시하고 심지어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Edwards and Smith, 1996; Svoboda, 2017). 따라서 해외 원조의 긍정적인 2차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대상 국가와의 양자 관계가 우호적이고 대중의 관심도가 낮을 때 더 쉬울 것이다. 반대로, 대상 대중이 이미 공여국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에 노출되어 있고 공여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대상 대중의 신념을 바꾸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공공 외교 도구로 사용되는 해외 원조는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려는 노력이 제3국 대중의 저항에 부딪히면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가설 2: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공여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태도)에서는 2차 효과가 약화될 것이다.

4. 연구 설계

4.1 원조 프로젝트 선정

가시성이 높고, 지역화되어 있으며, 정치적 조건이 없고, 전 지구적 공공선을 다루는 해외 원조 프로젝트로서,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앙코르 유적 복원 및 건설 프로젝트’라는 세계 문화유산 복원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다. 앙코르는 여러 역사적인 사원을 포함하는 고고학적 유적지이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주요 국가 수입원이 되었다. 그러나 앙코르의 사원은 폭우, 약탈, 관리 부족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어, 유적지를 복원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같은 해 앙코르는 위협에 처한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프랑스, 중국을 포함한 17개국이 이 유적지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앙코르 사례는 세계 문화유산 복원의 성공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원조 프로젝트 노력 덕분에 앙코르는 2004년 위협에 처한 세계 유산 목록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4.2 제3국 및 공여국 선정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은 2021년 10월에 872명의 호주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원본 설문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호주는 해외 원조를 받지 않는 발전된 국가이므로 해외 원조의 소프트 파워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제3국이다. 공여국 이미지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이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공여국의 소프트 파워(관대함, 문화적 가치, 리더십 등)에 대한 호주인의 감사에 기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는 응답자가 중국 또는 한국의 앙코르 복원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비디오 자료에 무작위로 할당되는 실험 섹션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진들은 두 공여국에 대한 원조 정보를 제공하기로 선택했다. 그 이유는 두 국가와 호주 간의 양자 관계 차이가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 외교통상부(2021)에 따르면, 호주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21년 6월 G7 회의에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선언은

양국 관계가 강력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양국 외교 및 국방부 장관 간의 대화에서, 그들은 합동 훈련 및 연습 확대를 통해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해군 간의 양자 상호 운용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호주와 한국의 관계는 응답자들이 설문 조사에 응할 때부터 현재까지 원활했다. 반면, 중국은 2020년 4월부터 호주와 무역 전쟁을 벌여 왔다. 무역 전쟁을 통해 중국은 쇠고기, 와인, 면화, 목재, 구리, 랩스터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호주는 중국의 호주 제품 수출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무역 분쟁은 1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외교 및 안보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양자 관계를 반영하여, Lowy Institute의 연례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보다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한국은 62점(2019), 57점(2020), 61점(2021), 63점(2022)을 기록한 반면, 중국의 점수는 훨씬 낮았으며 49점(2019)에서 39점(2020), 32점(2021), 33점(2022)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호주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가 중국보다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설2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한국의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인 정보가 중국의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유사한 정보보다 신념 변화 효과가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4.3 설문 조사 설계

위에서 언급했듯, 호주에서 진행된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는 응답자들이 서로 다른 비디오 자료에 무작위로 할당되는 실험 섹션이 포함되어 있다(<표 1> 참조). 한 클립은 한국이 자금을 지원한 ‘양코르 유적지 프레아 피투 사원군 보존 및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다. 또 다른 클립은 중국이 자금을 지원한 ‘양코르 와트의 차우 사이 테보다 사원 복원’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리 비디오에서 제공된 양코르 유적지에 대한 거의 동일한 일반 정보는 제공하지만, 단순히 문장이 더 길고 공여국 특정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없는 중립 클립이 있다.

우리는 세 가지 비디오를 가능한 한 유사하게 만들고 처리 효과에 대한 혼란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세 가지 클립 모두 86초였으며, 동일한 내레이터의 목소리, 배경 음악, 양코르 유적지에 대한 일반 정보를 사용했다. 우리는 National Geographic 다큐멘터리(캄보디아, 숲 속의

우뚝 솟은 사원의 도시)의 동일한 앙코르 유적지 이미지를 사용했다 (전체 대본은 부록을 참조).

응답자가 비디오를 시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기 전에 비디오를 시청하는데 특정 시간을 할애하도록 강제하는 설정을 추가했다.

4.4 결과 변수 (감정 온도계 및 협력 의지)

공여국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0에서 100까지의 척도로, 0은 ‘매우 차가운’ 감정을, 100은 대상에 대한 ‘매우 따뜻한’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온도계’ 측정을 사용했다. 우리는 응답자들에게 한국과 중국에 대한 감정을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 의지를 측정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호주 정부가 다음 국가들과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답변은 1(매우 동의하지 않음)부터 5(매우 동의함)까지의 5점 척도로 기록되었으며, 3은 중립점을 나타낸다. 연구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작위 순서로 4개의 추가 아시아 국가(캄보디아, 일본, 태국, 베트남)에 대한 감정 온도계 및 협력 의지 측정값을 수집했다.

<표 1> 통제그룹과 실험그룹

구분	통제 그룹	실험 그룹 2	실험 그룹 2
내용	 The Angkor, in Cambodia Siem Reap is one of the most famous World Heritage sites in Asia.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에 대한 비디오	 The Preah pithu Temple Restoration project is carried out by the experts from KICA.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한국의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비디오	 Chinese Academy of Cultural Heritage in Cambodia.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중국의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비디오
참여자 수	291명	295명	286명

4.5 통제 변수

실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두 가지 기본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하였다. 첫 번째는 성별(Female)로, 남성은 1, 여성은 2로 기록하였으며, 두 번째는 연령(Age)으로, (1) 18-24세, (2) 25-34세, (3) 35-44세, (4) 45-54세, (5) 55-64세, (6) 6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공여국에 대한 친숙도를 포착하기 위한 변수를 통제하였다. 먼저, Korea Visit(한국 방문) 및 China Visit(중국 방문)은 개인이 공여국(한국 또는 중국)을 방문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로, (1) 방문한 경우, (2) 방문하지 않은 경우로 기록하였다. 공여국에 대한 친숙도를 나타내는 다른 변수로는 Korean Friend(한국인 친구) 및 Chinese Friend(중국인 친구)가 있으며, 응답자가 해당 국가에 친구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2)로 기록하였다. 공여국에 대한 높은 친숙도를 가진 개인은 공여국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5. 연구결과

<표 2>는 각 종속 변수에 대한 두 가지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기본 통제 변수(연령과 성별)를 포함한 모델이며, 두 번째는 추가적인 통제 변수(Korea Visit, China Visit, Korean Friend, Chinese Friend)를 포함한 모델이다. 첫 네 개의 모델은 한국의 원조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는 처치를 주요 독립 변수(Korean Aid)로 설정하였다. 다음 네 개의 모델은 중국의 원조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는 처치를 주요 독립 변수(Chinese Aid)로 설정하였다.

모델 1과 모델 2에서, 한국 원조에 대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계수 추정값은 한국의 원조 프로젝트 영상 시청이 참가자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상당히 개선했음을 시사한다. 모델 2를 기반으로 한 <그림 1>은 세 그룹 각각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 온도계(feeling thermometer)를 보여준다. 실선은 90% 신뢰 구간을 나타낸다. 그림은 한국의 원조 프로젝트 영상을 시청한 그룹이 한국에 대해 가장 따뜻한 감정을 보였음을 보여준다. 모델 3과 4에서는 이 실험이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분석하였다. 모델 4에서 한국원조의 계수 추정값은 약하지만

($P < 0.1$)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림 2>는 모델 4의 효과를 보여준다. Y축은 호주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동의할 확률(1-5 척도에서 4와 5)을 90% 신뢰 구간과 함께 나타낸다. 호감도 온도계의 높은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협력 의사에 대한 실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감도 온도계가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표임을 시사하는 기존 문헌(Li, 2021)과 일치하지만, 의견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초 미만의 영상이 가져온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가설 1을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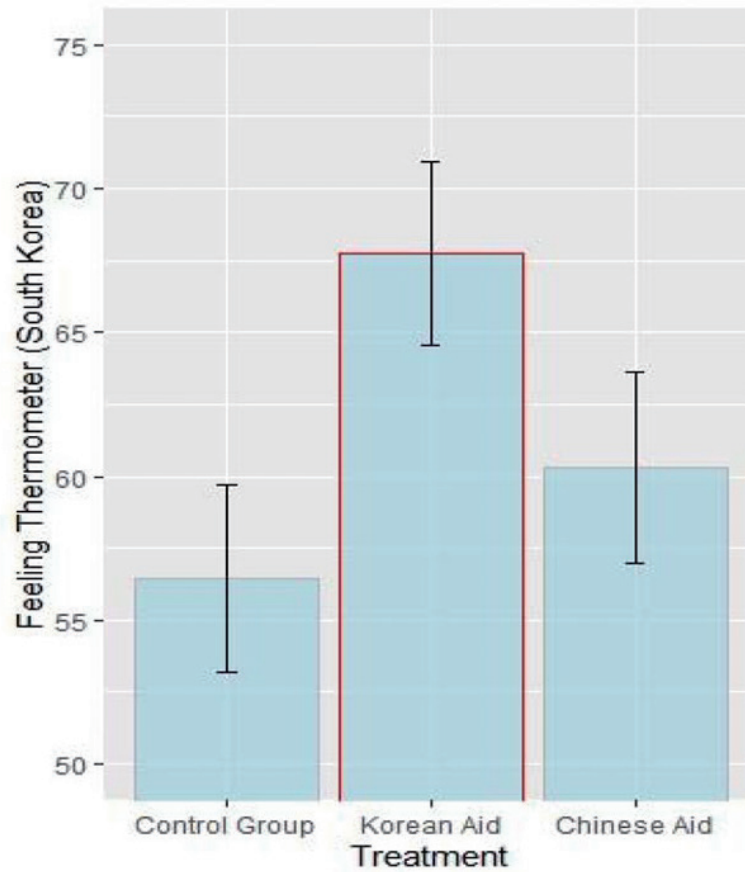
반면, 모델 5~8에서 중국의 원조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호주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가설 2와 일치한다. 영상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원조에는 2차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요 모델

DV	Feeling thermometer for Korea OLS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Korean government ordered logistic		Feeling thermometer for China OLS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Chinese government ordered logistic	
	(1)	(2)	(3)	(4)	(5)	(6)	(7)	(8)
Korean aid	7.402*** (2.027)	11.302*** (2.641)	0.149 (0.153)	0.408+ (0.215)	-0.284 (2.345)	-1.145 (3.172)	-0.185 (0.148)	-0.244 (0.208)
Chinese aid	1.932 (2.045)	3.841 (2.642)	-0.227 (0.153)	-0.241 (0.214)	-2.007 (2.366)	0.169 (3.158)	-0.070 (0.148)	-0.014 (0.207)
Female	-7.597*** (1.712)	-4.909* (2.168)	-0.981*** (0.132)	-0.941*** (0.179)	-0.132 (1.980)	2.403 (2.589)	-0.122 (0.127)	-0.088 (0.171)
Age	0.644 (0.490)	1.011 (0.654)	0.082* (0.037)	0.114* (0.053)	-3.383*** (0.567)	-3.606*** (0.780)	-0.149*** (0.036)	-0.127* (0.052)
Korea visit		10.031** (3.299)		0.592* (0.263)				
China visit						13.062*** (3.132)		0.537** (0.207)
Korean friend		16.462*** (2.820)		0.915*** (0.232)				
Chinese friend						17.453*** (2.894)		0.913*** (0.195)
Constant	71.468*** (3.619)	60.276*** (4.506)			53.051*** (4.186)	40.403*** (5.388)		
Observations	872	451	872	451	872	451	872	451

Notes: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그림 1> 한국에 대한 감정온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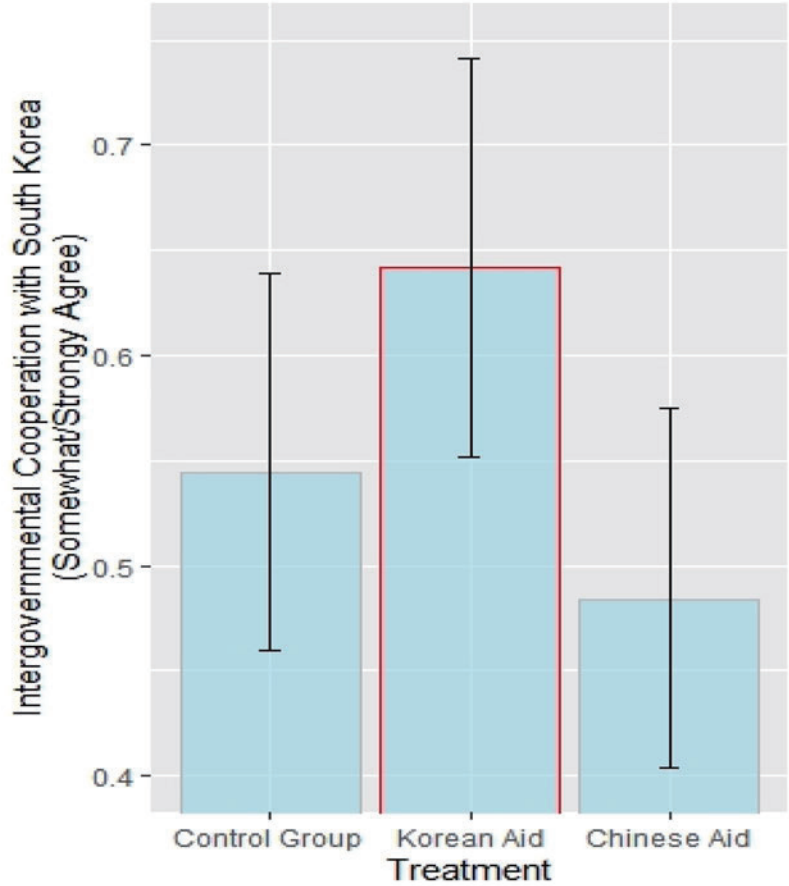
주) 예측값은 모델 2에 기반함

회귀 분석 외에도 인과 관계를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설문 조사 마지막에 제시된 두 개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해당 질문은 ‘중국[한국]에 대한 호감도 온도계를 왜 그렇게 평가했습니까?’와 ‘호주 정부가 중국[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또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였다.

중국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2차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추론할 수 있었다. 중국 원조 영상 처치 집단의 응답에는 중국의 의도에 대한 의심을 나타내는 답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여러 태평양 국가를 통제하려고 자금을 제공하여 그 국가를 발전시키려

는 것 같습니다,’ 또는 ‘중국의 의도에 확신이 가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태도가 응답자들로 하여금 원조 프로젝트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들은 다른 국가들에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는 ‘이 나라는 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와 같은 응답은 해당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중국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림 1>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Korean government.
 Note: The predicted values are based on model 4.



반대로, 한국에 대한 동일한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응답에는 ‘그들은 다른 나라를 위해 멋진 일을 하고 있다,’ 또는 ‘그들은 캄보디아의 파괴된 도시를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

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한국은 세계와 이웃을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현대적이고 진보된 나라처럼 보인다,' '그들은 캄보디아와 협력하여 유네스코 유산지를 복원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 일부 사람들은 한국의 원조를 단순히 이웃 국가를 돕는 것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세계를 위한 선한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글로벌 공공재를 중시한다는 이론적 기대와 일치한다.

5.1 상호작용 모델: 개인 수준의 조건이 2차 효과를 어떻게 강화하는가?

한국 원조(Korean Aid)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 수준의 특성이 2차 효과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선행 연구(Ebbesen et al., 1976; Peskin and Newell, 2004; Reis et al., 2011)에 따르면, 이전 상호작용과 노출을 통해 얻어진 친숙도가 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공여국에 대한 친숙도가 긍정적인 2차 효과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원조(Korean Aid)와 한국에 대한 친숙도의 대리변수를 결합한 상호작용 항(interaction term)을 도입하였다.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Korea Visit)나 한국인 친구가 있는 응답자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거나 한국인 친구가 없는 사람보다 한국에 더 친숙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러한 친숙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처치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우리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 9는 한국 원조 × 한국 방문(Korean Aid × Korea Visit)을, 모델 10은 한국 원조 × 한국인 친구(Korean Aid × Korean Friend)를 분석하였다. 두 모델 모두에서, 한국에 더 친숙한 호주인이 처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에 친숙한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미 매우 긍정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호감도 온도계 점수는 80.50으로, 방문한 적이 없는 응답자들의 점수인 64.09보다 훨씬 높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인 친구가 있는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81.36으로, 친구가 없는 응답자의 점수인 62.37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처치와 응답자의 문화유산지에 대한 가치 인식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였다. 모델 11은 한국 원조 × 가치(Korean Aid × Value)를 분석하였으며, 여기에는 응답자가 앙코르 유적을 얼마나 가치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간주하는지를 측정하는 변수가 포함되었다. 이 척도는 (1) 전혀 가치 없음부터 (5) 매우 가치 있음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2차 효과가 유적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샘플 응답자의 대다수(82.48%)가 유적지가 가치 있다(4) 또는 매우 가치 있다(5)고 믿었다(각각 28.82%, 53.66%). 모델 11의 결과(<그림 3>에 시각화됨)는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한다. 문화유산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호주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개선되었다(상호작용 항은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고 긍정적임).

종합적으로, 우리의 결과는 외교 소프트 파워로서의 외국 원조가 수혜국을 넘어 확산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표 3> 상호작용 모델

DV	Feeling thermometer for Korea OLS		
	(9)	(10)	(11)
Korean aid	12.698*** (2.820)	12.239*** (2.953)	-12.628 (13.113)
Chinese aid	5.247+ (2.888)	6.060* (3.016)	14.627 (13.171)
Korea visit	16.496** (5.424)	10.733** (3.330)	8.128** (3.100)
Korean friend	16.873*** (2.836)	21.002*** (4.570)	13.385*** (2.668)
Value			9.060*** (1.907)
Female	-5.044* (2.169)	-5.112* (2.172)	-5.425** (2.050)
Age	1.002 (0.655)	1.072 (0.656)	-0.271 (0.620)
Korean aid × Korea visit	-10.965 (8.117)		
Chinese aid × Korea visit	-9.232 (7.263)		
Korean aid × Korean friend		-4.106 (6.656)	
Chinese aid × Korean friend		-9.637 (6.336)	
Korean aid × Value			5.107+ (2.965)
Chinese aid × Value			-2.642 (2.996)
Constant	59.522*** (4.532)	59.276*** (4.577)	26.019** (8.911)
Observations	451	451	451

Notes: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6. 논의

본 연구는 외국 원조가 제3국 대중에게 공여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초기 연구에 기여하며(Zielińska, 2016; Incerti et al., 2022; Wellner et al., 2022), 이를 외국 원조의 2차 효과(second-order effect)로 정의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몇 가지 이론적으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2차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원조의 네 가지 일반적 특징을 규명하였다: 가시성이 있으며, 정치적 조건이 없고, 현지화되어 있으며,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비록 본 연구의 실증적 구성 요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복원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유형의 원조 또한 유사하게 긍정적인 2차 효과를 생성할 것이라는 이론적 기여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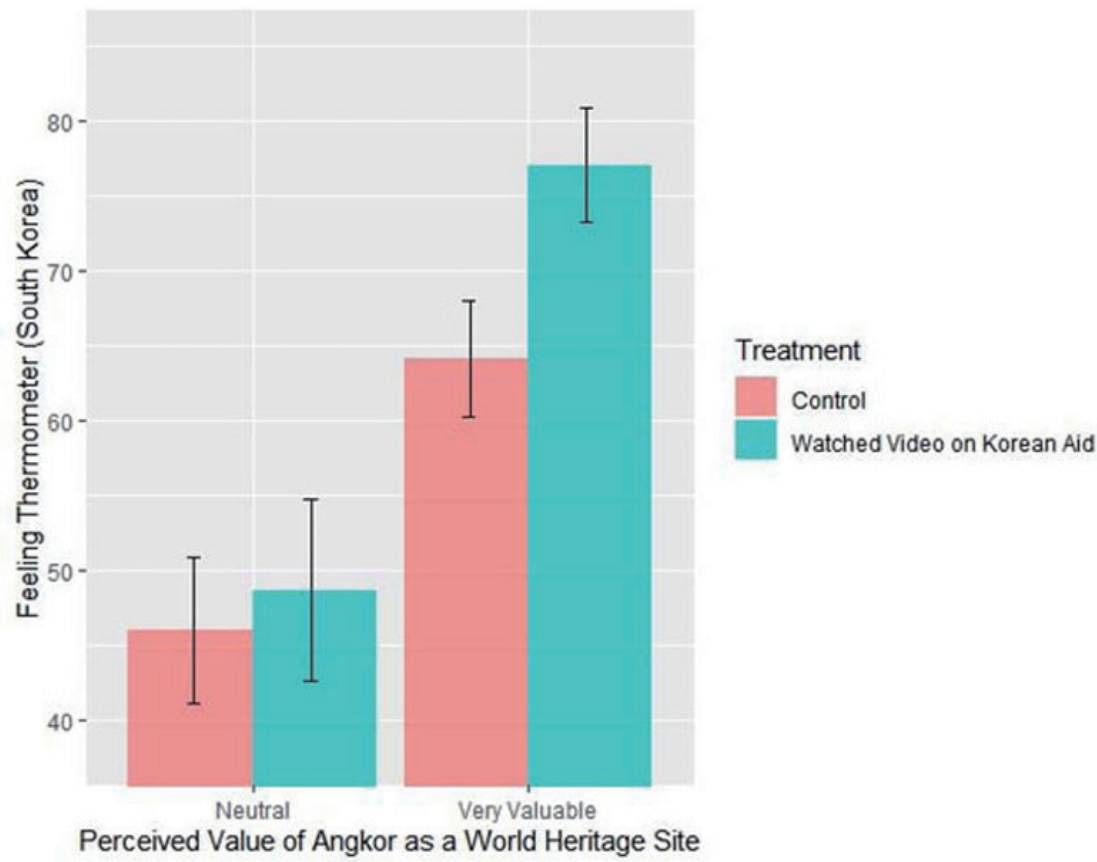
동시에 본 연구는 공공외교의 효과성을 조율하는 데 있어 기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기존 문헌의 주요 통찰을 재확인한다(Entnam, 2008; Sheaffer and Gabay, 2009; Sheaffer et al., 2014; Incerti et al., 2022). 한국 원조에 대한 정보가 호주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사를 개선시키는 반면, 중국과 호주 간 여러 분야에서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유사한 중국 원조에는 그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또한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2차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원조 프로젝트의 네 가지 일반적 특징을 논의했지만, 특정 사례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연구 설계는 이 네 가지 특징 각각이 2차 효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리하여 분석할 수 없다. 후속 연구는 보다 엄격한 연구 설계를 통해 네 가지 특징에서 체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원조 프로젝트의 2차 효과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는 수혜국의 특성을 다양화하여 본 연구 결과의 일반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방향은 외국 원조의 소프트 파워 잠재력을 광범위한 대중에게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역할을 조사하는 것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메시징은 이 연구에서 논의된 네 가지 특징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원조 프로젝트에서도 공여국이 2차 효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외국 원조의 긍정적인 2차 효과가 공여국 내에서 외국 원조에 대한 국내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

한 후속 실증 연구를 촉진한다. 실험적 연구는 외국 원조의 2차 효과(즉, 제3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 대한 정보가 원조에 회의적인 사람들을 더 지지적으로 변화시켜 그들의 정부가 외국 원조 정책을 유지하고 예산을 증가시키도록 할 수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그림 3> 한국 원조와 앙코르의 인지된 가치 간의 상호작용



주: 예측값은 모델 11을 기반으로 함.

7. 결론

해외 원조가 외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사용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관계를 넘어, 해외 원조가 제3국 대중에게 공여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탐구한 초기 시도 중 하나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 원조의 영향력이 단순히 수혜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본 연구 결과가 공여국의 정책 실무자와 공공외교 관련자들에게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정부는 공공외교에서 외국 원조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자국의 해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원조 프로젝트에 대해 제3국 대중을 염두에 두고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양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3국의 대중을 전략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다.

공여국 내부에서는, 본 연구의 실험적 설계가 원조 기관과 프로젝트 관리자들에게 원조 프로젝트의 소프트 파워 및 공공외교 관련 결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 원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공공외교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ronow PM, Baron J and Pinson L (2019) A note on dropping experimental subjects who fail a manipulation check. *Political Analysis* 27, 572–589.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21)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October 10.
- Blair R, Marty R and Roessler P (2022) Foreign aid and soft power: great power competition in Africa in the early twenty first centur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2, 1355–1376.
- Bodansky D (2012) What’s in a concept? Global public goods, international law, and legitimac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3, 651–668.
- Bonacker T, von Heusinger J and Zimmer K (2017) *Localization in Development Aid: How Global Institutions Enter Local Lifeworlds*. New York: Routledge.
- Boutros-Ghali B (1992)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New York: United Nations.
- Crowder-Meyer M, Gadarian SK and Trounstein J (2020) Voting can be hard, information helps. *Urban Affairs Review* 56, 124–153.
- Dietrich S, Mahmud M and Winters MS (2018) Foreign aid, foreign policy, and domestic government legitimacy: experimental evidence from Bangladesh. *Journal of Politics* 80, 133–148.
- Ebbesen EB, Kjos GL and Konečni VJ (1976) Spatial ecology: its effects on the choice of friends and enemi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505–518.
- Edwards K and Smith EE (1996) A disconfirmation bias in the evaluation of argu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5.
- Eichenauer VZ, Fuchs A and Brückner L (2018) The effects of trade, aid, and investment on China’s image in developing countries. *University of Heidelberg Department of Econom-*

ics Discussion Paper Series, (646).

Entnam RR (2008) Theorizing mediated public diplomacy: the U.S. case. *Press/Politics* 13, 87–102.

Gilboa E (2008) Searching for a theory of public diplom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 55–77.

Goldsmith BE and Horiuchi Y (2012) In search of soft power: does foreign public opinion matter for US foreign policy? *World Politics* 64, 555–585.

Goldsmith BE, Horiuchi Y and Wood T (2014) Doing well by doing good: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foreign public opinion.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9, 87–114.

Goldsmith BE, Horiuchi Y and Matush K (2021) Does public diplomacy sway foreign public opinion? Identifying the effect of high-level visi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5, 1342–1357.

Green-Riley N (2020) How States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Overseas: The Micro-foundations of U.S. and Chinese Public Diplomacy (PhD diss.). University of Harvard.

Hickey W (2017) *Energy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Hilhorst D and Jansen BJ (2013) Humanitarian space as arena: a perspective on the everyday politics of aid. *Development and Change* 41, 1117–1139. Available at <https://www.dfat.gov.au/geo/republic-of-korea/republic-of-korea-south-korea-country-brief>.

Incerti T, Ju C, Mattingly D, Moreshead C, Rosenbluth F, Tanaka S and Yamagishi H (2022) ‘The logic of soft power competition: evidence from East Asia.’ Yale University Yale Macmillan Center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Conference on Japanese Soft Power in East Asia. Available at <https://macmillan.yale.edu/news/japanese-soft-power-east-asia>.

Kaul I, Grunberg I and Stern MA (1999) *Global Public Good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Kuziemko I and Werker E (2006) How much is a seat on the security council worth? Foreign aid

- and bribery at the United N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4, 905–930.
- Lengauer G, Esser F and Berganza R (2012) Negativity in political news: a review of concepts, operationalizations and key findings. *Journalism* 13, 179–202.
- Li Z (2021) More than meets the eye: understanding perceptions of China beyond the favorable–unfavorable dichotomy.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56, 68–86.
- Lundborg P (1998) Foreign aid and international support as a gift exchange. *Economics and Politics* 10, 127–142.
- Mattingly DC and Sundquist J (2022) When does online public diplomacy work? Evidence from China’s ‘Wolf Warrior’ Diplomat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 McClure KR (2009) Madrasas and Pakistan’s education agenda: western media misrepresent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29, 334–341.
- Novelli M (2010) The new geopolitics of educational aid: from cold wars to holy war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30, 453–459.
- Nye J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Nye JS (2008)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 94–109.
- Peskin M and Newell FN (2004) Familiarity breeds attraction: effects of exposure on the attractiveness of typical and distinctive faces. *Perception* 33, 147–157.
- Reis HT, Maniaci MR, Caprariello PA, Eastwick PW and Finkel EJ (2011) Familiarity does indeed promote attraction in live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 557.
- Serageldin I (1999) Cultural heritage as public good: economic analysis applied to historic cities. In Kaul I, Grunberg I and Stern MA (eds), *Global Public Good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40–263.
- Sheafer T and Gabay I (2009) Mediated public diplomacy: a strategic contest over international

- agenda building and frame building. *Political Communication* 26, 447–467.
- Sheafer T, Shenhav SR, Takens J and Van Atteveldt W (2014) Relative political and value proximity in mediated public diplomacy: the effect of state-level homophily on international frame building. *Political Communication* 31, 149–167.
- Soroka S and McAdams S (2015) News, politics, and negativity. *Political Communication* 32, 1–22.
- Speight M (2002) *How Much Should DFID Allocate to Global Actions and Funding?* London: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Sundberg M (2019) National staff in public foreign aid: aid localization in practice. *Human Organization* 78, 253–263.
- Svoboda E (2017) 'Why is it so hard to change people's minds?' *Greater Good Magazine*, June 27. Available at www.greatergood.berkeley.edu/article/item/why_is_it_so_hard_to_change_peoples_minds.
- Tokdemir E (2017) Winning hearts & minds (!): the dilemma of foreign aid in anti-American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54, 819–832.
- U.S. Department of State (2020) 'The Agency Financial Report for Fiscal Year 2020.' Washington, DC, November. Available at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0/09/FY-2020-Agency-Financial-Report.pdf>.
- Van Brabant K and Patel S (2018) Localisation in Practice: Emerging Indicators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Action Against Hunger, CDAC Network, Start Network,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 Vollmer F (2012) Increasing the vi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how to reconcile two competing objectives?. German Institute of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IDOS) Studies, No. 67.
- Vreeland JR and Dreher A (2014)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oney and Influ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ngTY(1999) US foreign aid and UN voting: an analysis of important issu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 199–210.
- Wellner L, Dreher A, Fuchs A, Fuchs A, Parks B and Strange A (2022) Can aid buy foreign public support? Evidence from Chinese Development Finance. CESifo Working Paper No. 9646.
- Wood Wand Kallgren CA (1988) Communicator attributes and persuasion: recipients' access to attitude-relevant information in mem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4, 172–182.
- Zielińska K (2016) Development diplomacy. Development Aid as a part of public diplomacy in the pursuit of foreign policy aims: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Historia i Polityka* 16, 9.
- Zürcher C (2012) Conflict, state fragility and aid effectiveness: insights from Afghanistan. *Conflict, Security and Development* 12, 461–480.

제6장.

2017년 군사적 탄압 이후 로힝야 상황에 대한 상이한 대응: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의 비교 분석¹⁾

정유정(고려대)

초록

본 연구는 로힝야 난민 상황에 대한 인접국들의 상이한 대응을 분석하여 방글라데시가 로힝야 난민을 더욱 수용적으로 받아들인 배경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 문헌을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잠정적 설명을 제시한다. 하나는 외부 경제적 유인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현직 정권이 향유하는 정치적 여유에 초점을 맞춘다.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정치적 재량에 대한 설명을 지지한다. 방글라데시는 정치적 여유로 인해 정부가 해당 위기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었기에 로힝야 난민을 수용하였다. 방글라데시의 국내 정치 환경은 강력한 여당과 취약한 야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로힝야 난민 문제의 담론 형성을 주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슈를 프레이밍할 수 있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정치 환경은 정부의 이슈 프레이밍 능력을 제한하였으며, 국내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여 난민을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1) 본 논문은 2021년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9권 1호에 게재된 논문을 번역한 것임

1. 서론

이 글은 로힝야 난민 상황에 대한 인접 국가들의 엇갈리는 대응을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 난민 상황의 초기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난민 유입을 겪는 접경국들은 난민들에게 동정적이고 인간적인 태도를 보인다(Georgiou and Zaborowski 2017; Yesmin 2016). 이들 접경국은 난민들과 그들의 출신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우려를 표명한다.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된 난민 상황으로 바뀌면서, 난민에 대한 국가 정책은 점차 더 제한적으로 변한다(Georgiou and Zaborowski 2017; Yesmin 2016). 마찬가지로 로힝야 난민 상황에서도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미얀마의 인접 국가들은 특히 1990년대 초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지원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점차 입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25일 미얀마에서 군사적 탄압이 발발한 이후, 공통의 지역 난민 상황에 직면한 미얀마의 두 인접 국가인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가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은 흥미로운 관찰이다.

<표 1> 2017년 8월 25일 이후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의 상이한 대응

구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로힝야 난민 총 수	2021년 1월 기준	871,924명	102,350명
	2017년 8월 25일 이후 유입 인원	725,703명	자료 없음
2017년 8월 25일 이후 송환 시도		없음 ²⁾	1,086명 송환 ³⁾ (2021년 2월 23일 기준)
최근 유입된 로힝야 난민에 대한 UNHCR의 접근 권한		UNHCR 접근 제한	2020년 이후 접근 차단

2) 2018년 8월에 발표된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는 “UNHCR(유엔난민기구)은 이번 위기 동안 [방글라데시의] 강제 송환 사례를 단 한 건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난민 중 그 누구도 본국으로 송환 하라는 압력을 느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휴먼라이츠워치 2018a, 41).

3) 2021년 2월 23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민법 위반으로 보이는 혐의를 받은 1,086명을 미얀마로 강제 송환했다(BBC 2021). 정부는 이들이 미얀마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UNHCR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은 구금 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정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UNHCR은 “최소 6명의 기구에 등록된 사람들이 강제 송환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급했다(BBC 2021).

로힝야 난민을 지칭하는 명칭	유효한 문서를 가진 난 민:	“강제로 추방된 미얀마 국 민 (Forcibly displaced Myanmar nationals)”	“진정한 난민”
	유효한 문서를 가지지 않은 난민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로 보내고 “형사 처벌을 가함”)
난민의 유입 경로		도보로 이동	1. 보트로 이동 2. 미얀마 → 태국(도보) → 말레이시아(도보)

출처: UNHCR (2020a), UNHCR (2020b), UNHCR (2020c), The Star (2017), BBC (2021), 저자

2017년 8월 25일 이후, 방글라데시는 국경을 개방하여 로힝야 난민들을 수용하고, 이들이 난민 등록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강제 송환을 방지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제한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로힝야 난민들의 국경 진입을 막기 위해 난민들이 탑승한 보트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으며,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난민들에 대해서는 “불법 입국” 혐의로 구금하고 기소하였다(Human Rights Watch 2020c). 이러한 두 국가의 상반된 입장은 ‘방글라데시가 로힝야 난민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이 두 국가의 비교는 공통된 특징들로 인해 흥미롭다. 두 국가 모두 로힝야 난민들의 주요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난민법에 의해 난민을 법적으로 인정하거나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다(OHCHR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힝야와 공유하는 종교적 신념은 두 무슬림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CIA 2020a; CIA 2020b), 여기에는 이슬람 협력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OIC)가 수행한 적극적인 역할도 포함된다. 2017년 군사 탄압 이후,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난민을 환영하며 강제 송환(refoulement)을 방지하는 정책을 유지해 온 반면, 말레이시아는 로힝야 난민을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국가의 공통점을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에 비해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 난민에 대한 입국 정책이 보다 개방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1. 난민 수용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큰 국가일수록 난민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2. 정치적 경쟁에 직면한 정도가 낮은 정부일수록 난민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⁴⁾

본 연구 결과, 두 번째 가설에 대한 지지가 더 일관되게 나타났다.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의 상반된 대응은 상이한 국내 정치 환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약한 국내 야당은 난민 수용에 따른 잠재적인 반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이 문제를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프레임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2. 연구의 배경

2.1 난민상황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반응

방글라데시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로힝야 난민의 주요 목적지였다. 1978년, 약 25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유입되는 첫 번째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였다(Kiragu et al., 2011; Human Rights Watch, 2000). 당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의 대량 유입을 ‘인도주의적 위기’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Milton et al., 2017, 2). 정부의 인도주의적 접근은 난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식량 및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992년 이후, 방글라데시로 유입된 로힝야 난민들은 더 이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 이민자’로 규정되었다(Milton et al., 2017, 2). 이에 따라 정부는 난민 캠프에 대한 UNHCR의 접근을 거부하는 한편, 이들을 강제적으로 추방하였다⁵⁾(Yesmin, 2016, 78-9; UNHCR, 2013, 12). 정부의 난민 정책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나⁶⁾, 기존 연

4) 본 연구에서 로힝야 난민 수용은 유효한 신분증, 이민 허가증 또는 통행증과 같은 적법한 서류 유무에 관계없이 유입되는 난민을 수용하고, 난민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용국 정부는 새로 도착하는 난민에 대한 UNHCR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난민에게 강제 송환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본 연구는 난민 수용 정책 중 난민 수용 이후의 처우를 포함하지 않는 입국 정책에 한정된다.

5) 강제 송환(refoulement)의 복잡한 역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UNHCR(2013)을 참고

6)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냉전 이후 시기(post-Cold War)의 복잡한 역학과 로힝야 난민의 지속적인 유입이다. 냉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은 난민 캠프를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제공에 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UNHCR 2013, p. 37). 그러나 1992년 3월에만 약 27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유입되었다

구에서는 로힝야 위기의 “장기화된 난민 상황(protracted refugee situation)”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Loescher & Milner, 2009, 9-10). 즉, 난민들은 방글라데시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박해가 종식될 때까지 장기간 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2017년 군사적 탄압의 발발은 방글라데시가 급증하는 로힝야 난민을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의 강경한 대응과는 대조적으로,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7년 8월 25일 군사적 탄압 이후 약 725,703명의 로힝야 난민을 수용하였으며, 2021년 1월 31일 기준으로는 콕스 바자르 지역에 871,924명의 난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UNHCR, 2020c). 또한, 난민 캠프와 새로 도착하는 난민들에 대한 UNHCR의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는 동시에, 비자발적인 추방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Human Rights Watch, 2018a, 41). 요컨대, 2017년 군사적 탄압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을 수용하고 강제 송환으로부터 보호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2.2 난민상황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반응

방글라데시와 더불어 말레이시아 또한 로힝야 난민의 주요 목적지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접한 지리적 위치, 비교적 부유한 국가에서의 취업 전망, 그리고 공유된 이슬람 신앙”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한다(Ehmer & Kothari, 2020, 1).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말레이시아는 난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한다(Human Rights Watch, 2020b). 말레이시아는 UNHCR에 의해 인정된 난민에 한하여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지원만을 제공한다(Yesmin, 2016, 87).

한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보스니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 출신의 난민을 수용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Mathew & Harley, 2014, 11). 그러나 점차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유입되는 난민에 대해 국경을 폐쇄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1991년과 1992년, 약 8,000명의 로힝야 난민이 말레이시아로 유입되었을 당시, 말레이시아는 “체포 및 구금” 정책을 시행하였다(Lewa, 2001).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취업 허가를 박탈하는 등 난민에 대한 강경 정책을 채택하였다. 정부의 “1959/1963 이민법 개

(UNHCR 2013, p. 12). 로힝야 난민의 끊임없는 유입과 국제 지원 감소는 방글라데시 정부로 하여금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들을 강제로 추방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Kaur, 2008, 7-13)”과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 policy) 채택(Yesmin, 2016, 85)”은 정부의 난민 수용을 더욱 기피하게 만들었으며, 불법 이민자의 수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정책은 2012년 이후 ‘보트 위기’ 동안에도 지속되었으며, 당시 보트에 탑승한 난민들은 해상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해안 상륙이 금지되었다(Fuller & Cochrane, 2015; The Guardian, 2015; Al Jazeera, 2020).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7년의 군사적 탄압은 방글라데시와 달리 난민 수용 정책의 촉매로 작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제한적인 입장을 강화하였다. 이민법에 의거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유효한 이민 통행증 또는 허가증” 없이 입국한 자들에게 “최대 5년의 징역, 1만 링깃(약 2,347달러)의 벌금, 그리고 태형 6대”⁷⁾에 처하는 처벌을 가할 수 있었다(Human Rights Watch, 2020c). 더욱이 최근 몇 주 전, 정부는 UNHCR에 따르면 국가의 박해를 받은 자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미얀마 국적자들을 추방하였다(BBC, 2021). 말레이시아 정부는 모든 추방자들이 자발적으로 미얀마로 돌아갔다고 주장하지만, UNHCR은 이민 구금 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해당 사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BBC, 2021). 2021년 1월 기준, 102,350명의 로힝야 난민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⁸⁾ 난민 수용 정책은 더욱 제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절에서는 난민 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의 상반된 입장에 대한 두 가지 잠정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2.3 두 가지 설명

설명 1) 난민 수용에 대한 대가로 더 큰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는 국가가 난민을 더 잘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7) 2020년 6월 27일, “유효한 이민 비자나 허가증” 없이 말레이시아 해역에 도착한 로힝야 난민 40명이 징역 7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회초리형 3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고문에 해당하는 잔혹한 처벌”로 평가된다(Human Rights Watch 2020c; Ahmed and Ratcliffe 2020).

8) 말레이시아의 로힝야 난민 수가 방글라데시보다 적은 것은 단순히 말레이시아 정부의 제한적인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지리적 근접성, 특히 연례 몬순 시즌 동안 보트를 통한 고된 여정, 그리고 미얀마의 엄격한 보안군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Ng 2018).

로힝야 난민의 주요 수용국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정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일 것이다. 난민의 장기적 존재가 수용국에 자산인지 부담인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Ongpin, 2008; Jacobsen, 2002; Whitaker, 1999; Rutinwa & Kamanga, 2003; Alix-Garcia, 2007; Vas Dev, 2003; Taylor et al., 2016), 수용국이 직면하는 일반적인 경제적 우려는 정부 재정 및 인프라를 포함한 한정된 자원을 유입되는 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난민 수용은 이들 개발도상국의 국가 경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국에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정부가 난민 수용에 보다 적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는 수용국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난민에게 제공되는 국제 원조가 소위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Jacobsen, 2002; Taylor et al., 2016; Ongpin, 2008). 도로 및 교량과 같은 인프라 건설 또한 지역 사회에 제공되며, 난민 상황이 해결된 후에도 지역 사회에 남게 된다(Jacobsen, 2002, 581).

난민 수용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의 EU-터키 협정⁹⁾이다. EU와 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 상황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유럽으로의 불법 이동을 관리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였다(Rygiel et al., 2016, 315-6). 협정의 “일대일 이니셔티브”에 따라 EU는 튀르키예 내 난민 시설을 위해 총 60억 유로를 제공하고 튀르키예 시민의 비자 제한을 완화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6; European Council, 2016). 다시 말해, 다양한 인센티브, 특히 경제적 자극은 튀르키예로 하여금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도록 장려했다. 협정 자체의 효과는 불분명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국경 통과 횟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Heck & Hess, 2017, 45; DRC, 2017).

9) EU-터키 협정이 EU와 터키 간의 이동 문제에 대한 경험적 협상, 특히 2013년의 재입국 조약을 통해 가능했다는 것이다(IOM, 2017; Sonmez & Kirik, 2017). 오랜 상호 작용과 협상은 해당 협정을 예외적인 합의로 귀결시켰을 수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또한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 난민 지원을 위해 양자 및 국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다(BAL, 2020a). 분명히, 유럽 난민 상황 동안의 터키 상황은 로힝야 난민 상황 동안의 방글라데시 상황과는 다르다. ASEAN은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따라서 방글라데시는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및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양자 지원에 의존하여 위기를 해결해야 했다(BAL, 2017a; BAL, 2017b; BAL, 2017c).

2017년 군사적 탄압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는 UN 총회 및 IOM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BAL, 2017d; BAL, 2017e; BAL, 2017f). 방글라데시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협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해외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EU-튀르키예 협정과 유사한 협정의 존재가 방글라데시가 난민을 수용하도록 장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가설에 대한 도출가능한 함의는, 2017년경 방글라데시가 국제기구 및/또는 부유한 국가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함의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1) 두 국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정 또는 합의의 존재 여부와 2) 로힝야 난민만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를 살펴볼 것이다.

설명 2) 정치적 경쟁에 덜 직면한 정부가 난민을 더 잘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생존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므로, 난민에 대한 정부 정책은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생존을 추구하는 정부는 취약한 여당 및 강력한 야당을 포함하여 상당한 정치적 반대를 야기하는 정책을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상당한 정치적 반대에 직면한 경우, 국가 경제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정치적 및 대중적 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한 정책은 정권의 정치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강력한 지위를 누리는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적 비용에 대해 덜 우려하며,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고 여론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더 많은 수단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본 연구에서 강력한 지위를 가진 현 정부가 항상 난민 친화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 연구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그러한 강력한 정치적 지위가 현 정부로 하여금 상황과 그 대응을 정치적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Slothuus와 Vreese(2010)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은 지지하는 정당이 제시하는 프레임을 따를 가능성을 높인다. 다시 말해, 강력한 지지를 받는 정당이 설정한 서사는 지지자들의 관심을 끌고 호의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언론의 서사가 지지 기반이 약한 정당에 의해 설정된다면, 그러한 이야기는 무시되거나 혹은 심지어 반박될 가능성이 높다(Slothuus & Vreese,

2010, 632).

기존 연구들은 난민 이슈에 대한 다양한 서사를 규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 상황 초기에는 동정적인 어조에 기반한 고통의 서사가 널리 퍼지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된다(Ehmer & Kothari, 2020; Georgiou & Zaborowski, 2017; Yesmin, 2016). 해당 서사는 유입되는 난민들이 자국에서 겪은 상황과 수용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수용국 정부와 관련한 또 다른 일반적인 서사는 수용국과 그 관료들이 난민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는 “영웅”이라는 것이다(Brooten, 2015; Ehmer & Kothari, 2020; Lewis, 2019). 그러나 난민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사는 급격하게 의심과 혐오 발언을 포함하게 된다(Ehmer & Kothari, 2020; Georgiou & Zaborowski, 2017). 장기화된 난민 상황이 지속될수록 난민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증가한다.

국내 정치는 이러한 다양한 서사에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UNHCR, 2020d). 언론, 정부 및 반대 세력, 특히 정당들은 국내 정치 제도를 통해 상호 작용하며 지배적인 서사를 형성한다. 본 설명에 대한 관찰 가능한 함의는, 방글라데시에서는 정부가 위기 서사를 확고하게 통제하며, 언론에서 의심과 적대감 서사의 존재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반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치열한 정치적 경쟁으로 인해 서사를 통제하는 데 제한적이며, 말레이시아 언론에서는 다양한 출처와 유형의 서사가 존재한다.

3) 기타 설명

물론, 로힝야 난민 상황에 대한 지역적 대응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존재한다. 난민의 관점에서 볼 때, 방글라데시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다른 인접 국가들보다 선호되는 목적지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난민들은 개인적 선호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했을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 이주 이론에서 “주체성” 개념을 바탕으로 목적지를 선택할 때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대해 수행되었다. 난민들은 목적지 국가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즉각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로 가까운 국가로 피난하며, 이러한 목적지 선택은 우연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Böcker & Havinga, 1998; Day & White, 2002; Gilbert & Koser, 2006). 즉, 난민들은 박해의 공포로부터 안전해

지기 위해 인접 국가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가 이동 (onward movement)’의 최종 목적지는 난민 스스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Bijleveld & Taselaar, 2000; Böcker & Havinga, 1997; Gilbert & Koser, 2006). 일부 로힝야 난민은 난민 캠프의 문제로 인해 방글라데시에서 말레이시아 및 다른 국가로 자발적으로 피신하기도 했다(Institute Statelessness and Inclusion, 2020; Wahab & Khairi, 2019). 불행히도, 이러한 ‘보트 피플’은 말레이시아 및 다른 국가에서 여전히 거부당했다. ‘보트 위기’는 난민의 목적지 선택이 수용국의 지원과 수용 의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대안적 설명은 방글라데시와 로힝야족 간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 공유, 역사적 경험의 공유, 특히 방글라데시의 트라우마적인 과거를 통한 친밀감이다 (Sajjad, 2020). 1971년, 방글라데시 국민은 파키스탄으로부터의 독립 전쟁 기간 동안 인도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으며, 이는 현재 로힝야족이 직면한 상황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Sajjad, 2020; Yhome, 2018). 이러한 요인들은 로힝야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밀감 설명은 1992-1993년 로힝야족 강제 송환 사례를 포함하여, 2017년 이전 방글라데시 정부의 제한적인 난민 정책 기조와 상충된다.

덧붙여, 말레이시아의 ASEAN 회원 자격 또한 로힝야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ASEAN의 핵심 원칙인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Acharya, 2001; Narine, 2008). 이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에서 도피한 난민을 수용하는 데 있어 보다 큰 자유재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힝야 난민 상황에서 말레이시아는 ASEAN 본부가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문제 의식을 제기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회원국 중 하나였다 (Waikar et al., 2019; Hutt, 2016). 또한, 과거 인도차이나 난민 상황 당시 말레이시아는 “인접 국가에서 도피해 온 사람들을 수용함으로써 ASEAN의 ‘선린’ 규칙을 자주 위반했다”(Davies, 2008, 226).

10) 오히려 적극적인 이주민들은 “이주 여부와 목적지 선택, 귀환 기회에 있어 더 큰 자유를 누리며,” 선호하는 목적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Richmond, 1993; McAuliffe & Jayasuriya, 2016). 따라서 목적지에 대한 논의는 종종 이러한 적극적인 이주민들에게 국한되며, 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Richmond, 1993; McAuliffe & Jayasuriya, 2016).

더욱이, 말레이시아는 ASEAN과 OIC 모두의 회원국으로서 로힝야 난민 상황에 대해 상반된 두 가지 경로를 보여주었다. ASEAN¹¹⁾이 무대응으로 비판받는 동안(Human Rights Watch, 2020a; MSF, 2019; Piromya, 2020), OIC와 그 회원국들은¹²⁾ 로힝야 난민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Jati, 2017). 다시 말해, 로힝야 난민 상황 동안 말레이시아의 행동을 지배한 요인이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한 강한 헌신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된 두 가지 설명을 “구조화된, 집중 비교(structured, focused comparison)”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George, 1979; George & Bennett, 2005). George와 Bennett(2005, 67)에 따르면, 이 방법은 “연구 목표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질문을 각 사례에 적용”하여 “체계적인 비교”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잘 정의된 이론적 질문 또는 명제에 비추어 역사적 사례의 특정 측면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집중되어” 있다(George & Bennett, 2005, 67).

앞 부분에서 본 연구는 난민 수용이라는 결과 변수에 대해 두 가지 명제를 도출하였으며, 이 명제에서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현 정부의 정치적 재량이라는 두 가지 독립 변수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조화된, 집중 비교는 이론적으로 도출된 이들 변수가 두 사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 변수인 경제적 인센티브는 양국에서 1) 경제적 자극을 제공하는 협정 또는 합의의 존재 여부와 2) 로힝야 난민만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조작화될 것이다. 두 번째 변수인 현 정부의 정치적 재량은 양국에서 1) 정치적 경쟁 정도와 2) 로힝야 난민에 대한 언론 서사를 기준으로 검토될 것이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은 인도양에서의 불법 이동에 관한 특별 회의 및 ASEAN 인권 정부 간 위원회를 포함하여, 관련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루기 위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Jati, 2017, 21-5). 그러나 ASEAN은 내정 불간섭 원칙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위기에 대처하거나 미얀마의 내부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Jati, 2017, 22).

12) OIC의 로힝야 무슬림 지원 노력에는 인도적 지원 제공, 유엔과의 협력, 위기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 조사단(fact-finding mission) 파견이 포함되었다. (Jati 2017, 25-8).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론을 설명하였으므로, 다음 절에서는 로힝야 난민 상황에 대한 상반된 대응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연구 방법 개요

이론적 동기 변수	조작적 정의	사례	예상
1. 경제적 인센티브	1)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정 또는 합의	방글라데시	O
		말레이시아	X
	2) 로힝야 난민(RR)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방글라데시	O
		말레이시아	X
2. 현 정부 의 정치적 재량	1) 정치적 경쟁	방글라데시	강한 여당과 약한 야당 → 낮은 경쟁
		말레이시아	약한 여당과 강한 야당 → 높은 경쟁
	2) 로힝야 난민에 대한 미디어 내러티브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 내러티브의 약한 존재
		말레이시아	의심과 적대감 내러티브의 존재

출처:저자

4. 연구 결과

4.1 경제적 인센티브

4.1.1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 수용이 경제적 이익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EU-튀르키예 협정과 유사한 형태의 협정이나 합의는 부재하였다. 방글라데시가 ASEAN 지역 포럼(ARF)의 회원국이라는 하나, ASEAN 차원에서 인접 국가들의 난민 수용을 장

려하기 위한 어떠한 협약도 채택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로힝야 난민의 유입이 방글라데시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17년 방글라데시가 로힝야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한 이후, 자금 지원 및 현물 기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제공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장려하는 EU-튀르키예 협정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부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인도주의적 지원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들을 비자발적으로 송환하지 않은 행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로힝야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자금 지원의 주요 사례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콕스 바자르의 부문 간 조정 그룹 (ISCG) 및 다카의 전략 실행 그룹 (SEG)이 주도하는 인도주의 단체가 협력하여 수립한 공동 대응 계획 (Joint Response Plan, JRP)이 있다 (ISCG, 2019a, 4). JRP의 목표는 로힝야 난민 집단과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 모두를 포괄한다 (ISCG, 2017; ISCG, 2019a; ISCG, 2019b). 이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위해 JRP는 필요한 자금 규모를 추정하고 전반적인 조정을 감시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기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제시한다 (ISCG, 2017, 5). JRP는 주요 지원 부문을 분석하고 필요한 자금 규모를 산출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JRP를 통한 국제 인도주의적 자금 지원은 정부, 정부 간 기구 (IGO), 비정부 기구 (NGO), 공동 기금, 민간 단체/재단 및 UN 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OCHA, 2020).

<표 3> 공동 대응 계획(JRP)을 통한 자금 조달 현황

연도 및 기간	계획 총 요구액 (미화)	조달된 금액 (미화)	미충족 요구액 (미화)
2017 JRP (2017년 9월 - 2018년 2월)	\$434.1백만	\$316.5백만(73%)	\$117.5백만(27%)
2018 JRP (2018년 3월 - 2018년 12월)	\$951백만	\$684백만(72%)	\$266백만(28%)

2019 JRP (2019년 1월 - 2019년 12월)	\$920.1백만	\$692.5백만(75%)	\$228백만(25%)
---------------------------------------	-----------	----------------	--------------

출처: OCHA (2020)

<표 3>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금은 필요한 자금의 약 70%만을 충족했으며, 이는 충족되지 않은 요구 사항을 해결해야 하는 수용국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에 막대한 압박을 가한다. 물론 이러한 난민 집단을 위한 다른 형태의 국제적 자금 지원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모두 세계은행으로부터 4억 8천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2억 달러의 지원금을 포함하는 자금 지원을 제안했다 (ISCG, 2019b, 13). 그러나 충분한 지원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은 로힝야 난민과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라는 명확한 목표에 한정되어 사용될 수 있다 (ISCG, 2017; ISCG, 2019a; ISCG, 2019b). 즉, 해당 지원은 수용국 전체를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지원은 JRP를 통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되고 평가된다. 또한, 지원금은 식량 안보, 영양, 주거, WASH(물, 위생 및 청결), 보건 등을 포함하여 JRP가 “필요”로 규정한 부문에 사용된다(ISCG, 2017; ISCG, 2019a; ISCG, 2019b). 따라서 국제 인도주의적 자금 지원은 방글라데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데 제한적이다.

국제 인도주의적 지원 외에도, 방글라데시의 인접 국가들은 방글라데시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및 현물 기여를 제공해 왔다. 말레이시아는 방글라데시 내 난민 집단에 “상당한 재정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 국가 중 하나이다(Sukhani, 2020).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콕스 바자르에 350만 말레이시아 링깃을 들여 병원을 건설했다(Sukhani, 2020). 인도네시아 및 인도, 태국과 같은 다른 인접 국가들은 “쌀, 즉석식품, 가족용 키트, 텐트, 담요” 등을 포함한 구호 물품을 콕스 바자르로 보냈다(AP News, 2017; Rohmah, 2017). 일부 학자들은 방글라데시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지원이 부분적으로 난민 집단을 방글라데시에 머물게 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Yhome, 2018, 4).

결론적으로, 국제기구와 부유한 인접 국가 모두 방글라데시가 난민을 수용하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았다. JRP의 국가 기반 공동 기금이 제공되기는 했지만, 인도주의적 지원

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4.1.2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와 마찬가지로, 로힝야 난민을 수용하도록 국가를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말레이시아에도 제공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와 달리, 말레이시아는 ASEAN 회원국이자 2015년 의장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SEAN으로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로힝야 난민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말레이시아 의장국 기간 동안 ASEAN이 위기에 관여하기 위해 취한 모든 행동이었다(Waikar et al., 2019, 16).

더욱이, 말레이시아는 난민에게 국경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내 로힝야 난민만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형성되지 않았다. 즉, 방글라데시의 JRP와 유사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부족한 이유는 방글라데시와 비교하여 로힝야 난민 집단 및 난민 캠프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이후, 로힝야 난민들이 보트를 통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말레이시아로 유입되는 로힝야 난민의 수가 다시 급증했다(IOM, 2020). 2020년 9월 7일까지 395명의 로힝야 난민이 해당 지역에 상륙했다(IOM, 2020). 이에 따라 IOM, UNHCR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UNHCR, 2020e; IOM, 2020). JRP와 마찬가지로, IOM은 보건 및 영양, 보호, 숙박 및 현금 기반 개입의 네 가지 주요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 필요액을 추정했다(IOM, 2020). 국제기구들의 자금 지원 요청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볼 때, 국가가 어느 정도 난민을 수용할 때 인도주의적 지원이 어떻게 제공되는지는 분명하다. 국제기구들은 ‘보트 피플’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말레이시아에는 일반적으로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꾸준히 제공해 왔다. 로힝야 난민에 대해 국경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방글라데시를 제외하고는 역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이다(European Commission, 2019). 이러한 이유로 말레이시아는 일반적으로 난민 보호를 위한 지원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설 1은 기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U-튀르키

에 협정과 유사한 경제적 자극은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 모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가 로힝야 난민을 위한 특정 지원을 제공받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압박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와는 달리, 말레이시아는 로힝야 난민 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유인은 방글라데시가 난민을 수용하도록 유도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4.2 현 정부의 정치적 재량

4.2.1 방글라데시

1) 국내정치

방글라데시의 국내 정치는 종종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당 (Awami League, AL)과 칼레다 지아(Khaleda Zia)가 이끄는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BNP) 간의 경쟁”으로 묘사된다(Idris, 2017, 4). 2009년 이후 AL은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해 왔으며, 제도화된 권위주의 정책을 통해 권위주의가 점진적으로 심화되었다(Mostofa & Subedi, 2020, 14-9). 그 이후, 방글라데시의 국내 정치는 반대 정당, 사법 체계 및 지방 정부를 통제함으로써 AL의 집권당에 권력을 집중시켰다.

방글라데시 내 권위주의 심화는 반대세력과 반대 의견을 제거하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극단적인 소외, 즉 “반대 세력의 공백(oppositional void)”으로 인해 발생한다(Mostofa & Subedi, 2020, 14). AL이 ‘반대 세력과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반대 세력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이다. 3만 건 이상의 형사 사건이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지도자 및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제기되었으며, 8천 명이 선거 전에 체포되었다(Siddiqui et al., 2018; Antara, 2018). BNP는 3만 건의 사건에 대한 혐의가 “허위 및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으며,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Human Rights Watch, 2018b, 4). 더욱이, 혐의는 피고인 모두가 BNP 구성원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혐의들은 일부 혐의가 “유령 사건”으로, 피고인이 “혐의가 발생했을 때 사망했거나, 해외에 있었거나, 입원 중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Human Rights Watch, 2018b, 4; Mostofa & Subedi, 2020, 15). 이러한 BNP

에 대한 공격은 소외된 반대 정당이 집권당인 AL에 의해 제거되는 방식이다. 강력한 반대 정당의 부재는 정당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동적으로 사실상의 일당 체제로 이어진다(Mostofa & Subedi, 2020, 16).

국내 정치 내에서 취약한 ‘견제와 균형’은 권위주의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된다. 그 예로는 2018년 디지털 보안법과 헌법 제16차 개정안을 들 수 있다. 우선, 2018년 디지털 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내 법적 체계이다. 해당 법은 이전의 ICT 법보다 훨씬 위험하며, 언론인, 지식인 및 시민 사회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궁극적으로 제한하는 방위군에 훨씬 더 무제한적인 권한을 제공한다(Hasan, 2018). 해당 법 제정 후 약 3개월 동안 63명이 소셜 미디어에서 총리, 그녀의 아버지 및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으로 체포되었다(Rashid, 2019). 해당 법은 AL과 총리가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서사를 형성하는 데 더 많은 수단을 제공한다.

둘째로, 헌법 제16차 개정은 사법부와 지방 정부 선거 제도에 대한 통제를 통해 AL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력 분립을 더욱 왜곡시켰다. 방글라데시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의회의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의회는 제16차 개정을 통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자리매김했다 (Mostofa and Subedi 2020, 17). 헌법 제48조 3항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위원회가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하며, 대통령은 총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더욱이 법무부는 “판사의 임명, 승진 및 전보”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Sobhan 2017). 이처럼 사법부의 독립성은 의회와 총리의 통제를 통해 꾸준히 침해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제16차 개정안은 새로운 선거 정책에 따라 정당만이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 정부 선거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지명 제도는 “제도화된 후원 정치”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후보자의 정치적 성과보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우선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Mostofa and Subedi 2020, 18). 지방 정부 선거 제도의 변화는 하향식 대표성 강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엘리트 게임”을 조장한다 (Mostofa and Subedi 2020, 18). 이러한 맥락에서, 방글라데시 국내 정치는 야당 탄압과 박해, 언론 자유 제한, 사법부의 낮은 자율성, 그리고 지방 정부 정치의 후원주의를 통해 야기되는 반대세력의 공백과 왜곡된 권력 분립으로 설명될 수 있다.

2) 내러티브

방글라데시의 국내 정치 환경은 로힝야 관련 내러티브를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며, 이는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로힝야 난민 상황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반영한다.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서사는 2017년 4월 6일부터¹³⁾ 2017년 12월 31일까지 방글라데시 국영 통신사인 방글라데시 상바드 상스타(BSS)에서 “로힝야”라는 용어를 검색하여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BSS는 정부 소유이며, BSS의 편집장은 하시나 총리의 전 언론 비서관인 아불 칼람 아자드로, 이는 정부가 형성한 미디어 내러티브를 합리적으로 대변한다(BSS 2021b). 93개의 기사 중 반복되는 기사와 국제 뉴스를 제외한 61개의 기사를 분석했으며, Ehmer와 Kothari(2020)가 설정한 네 가지 범주에 따라 분류했다.

<표 4> 내러티브 분석 (각 범주별 기사 수)

범주	설명	2017년 4월 6일 - 2017년 8월 24 일	2017년 8월 25일 - 2017년 12월 31일	합계
‘고정관념’	로힝야 난민을 불법 이민자 또는 범죄자로 묘사한 기사	1	0	1
‘지역/인도주의 내러티브’	정부와 시민 사회가 로힝야 난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참여를 다룬 기사	1	30	31
‘주권/국경 내러티브’	정부의 국경 통제 및 난민들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을 다룬 기사	1	1	2
‘국제/지역 내러티브’	로힝야 난민 상황을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다룬 기사	2	28	30

출처: BSS (2021a), 저자

말레이시아와 유사하게, 로힝야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지역 및 국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서사가 주로 다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인도주의적 서사” 및 “국제/지역적 서사”에 관한 기사들 중에서 하시나 총리가 “인류의 어머니”와 “동방의 새로운 별”로 묘사되며 명

13) BSS의 아카이브는 2017년 3월 20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로힝야에 관한 기사는 2017년 4월 6일부터 시작된다 (BSS 2021a).

시적으로 칭송받았다는 것이다(BSS 2017a). 이는 난민 상황에서 흔히 사용되는 서사이다(Lewis 2019; Ehmer and Kothari 2020; Brooten 2015; BAL 2020b). 많은 기사들이 국제 사회가 그녀의 노력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로힝야 난민에 대한 총리의 노력을 부각했다.

소수의 기사만이 로힝야와 종교적 신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방글라데시 국민에게 호소하기보다는 난민의 상황에 호소했다(BSS 2017c). 로힝야 난민과 관련하여, 난민들의 처참한 상황이 강조되는 한편 아웅산 수치와 미얀마는 악마화되었다. 미얀마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야당인 BNP의 무대응 또한 몇몇 기사에서 야당 지도자가 “로힝야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며 언급되었다(BSS 2017b). 또한 위기 관리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모든 것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Lewis 2019, 1896). 이러한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지배함으로써 정부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난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홍보할 수 있었다.

정부와 AL이 이러한 내러티브를 지배하려는 전략으로 인해 로힝야 난민 상황 관리와 국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2018년 총선에서 완전한 승리에 기여했다(DW 2018). 선거에서 집권 연합은 298석 중 288석(AL 258석, 자티야당 22석)을 확보하여 96%의 지지를 얻었으며, BNP와 그 동맹은 단 7석만을 얻었다(Safi et al. 2018). 2014년 이전 총선과 비교하면 AL은 당시 234석에서 24석을 추가로 확보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5, 7). 2018년 5월 국제공화연구소(IRI)의 전국 조사에 따르면 66%가 하시나 총리를 지지했으며, 64%가 정부를 지지했다(IRI 2018, 7). 실제로 2018년 선거의 성공과 높은 지지율은 정부가 만든 내러티브 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힝야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정부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다(DW 2018).

그러나, 이러한 서사들에서 관찰되지 않는 것은 유입되는 난민이 “폭력적이고, 범죄자이며, 불법적인 외부인”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난민 서사였다 (Ehmer and Kothari 2020; Brooten et al. 2015; Kaur 2007; Siddiquee 2019). 가장 널리 퍼진 난민 내러티브가 배제된 것은 불규칙하지만 지속적인 유입의 역사가 비교적 긴 국가에서는 이례적이다.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내러티브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내 정치 내의 정치적 투쟁이 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한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국내 정치를 통해 야당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로힝야 관련 프레임을 지배할 수 있는 더 큰 재량을 확보했다. 2017년부터

방글라데시의 난민 상황에 대한 관리와대표는 2018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정부가 정치적 재량을 통해 위기를 정치적 이점으로 전환하면서 궁극적으로 방글라데시가 로힝야 난민을 수용하게 된 것은 집권당의 정치적 재량 덕분이었다.

4.2.2 말레이시아

국내 정치 환경을 직접적으로 연구하기 전에, 말레이시아의 양면적인 입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독특한 국가적 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유입되는 로힝야 난민에 대한 입장은 양면적이다.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개방적이지 않으면서도 난민의 처참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자주 표명한다. 흥미로운 점은, 말레이시아의 다민족성은 말레이시아 국내 정치의 양면성과 정부의 양면적인 입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민족, 종교, 정치가 공식적으로 얹혀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Dev 2009, 39). 다시 말해, 민족과 종교 모두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Lemière 2018, 40). 대부분의 연립 정당은 명시적으로 민족 기반 또는 종교 기반이다(Dev 2009, 39). 정부의 경우, 정부 정책은 말레이시아 인구의 약 67.4%를 차지하는 말레이 무슬림 다수를 선호하도록 설계되었다(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Official Portal 2015). 그러나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말레이시아는 각 개인이 자신의 민족 집단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기보다는 말레이시아 정체성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왔다(Dev 2009, 40). 따라서 역대 정부는 종종 “말레이시아 사회의 깨지기 쉬운 인구 통계학적 균형의 보호자”가 되기를 주장하고 “국가 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Lemière 2018, 40; Dev 2009, 40).

요컨대, 말레이시아의 다민족성은 국내 정치의 양면성을 형성했다. 정부의 생존을 위해 말레이 무슬림으로부터 다수표를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의 말레이시아”를 목표로 해야 한다. 말레이 무슬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로힝야 무슬림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우려를 보여주어야 했다. 동시에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통합된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난민 수용을 피했다. 정부의 입장은 집권 정부의 생존 노력을 통해 더욱 고정되었으며, 이는 더욱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1) 국내정치

나집 라작이 이끄는 집권 BN 연합은 이미 가장 작은 다수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취약한 상태였다(Lemière, 2018, 40).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BN 연합은 독립 이후 집권당이었으며, 이는 정부에 대한 오랜 기간의 대중적 지지를 의미했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총리는 두 건의 정치 스캔들에 연루되어 BN 연합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2015년에는 1Malaysia Development Berhad의 국영 투자 펀드 관리 부실 의혹인 “최대의 글로벌 금융 스캔들”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Welsh, 2020, 45). 2017년에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말레이시아 방위에 부적합한 프랑스 회사 간의 무기 거래와 관련된 또 다른 스캔들에 총리가 연루되었다(Lemière, 2018, 41). 이러한 스캔들과 함께 강력한 야당 지도자인 모하메드 마하티르의 등장은 나집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더욱 흔들었다.

2016년, 마하티르가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에서 사임하면서 야당 연합에 합류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치 지형은 극적으로 변화했다(Welsh, 2020, 45; Lemière, 2018, 43). 마하티르는 1981년부터 2003년까지 UMNO 지도자로서 총리를 역임했으며, 종종 독재자로 묘사되었다(Lemière, 2018, 43). 그러나 그는 UMNO에서 사임하고 자신이 한때 탄압했던 야당 연합에 합류했다(Lemière, 2018, 43). 그 이후로 마하티르는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과거를 지우고 말레이시아인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는 일련의 평화 시위인 “Bersih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는 나집의 부패한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기회였다(Holmes, 2015; Paddock, 2016). 마하티르는 자신의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를 인정함으로써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옹호자”로 재포지셔닝하려 했다(Lemière, 2018, 43). 마하티르의 행보는 성공적이었으며, 그의 연합 구성원들은 결국 새로운 연합인 파카탄 하라판(PH)을 결성하는데 동의했다(Welsh, 2020, 45-6; Lemière, 2018, 43). 강력한 야당 지도자는 나집의 집권 정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약화된 BN 연합은 부패 의혹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말레이 무슬림의 표를 얻는 데 필사적이었다(Hutt, 2016). 집권 연합의 생존을 위해 정부는 로힝야 난민 상황라는 인종 및 종교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난민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2015년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임기를 통해 라작 총리는 로힝야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얀마의 실패를 비판했다(Waikar et al., 2019, 16). 2016년 라작 총리는 미얀마 정부가 말레이시아가 미얀마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것에 대응하여 위기에 대한 공개 집회를 조직했다(Hutt, 2016). 집회에서 총리는 미얀마의 로힝야 박해를 집단 학살로 묘사하고 아웅산 수치의 실패를 명시적으로 비판했다(Hutt, 2016; Waikar et al., 2019). 2017년 군사적 탄압 이후 라작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 회담을 통해 총리는 로힝야 난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할 수 있었다(Lemière, 2018, 44).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로힝야 난민들이 국경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다. 게다가 이미 불안정한 민족 균형을 악화시키는 것은 불법 이민자, 망명 신청자 및 난민이다(Dev, 2009, 40). 정부는 난민과 불법 이민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원치 않는 “외국인”이다(Dev, 2009, 40). 흥미롭게도, 외국인의 “타자화”는 말레이시아의 민족 균형과 국가 건설을 촉진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난민 수용을 꺼려했다.

요약하면, 취약한 집권 연합은 정치 스캔들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었고, 강력한 야당 연합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국내 반대를 야기했다. 말레이시아의 다민족적 특성과 함께 정부의 취약한 입지는 정부가 친난민 서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제한했다.

2) 내러티브

말레이시아의 국내 정치 환경은 로힝야 관련 서사가 다양하고 폭넓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에머와 코타리(2020)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더 스타”에 실린 기사에서 “로힝야”라는 용어를 검색하여 난민 관련 서사를 분석했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영어 신문 중 하나로 정부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더 스타”에서 검색된 기사는 <표 5>에 설명된 네 가지 범주로 분석되었다. 에머와 코타리(2020)의 프레임워크를 빌려, 나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더 스타”에서 “로힝야”라는 용어를 검색한 결과 877개의 기사를 얻었다. 반복되는 기사, 국제 및 지역 뉴스를 제외하고 135개의 기사를 네 가지 범주에 따라 분석했다.

<표 5> 내러티브 분석 (각 범주별 기사 수)

구분	설명	2017년 1월 1일 - 2017년 8월 24일	2017년 8월 25일 - 2017년 12월 31일	합계
‘고정관념’	로힝야 난민을 불법 이민자 또는 범죄자로 묘사한 기사	9	6	15
‘지역/인도주의 내러티브’	로힝야 난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참여를 다룬 기사	22	41	63
‘주권/국경 내러티브’	정부의 국경 통제 및 난민들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을 다룬 기사	7	4	11
‘국제/지역 내러티브’	로힝야 난민 상황을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다룬 기사	21	39	60

출처: The Star (2021), 저자

수용 국가에 대한 구성된 서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로힝야 위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강조하는 방글라데시와 유사하다. 방글라데시와 다른 점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민법의 강력한 집행자(Ehmer and Kothari 2020, 5)”라는 서사를 통해 정부가 들어오는 난민들을 무모하게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난민과 경제 이민자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헌신을 강조하면서 지역 및 국제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호소도 강조되었다. 로힝야 난민에 대한 서사는 양면적인 견해를 포함한다. 한편으로는 난민들이 불법 이민자이거나 가짜 UNHCR 카드를 소지한 개인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2017년 군사적 탄압 이후 방글라데시의 서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난민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강조하기 위해 동정적인 어조로 반영된다.

내러티브는 로힝야 난민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의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서사는 말레이시아 대중의 ‘적대감’과 지역 정당의 의혹을 조장하도록 형성되어 있다(Dev, 2009, 40). 앞서 언급했듯이 말레이시아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은 난민 관련 서사에서 흔히 볼 수 있듯

이 집단 정체성으로 불법적인 존재로 간주된다(Dev, 2009, 46). 말레이시아 정부는 난민을 다른 불법 이민자와 구별하기를 꺼려하며, 모든 난민을 일반적으로 “똑같은” 불법 이민자이자 “범죄자”로 간주한다(Dev, 2009, 47). 실제로 2019년 입소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의 24%만이 난민을 일반적으로 진정성 있는 난민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난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말레이시아에 와서 말레이시아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믿는다(Ipsos, 2019). 또한, 난민의 존재는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안정에 위협을 가하므로 난민은 시민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권리와 함께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진다(Dev, 2009, 46).

이러한 결과는 가설 2를 뒷받침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났듯,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의 뚜렷하게 다른 국내 정치 환경은 위기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 설정을 야기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약한 야당으로부터의 국내 반대가 적었기 때문에 집권 정부는 더 큰 정치적 재량을 가질 수 있었고, 따라서 정부에 유리한 내러티브를 형성할 수 있었다. 난민을 고통받는 사람으로, 관리들을 영웅으로 프레임하는 정부의 전략은 선거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이익을 얻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치적으로 취약하여 문제 프레임을 주도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가 로힝야 난민을 더 잘 수용하게 된 것은 위기 전반에 걸쳐 집권 정부가 누렸던 정치적 재량 때문이었다.

.<표 6> 연구 결과 요약

이론적 동기 변수	조작적 정의	사례	예상	연구결과
1. 경제적 인센티브	1)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정 또는 합의	방글라데시	O	X
		말레이시아	X	X
	2) 로힝야 난민(RR)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방글라데시	O	O, 제한적
		말레이시아	X	X

2. 현 정부의 정치적 재량	1) 정치적 경쟁	방글라데시	강한 여당과 약한 야당 → 낮은 경쟁
		말레이시아	약한 여당과 강한 야당 → 높은 경쟁
	2) 로힝야 난민에 대한 미디어 내러티브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 내러티브의 약한 존재
		말레이시아	의심과 적대감 내러티브의 존재

출처:저자

5. 결론

로힝야 난민 상황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장기화된 난민 상황은 인접 국가인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가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들을 강제로 송환하게했다. 그러나 두 국가의 입장은 2017년 군사적 탄압, 즉 소위 “민족 청소의 교과서적 예(UN News, 2017)” 이후로 분기되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들을 콕스 바자르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을 환영했다. 방글라데시와 달리 말레이시아 국경은 폐쇄된 상태를 유지했고 정부는 난민에 대한 더 제한적인 수용 정책을 추구한다.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의 상이한 대응은 ‘무엇이 방글라데시를 로힝야 난민에게 더 수용적으로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제시된 두 가지 설명 중 본 연구결과는 경쟁이 적어 더 큰 정치적 재량을 누리는 정부가 난민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두 번째 설명을 지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방글라데시의 권위주의 정부가 더 개방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약한 국내 정치적 반대 때문이었다. 정치적 경쟁이 적었기 때문에 정부는 난민 관련 내러티브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위기 관리의 조정과 대표성을 통제했다. 정부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위기 관리는 2018년 총선에서 역사적인 승리에 기여했다. 반대로 강력한 국내 반대에 직면한 말레이시아는 난민을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약한 집권당과 강력한 야당을 포함한 강력한 국내 정치적 반대는 주최 정부가 난민 관련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것을 제한했다.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 개방 수용이 위기를 정치적 이점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능력에 의해 주도된다는 본 연구결과는 다소 침울한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방글라데시의 개방 수용 정책은 로힝야 난민 상황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될 때 정부는 언제든지 공포와 적대감의 서사를 조장하고 문제 프레임을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현재의 개방 수용 정책을 철회하고 1990년대의 제한적인 입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정치적 반발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2020년 12월 이후 “콕스바자르 난민 캠프의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로힝야 난민을 “외딴,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섬”으로 재배치했기 때문에 개방 수용 정책이 정착한 난민에 대한 관대한 지원 및 통합 정책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Barron, 2020). 이 연구는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 간의 상이한 수용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데 그쳤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두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난민 정책의 다른 주요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Acharya, Amitav. 2001.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 Ahmed, Kaamil, and Rebecca Ratcliffe. 2020. "Rohingya face 'cruel' caning sentence in Malaysia as hostility to refugees grows." *The Guardian* (July 21). Accessed at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jul/21/rohingya-face-cruel-caning-sentence-in-malaysia-as-hostility-to-refugees-grows> (January 13, 2021).
- Al Jazeera. 2020. "Unwanted: Bangladesh, Malaysia reject rescued Rohingya refugees." *Al Jazeera* (June 10). Accessed at <https://www.aljazeera.com/news/2020/6/10/unwanted-bangladesh-malaysia-reject-rescued-rohingya-refugees> (July 10, 2020).
- Alix-Garcia, Jennifer. 2007. "The Effect of Refugee Inflows on Host Country Populations: Evidence from Tanzania." *Working Paper Series: University of Montana*. Accessed at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836147 (July 10, 2020).
- Antara, Nawaz. 2018. "BNP: Ballots Boxes Getting Stuffed at Dhaka 4, 9, 14 Constituencies." *Dhaka Tribune* (December 30). Accessed at <https://www.dhakatribune.com/bangladesh/election/2018/12/30/bnp-ballots-boxes-getting-stuffed-at-dhaka-9-14-constituencies> (October 24, 2020).
- AP News. 2017. "The Latest: Indonesia sends 34 tons of aid for Rohingya." *AP News* (September 13). Accessed at <https://apnews.com/article/23feacae668b40d892f75ab986629585> (August 30, 2020).
- Bangladesh Awami League (BAL). 2017a. "HPM Sheikh Hasina seeks support for relocating Rohingyas." *BAL*. Accessed at <https://www.albd.org/articles/news/28797/HPM-Sheikh-Hasina-seeks-support-for-relocating-Rohingyas> (December 2, 2020).
- _____. 2017b. "HPM Sheikh Hasina seeks Indonesia's role in solving Rohingya issue." *BAL*. Accessed at <https://www.albd.org/articles/news/28797/HPM-Sheikh-Hasina-seeks-sup>

port-for-relocating-Rohingyas (December 2, 2020).

_____. 2017c. “HPM Sheikh Hasina and Palestine President discusses Rohingya issue.” *BAL*. Accessed at <https://www.albd.org/articles/news/29006/HPM-Sheikh-Hasina-and-Palestine-President-discusses-Rohingya-issue> (December 2, 2020).

_____. 2017d. “HPM Sheikh Hasina urges IOM to pressure Myanmar to take back Rohingyas.” *BAL*. Accessed at <https://www.albd.org/articles/news/29010/HPM-Sheikh-Hasina-urges-IOM-to-pressure-Myanmar-to-take-back-Rohingyas> (December 2, 2020).

_____. 2017e. “Myanmar must stop violence in Rakhine immediately and forever: HPM Sheikh Hasina at UNGA.” *BAL*. Accessed at <https://www.albd.org/articles/news/31214/Myanmar-must-stop-violence-in-Rakhine-immediately-and-forever-HPM-Sheikh-Hasina-at-UNGA> (December 2, 2020).

_____. 2017f. “Finance Minister seeks UN’s support to create ‘Safe Zone’ to solve Rohingya crisis.” *BAL*. Accessed at [https://www.albd.org/articles/news/31211/Finance-Minister-seeks-UN’s-support-to-create-‘Safe-Zone’-to-solve-Rohingya-crisis](https://www.albd.org/articles/news/31211/Finance-Minister-seeks-UN-s-support-to-create-Safe-Zone-to-solve-Rohingya-crisis) (December 2, 2020).

_____. 2020a. “*BAL*.” Accessed at <https://www.albd.org/> (October 26, 2020).

_____. 2020b. “Sheikh Hasina: Daughter of Democracy and Herald of Change. Special Articles.” *BAL*. Accessed at <https://www.albd.org/articles/news/31112/Sheikh-Hasina-Daughter-of-Democracy-and-Herald-of-Change> (September 5, 2020).

Bangladesh Sangbad Sangstha (BSS). 2017a. “Cabinet approves Health Development Surcharge Management Policy.” *BSS* (October 17). Accessed at www.bssnews.net/?p=5651 (January 13, 2021).

_____. 2017b. “People will reply to falsehood of Khaleda in next polls: Nasim.” *BSS* (November 11). Accessed at www.bssnews.net/?p=7165 (January 13, 2021).

_____. 2017c. “Durga Puja begins tomorrow amid festivity.” *BSS* (September 25). Accessed at www.bssnews.net/?p=5067 (January 13, 2021).

_____. 2021a. Accessed at <http://www.bssnews.net> (January 13, 2021).

- _____. 2021b. “Managing Director and Chief Editor’s Profile.” BSS. Accessed at http://www.bssnews.net/?page_id=556 (January 13, 2021).
- Barron, Laignee. 2020. “Bangladesh Begins to Relocate Rohingya Refugees to Flood-Prone Island.” *Time* (December 3). Accessed at <https://time.com/5917334/bangladesh-rohingya-relocation-island/> (March 8, 2021).
- BBC. 2021. “Malaysia deports Myanmar nationals despite court order.” *BBC News* (February 24). Accessed at <https://www.kjis.org/authors/sub01.html> (March 5, 2021).
- Bijleveld, Catrien, and A.P. Taselaar. 2000. “Motives for Asylum Seekers to Come to the Netherlands: Summary of an Expert Meeting.” *the Hague: Netherlands Ministry of Justice*. Accessed at <https://www.ojp.gov/ncjrs/virtual-library/abstracts/motives-asylum-seekers-come-netherlands-summary-expert-meeting> (December 3, 2020).
- Böcker, Anita, and Tetty Havinga. 1998. “Asylum Migration to the European Union: Patterns of Origin and Destination.” *Luxemburg: European Communities*. Accessed at <https://ssrn.com/abstract=2633536> (December 3, 2020).
- Brooten, Lisa. 2015. “Blind spots in human rights coverage: Framing violence against the Rohingya in Myanmar/Burma.” *Popular Communication*, 13(2), 132–144.
- Brooten, Lisa, Syed Irfan Ashraf, and Ngozi Akinro. A. 2015. “Traumatized victims and mutilated bodies: Human rights and the ‘politics of immediation’ in the Rohingya Crisis of Myanma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7(8), 717–734.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2020a. “The World Factbook Archive. Southeast Asia: Bangladesh.” CIA. Accessed at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g.html> (November 9, 2020).
- _____. 2020b. “The World Factbook Archive. Southeast Asia: Malaysia.” *CIA*. Accessed at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y.html> (November 9, 2020).
- Danish Refugee Council (DRC). 2017. “DRC Turkey: Mixed Migration Monthly Update.”

- DRC. Accessed at <https://reliefweb.int/report/turkey/drc-turkey-mixed-migration-monthly-update-april-2017> (August 15, 2020).
- Davies, Sara E. 2008. *Legitimizing Rejection: International Refugee Law in Southeast Asia*. Leiden, Netherlands: Brill.
- Day, Kate, and Paul White. 2002. "Choice or circumstance: The UK as the location of asylum applications by Bosnian and Somali refugees." *Geo Journal*, 56(1), 15–26.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Official Portal. 2015. "Population Distribution and Basic Demographic Characteristic Report." *The Source of Malaysia's Statistics*. Accessed at https://www.dosm.gov.my/v1/index.php?r=column/cthem&menu_id=L0pheU43NW-JwRWVSZklWdzQ4TlhUUT09&bul_id=MDMxdHZjWtk1SjFzTzNkRXYzcVZjd09 (November 31, 2020).
- Deutsche Welle (DW). 2018. Bangladesh election: Prime Minister Sheikh Hasina wins by landslide. *DW* (December 31). Accessed at <https://www.dw.com/en/bangladesh-election-prime-minister-sheikh-hasina-wins-by-landslide/a-46902833> (January 18, 2021).
- Dev, Sanjutta. 2009. "Accounting for state approaches to asylum seekers in Australia and Malaysia: The significance of national identity and exclusive citizenship in the struggle against irregular mobility."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16(1), 33–60.
- Ehmer, Emily, and Ammina Kothari. 2020. "Malaysia and the Rohingya: Media, Migration, and Politics." *Journal of Immigrant & Refugee Studies*. 1–15.
- European Commission. 2016. "Relocation and resettlement: EU member states urgently need to deliver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of European Commission*. Accessed at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829_en.htm (August 15, 2020).
- _____. 2019. "European Civil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id Operations: Thailand, Malaysia, and Indonesia." *European Commission*. Accessed at https://ec.europa.eu/echo/where/asia-and-pacific/thailand_en (November 6, 2020).

- European Council. 2016. "EU-Turkey statement, 18 March 2016." *European Council*. Accessed at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6/03/18/eu-turkey-statement/> (August 20, 2020).
- Fuller, Thomas, and Joe Cochrane. 2015. "Rohingya Migrants From Myanmar, Shunned by Malaysia, Are Spotted Adrift in Andaman Sea." *The New York Times* (May 14). Accessed at <https://www.nytimes.com/2015/05/15/world/asia/burmese-rohingya-bangladeshi-migrants-andaman-sea.html> (July 10, 2020).
- George, Alexander L. 1979.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The Method of Structured, Focused Comparison." In Paul Gordon Lauren ed., *Diplomacy: New Approaches in History, Theory, and Policy*, New York: Free Press, 43-68.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Georgiou, Myria, and Rafal Zaborowski. 2017. "Council of Europe report: Media coverage of the "refugee crisis": A cross-European perspectiv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Accessed at <https://edoc.coe.int/en/refugees/7367-media-coverage-of-the-refugee-crisis-a-cross-european-perspective.html> (September 6, 2020).
- Gilbert, Alan, and Khalid Koser. 2006. "Coming to the UK: What do Asylum- Seekers Know About the UK before Arrival?"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2(7), 1209–1225.
- Hasan, Rashidul. 2018. "Digital Security Bill Passed." *The Daily Star* (September 20). Accessed at <https://www.thedailystar.net/politics/bangladesh-jatiya-sangsad-passes-digital-security-bill-2018-amid-concerns-journalists-1636114> (April 20, 2020).
- Heck, Gerda and Sabine Hess. 2017. "Tracing the Effects of the EU-Turkey Deal The Momentum of the Multi-layered Turkish Border Regime." *Movements* 3(2), 35-56.
- Holmes, Oliver. 2015. "Malaysian police to question former PM Mahathir over anti-government rally." *The Guardian* (September 2). Accessed at [https:// www.theguardian.com/](https://www.theguardian.com/)

world/2015/sep/02/malaysian-police-question-mahathir-anti-government-rally-bersih (November 10, 2020).

Human Rights Watch. 2000. "Malaysia/Burma: Living in Limbo: Burmese Rohingya in Malaysia." *Human Rights Watch*. Accessed at <http://www.hrw.org/legacy/reports/2000/malaysia/index.htm> (May 20, 2020).

_____. 2018a. "Bangladesh Is Not My Country." *Human Rights Watch*. Accessed at https://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_pdf/bangladesh0818_web2.pdf (January 26, 2021).

_____. 2018b. "Creating Panic." *Human Rights Watch*. Accessed at https://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_pdf/bangladesh1218_web.pdf (September 5, 2020).

_____. 2020a. "ASEAN: Overhaul Regional Response to Rohingya Crisis." *Human Rights Watch*. Accessed at <https://www.hrw.org/news/2020/06/26/asean-overhaul-regional-response-rohingya-crisis> (August 4, 2020).

_____. 2020b. "World Report 2020: Malaysia (Events of 2019)." *Human Rights Watch*. Accessed at <https://www.hrw.org/world-report/2020/country-chapters/malaysia#5680cb> (December 20, 2020).

_____. 2020c. "Malaysia: Stop Treating Rohingya Refugees as Criminals." *Human Rights Watch* (July 22). Accessed at <https://www.hrw.org/news/2020/07/22/malaysia-stop-treating-rohingya-refugees-criminals> (March 5, 2021).

Hutt, David. 2016. "Najib's Dangerous and Self-Serving Rohingya Campaign." *The Diplomat* (December 24). Accessed at <https://thediplomat.com/2016/12/najibs-dangerous-and-self-serving-rohingya-campaign> (October 30, 2020).

Idris, Iffat. 2017. "Rohingya refugee crisis: impact on Bangladeshi politics." *4D Helpdesk Report 233 of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1-13.

Inter Sector Coordination Group (ISCG). 2017. "Bangladesh: Humanitarian Response Plan - Rohingya Refugee Crisis." *ISCG*. Accessed at <https://reliefweb.int/report/bangladesh/>

- bangladesh-humanitarian-response-plan-september-2017-february-2018-rohingya (September 18, 2020).
- _____. 2019a. “Joint Response Plan for Rohingya Humanitarian Crisis - Final Report (March-December 2018).” *ISCG*. Accessed at <https://reliefweb.int/report/bangladesh/bangladesh-humanitarian-response-plan-september-2017-february-2018-rohingya> (September 18, 2020).
- _____. 2019b. “2019 Joint Response Plan for Rohingya Humanitarian Crisis.” *ISCG*. Accessed at <https://reliefweb.int/report/bangladesh/2019-joint-response-plan-rohingya-humanitarian-crisis-january-december-enbn> (September 18, 2020).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5. “Mapping Bangladesh’s Political Crisis.” *Asia Report N.264 of International Crisis Group*. Accessed at <https://www.refworld.org/pdfid/54eb265b4.pdf> (September 26, 2020).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17. “Readmission.” *IOM*. Accessed at https://www.iom.int/sites/default/files/our_work/ODG/GCM/IOM-Thematic-Paper-Readmission.pdf (December 1, 2020).
- _____. 2020. “IOM Appeal: Humanitarian Support for Rohingya in Indonesia.” *IOM*. Accessed at <https://reliefweb.int/report/indonesia/iom-appeal-humanitarian-support-rohingya-indonesia-25-june-2020-30-june-2021> (October 20, 2020).
-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 2018. “National Survey of Bangladesh Public Opinion.” *IRI*. Accessed at https://www.iri.org/sites/default/files/september_2018_bangladesh_poll.pdf (September 5, 2020).
- Ipsos. 2019. “World Refugee Day 2019: A Malaysian Perspective.” *Ipsos*. Accessed at <https://www.ipsos.com/en-my/world-refugee-day-2019-malaysian-perspective>. (November 10, 2020).
- Jacobsen, Karen. 2002. “Can Refugees Benefit the State? Refugee Resources and African State building.”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40 (4), 577-96.

- Jati, Irawan. 2017. "Comparative Study of the Roles of ASEAN and the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in Responding to the Rohingya Crisis." *The Indonesian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1), 17-32.
- Kaur, Amarjit. 2008. "International Migration and Governance in Malaysia: Policy and Performance." *UNEAC Asia Papers* 22, 4-18.
- Kaur, Kiranjit. 2007. "Media reporting on refugees in Malaysia." *University of New England Asia Center, Asia Papers* 13, 8-12.
- Kiragu, Esther, Angela Li Rosi, and Tim Morris. 2011. "States of denial: A review of UNHCR's response to the protracted situation of stateless Rohingya refugees in Bangladesh." *UNHCR Policy Development and Evaluation Service (PDES)*. Accessed at <https://www.unhcr.org/4ee754c19.pdf> (July 20, 2020).
- Lemière, Sophie. 2018. "Inventing Malaysian Democracy: Najib's Tales and Stories."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39(1), 39-44.
- Lewa, Chris. 2001. "The Rohingya: Forced Migration and Statelessness." *Forced Migration in South Asian Region*. Accessed at https://www.burmalibrary.org/sites/burmalibrary.org/files/obl/docs/Rohingya.F-M%26Statelessness.htm#_edn1 (August 20, 2020).
- Lewis, David. 2019. "Humanitarianism, Civil Society and the Rohingya Refugee Crisis in Bangladesh." *Third World Quarterly* 40 (10), 1884-1902.
- Loescher, Gil, and James Milner. 2009. "Understanding the Challenge." *Forced Migration Review, Protracted Displacement* 33, 9-11.
- Mathew, Penelope, and Tristan Harley. 2014. "Refugee Protec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Fieldwork Report of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ccessed at <https://openresearch-repository.anu.edu.au/handle/1885/11662> (July 20, 2020).
- McAuliffe, Marie, and Dinuk Jayasuriya. 2016. "Do asylum seekers and refugees choose destination countries? Evidence from large-scale surveys in Australia, Afghanistan, Bangladesh, Pakistan and Sri Lanka." *International Migration* 54 (4), 44-59.

-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2019. "ASEAN should show true leadership on Rohingya, Myanmar." *Médecins Sans Frontières*. Accessed at <https://www.msf.org/general-assembly-asean-should-show-true-leadership-ro-hingya> (August 4, 2020).
- Milton, Abul Hasnat, Mijanur Rahman, Sumaira Hussain, Charulata Jindal, Sushmita Choudhury, Shahnaz Akter, Shahana Ferdousi, Tafzila Akter Mouly, John Hall, and Jimmy T. Efir. 2017. "Trapped in statelessness: Rohingya refugees in Bangladesh."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4 (8), 1-8.
- Mostofa, Shafi M. D., and D. B. Subedi. 2020. "Rise of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in Bangladesh." *Politics and Religion*, 1-29.
- Narine, Shaun. 2008. "Forty years of ASEAN: a historical review." *The Pacific Review* 21 (4), 411-429.
- Ng, Eileen. 2018. "Malaysia intercepts boat carrying Rohingya refugees." *AP News* (April 3). Accessed at <https://apnews.com/article/0b97687c533e4b039425553cf3c6e05d> (March 4, 2021).
- Ongpin, Patricia. 2008. "Refugees in Tanzania - Asset or Burden?" *Journal of Development and Social Transformation* 5, 37-8.
- Paddock, Richard. 2016. "Tens of Thousands of Protesters Call for Najib Razak, Malaysian Leader, to Resign."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9). Accessed at <https://www.nytimes.com/2016/11/20/world/asia/tens-of-thousands-of-protesters-call-for-najib-razak-malaysian-leader-to-resign.html> (November 10, 2020).
- Piromya, Kasit. 2020. "ASEAN Must Do More to Help the Rohingyas." *The Diplomat* (March 9). Accessed at <https://thediplomat.com/2020/03/asean-must-do-more-to-help-the-rohingyas> (August 4, 2020).
- Rashid, Muktadir. 2019. "63 People Held Since October." *The New Age* (January 15). Accessed at http://www.newagebd.net/article/61819/63-people-held-since-october?fbclid=IwAR0dRY9-NJJnrUgd3QJxZe6DVUFkpDEGiKMM6OxK_fN2hsN2OD9di237bL8

(April 20, 2020).

- Richmond, Anthony. 1993. "Reactive migra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refugee movements." *Journal of Refugee Studies* 6(1), 7–24.
- Rohmah, Ainur. 2017. "Indonesia sending humanitarian aid to Rohingya refugees." *Anadolu Agency (AA)* (August 13). Accessed at <https://www.aa.com.tr/en/asia-pacific/indonesia-sending-humanitarian-aid-to-rohingya-refugees/908815> (August 30, 2020).
- Rutinwa, Bonaventure, and Khoti Kamanga. 2003. "The Impact of the Presence of Refugees in Northwestern Tanzania." *Final Report of The Centre for Study of Forced Migration, University of Dar Es Salaam*.
- Rygiel, Kim, Feyzi Baban, and Suzan Ilcan. 2016. "The Syrian refugee crisis: The EU-Turkey 'deal' and temporary protection." *Global Social Policy* 16(3), 315-320.
- Safi, Michael, Oliver Holmes, and Redwan Ahmed. 2018. "Bangladesh PM Hasina wins thumping victory in elections opposition reject as farcical." *The Guardian* (December 31). Accessed a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dec/30/bangladesh-election-polls-open-after-campaign-marred-by-violence> (October 26, 2020).
- Sajjad, Tazreena. 2020. "As Bangladesh hosts over a million Rohingya refugees, a scholar explains what motivated the country to open up its borders." *The Conversation* (October 6). Accessed at <https://theconversation.com/as-bangladesh-hosts-over-a-million-rohingya-refugees-a-scholar-explainswhat-motivated-the-country-to-open-up-its-borders-133609> (November 30, 2020).
- Siddiquee, Md Abu Bakar. 2019. "The portrayal of the Rohingya genocide and refugee crisis in the age of post-truth politics."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Politics* 5(2), 89–103.
- Siddiqui, Zeba, Krishna N. Das, and Ruma Paul. 2018. "Ahead of Bangladesh vote, opposition says it faces a reign of terror." *Reuters* (December 28). Accessed at <https://www.reuters.com/article/us-bangladesh-election-violence-insight/ahead-of-bangladesh-vote-opposition-says-it-faces%20a-reign-of-terror-idUSKCN1OR0KO> (October 24, 2020).

- Slothuus, Rune, and Claes H. de Vreese. 2010. "Political Parties, Motivated Reasoning, and Issue Framing Effects." *The Journal of Politics* 72(3), 630-645.
- Sobhan, Raihan. 2017. "The case for an independent judiciary." *Dhaka Tribune* (August 13). Accessed at <https://www.dhakatribune.com/opinion/2017/08/13/case-independent-judiciary> (April 20, 2020).
- Sonmez, Pelin, and Hikmet Kirik. 2017. "Turkish-EU Readmission Agreement: The A Critique of EU-Turkey Migration Dialogue." *Security Strategies Journal* 13 (25), 1-26.
- Sukhani, Piya. 2020. "The Shifting Politics of Rohingya Refugees in Malaysia." *The Diplomat* (July 10). Accessed at <https://thediplomat.com/2020/07/the-shifting-politics-of-rohingya-refugees-in-malaysia> (August 30, 2020).
- Taylor, Edward, Mateusz Filipski, Mohamad Alloush, Anubhab Gupta, Ruben Irvin Rojas Valdes, and Ernesto Gonzalez-Estrada. 2016. "Economic impact of refuge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NAS) 113(27), 7449-7453.
- The Guardian. 2015. "Malaysia and Thailand turn away hundreds on migrant boats." *The Guardian* (May 14). Accessed a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5/may/14/malaysia-turns-back-migrant-boat-with-more-than-500-aboard> (July 10, 2020).
- The Star. 2017. "Immigration and agencies to watch for Rohingya refugees." *The Star* (September 12). Accessed at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17/09/12/immigration-and-agencies-to-watch-for-rohingya-refugees> (January 13, 2021).
- _____. 2021. Accessed at <https://www.thestar.com.my> (January 13, 2021).
-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3. "Back to where you once belonged. A historical review of UNHCR policy and practice on refugee repatriation." *UNHCR Policy Development and Evaluation Service (PDES)*. Accessed at www.refworld.org/docid/5226d8f44.html (March 3, 2021).
- _____. 2020a. "Figures at a Glance in Malaysia." UNHCR. Accessed at <https://www.unhcr.org/>

- figures-at-a-glance-in-malaysia.html (September 20, 2020).
- _____. 2020b. "Protection partner presence as of 31 October 2020." UNHCR. Accessed at <https://data2.unhcr.org/en/documents/details/83063> (November 18, 2020).
- _____. 2020c. "UNHCR Bangladesh/Operational Update External." UNHCR. Accessed at https://data2.unhcr.org/en/situations/myanmar_refugees. (November 1, 2020).
- _____. 2020d. "UNHCR Viewpoint: 'Refugee' or 'migrant' - Which is right?" UNHCR. Accessed at <https://www.unhcr.org/news/latest/2016/7/55df0e556/unhcr-viewpoint-refugee-migrant-right.html> (July 2, 2020).
- _____. 2020e. "Joint statement on protection at sea in the Bay of Bengal and Andaman Sea." UNHCR. Accessed at <https://www.unhcr.org/news/press/2020/5/5eb15b804/joint-statement-unhcr-iom-unodc-protection-sea-bay-bengal-andaman-sea.html> (November 10, 2020).
- UN News. 2017. "UN human rights chief points to 'textbook example of ethnic cleansing' in Myanmar." *UN News* (September 11). Accessed at <https://news.un.org/en/story/2017/09/564622-un-human-rights-chief-points-textbook-example-ethnic-cleansing-myanmar> (July 12, 2020).
-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2020. "Financial Tracking Service (FTS) Bangladesh: Rohingya Refugee Crisis 2017." OCHA. Accessed at https://fts.unocha.org/appeals/628/donors?order=group_name&sort=asc (June 10, 2020).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OHCHR). 2021. "UN Treaty Body Database." OHCHR. Accessed at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 (March 4, 2021).
- Vas Dev, Sanjugta. 2003. "Asylum in Africa: The emergence of the 'reluctant host'." *Development* 46(3), 113-118.
- Wahab, Andika, and Aizat Khairi. 2019. "Moving onward: Transnationalism and factors influencing Rohingyas' migration from Bangladesh to Malaysia." *Journal of Nusantara Stud-*

ies 4(1), 49-68.

Waikar, Prashant, Mohamed Nawab Mohamed Osman, and Rashaad Ali. 2019. "Dancing with the Ummah: Islam in Malaysia's foreign policy under Najib Razak." *The Pacific Review*, 1-29.

Welsh, Bridget. 2020. "Political Polarization in South and Southeast Asia: Old Divisions, New Dangers." *Report from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41-52.

Whitaker, Beth. 1999. "Changing opportunities: Refugees and host communities in Western Tanzania." *New Issues in Refugee Research Working Paper* 11. Accessed at <https://www.unhcr.org/3ae6a0c70.pdf> (October 12, 2020).

Yesmin, Sultana. 2016. "Policy towards Rohingya Refugees: A Comparative Analysis of Bangladesh, Malaysia, and Thailand." *Journal of the Asiatic Society of Bangladesh* 61(1), 71-100.

Yhome, Khriezo. 2018. "Examining India's Stance on the Rohingya Crisis." *ORF Issue Brief* 247, 1-16.